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242-01



대한민국정부



이전 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

##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

국정과제 추진 개요

국정과제 선정 과정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013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4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28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2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3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37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3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3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46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47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0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5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5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62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66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72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77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8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85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089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093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096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3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7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2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6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22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6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30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4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8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2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5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9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4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60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4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8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9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87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90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9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3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7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2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6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0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4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9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3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8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48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2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6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6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71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2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90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3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7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2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6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4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9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5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5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40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9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3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6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4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9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3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81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5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9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92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93. 북한 비핵화 추진 396
-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9
-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4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8
-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12
-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6
-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21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6
-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30
-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7
-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41
-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6
-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51
-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4
-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8
-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62
-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70
-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4
-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9
-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 협력 강화 481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5
-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488
-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490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4
-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8
-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02

## 01 국정과제 선정 과정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안)을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은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02 국정과제 체계

###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6개 실천과제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국정 비전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 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b>[약속01]</b>	<b>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b>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b>[약속02]</b>	<b>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b>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촉촉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b>[약속03]</b>	<b>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b>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26개)	<b>[약속04]</b>	<b>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b>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b>신산업통상전략</b>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b>신산업·신시장</b>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b>[약속05]</b>	<b>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b>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b>[약속06]</b>	<b>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b>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b>[약속07]</b>	<b>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b>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b>[약속08]</b>	<b>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b>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b>[약속09]</b>	<b>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b>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b>[약속10]</b>	<b>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b>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b>[약속11]</b>	<b>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b>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b>[약속12]</b>	<b>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b>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b>[약속13]</b>	<b>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b>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b>[약속14]</b>	<b>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b>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b>[약속15]</b>	<b>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b>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b>[약속16]</b>	<b>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b>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b>[약속17]</b>	<b>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b>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국정목표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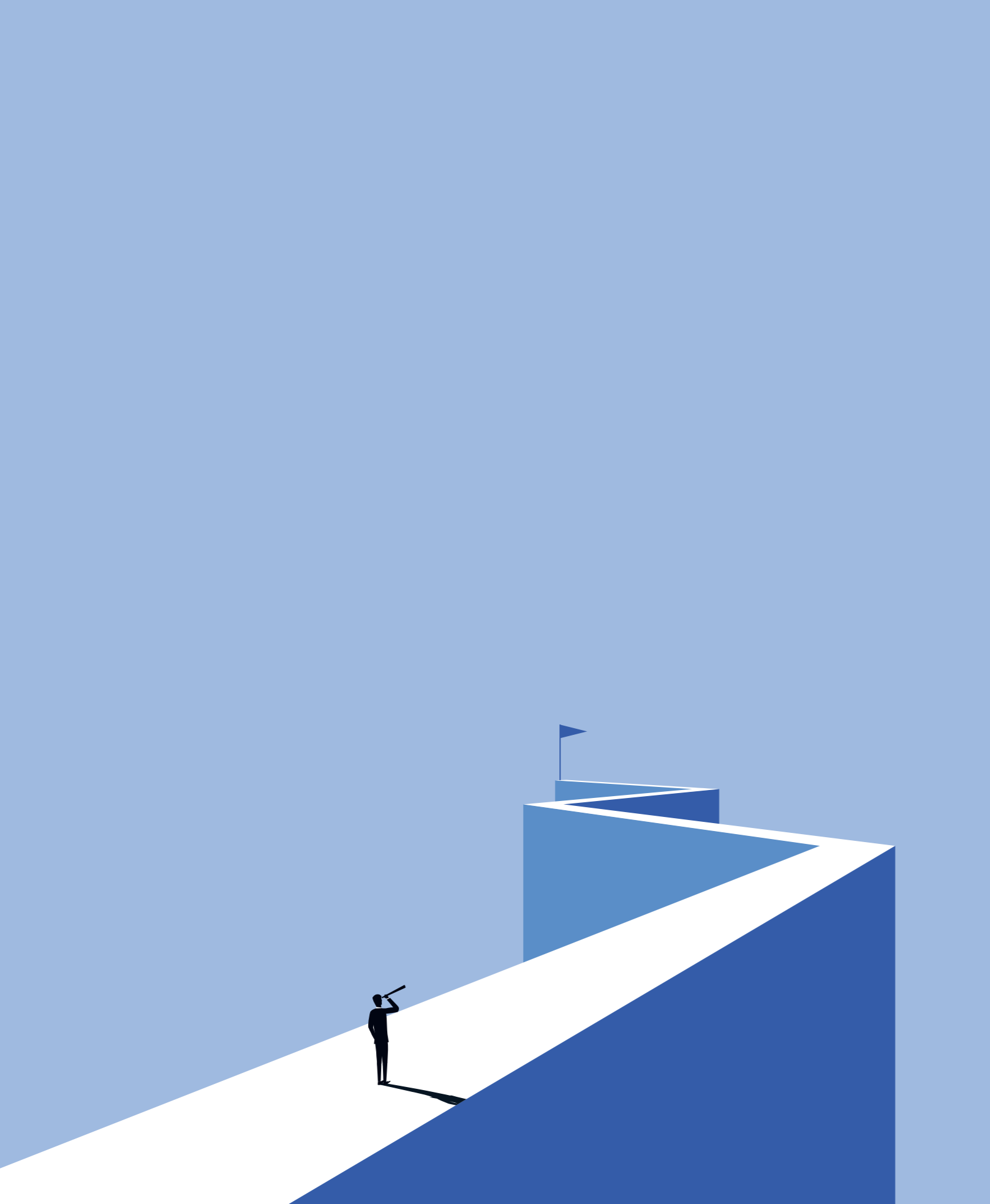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b>[약속18]</b>	<b>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b>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b>[약속19]</b>	<b>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b>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b>[약속20]</b>	<b>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b>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b>[약속21]</b>	<b>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b>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b>[약속22]</b>	<b>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b>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b>[약속23]</b>	<b>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b>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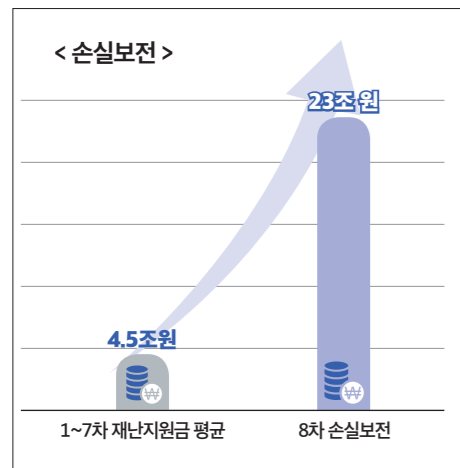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22조 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경영개선·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93.8%(684만개), 전체 고용의 43.8%(946만개)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큰 생존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융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경영 전망 : 악화(73.9%), 유지(17.2%), 개선(9.1%)
- 악화 이유 :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원가상승(20.3%), 금융비용 상승(19.3%)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전한 손실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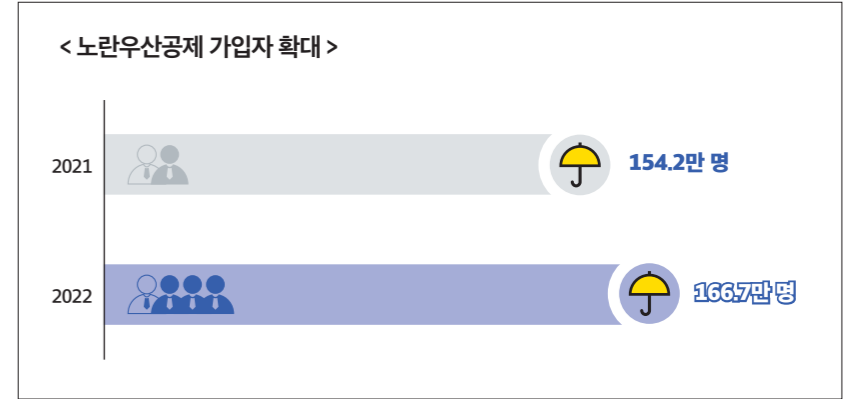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2조 6,28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373만개 업체(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7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 8조 2,000억원을 지급하여 개별 사업체의 손실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했



####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 수천만 원의 손실보상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동안의 적자가 해소되어 '경영위기 속 가뭄에 단비효과'라는 의견을 다수 게시, 위기 극복에 큰 기여



습니다.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가입자수가 166만 7,113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845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맞춤형 금융지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2022년 7월과 9월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통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앞으로도 2024년 말까지 누적 9조 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년까지 3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및 부실위험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교육, 자금(최대2,00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사업(238억원)을 2022년 신설하여 3,989건을 지원했습니다.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전(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확대(2021년

764억원 → 2022년 921억원)하여 총 5만 6,37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재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4,148명)의 30.1%(1,249명)가 업종전환과 재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미환급금 찾아주기로 1조 7,308억원(2,251개사, 2022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2022년 12월, 35개 법령)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유예하는 법령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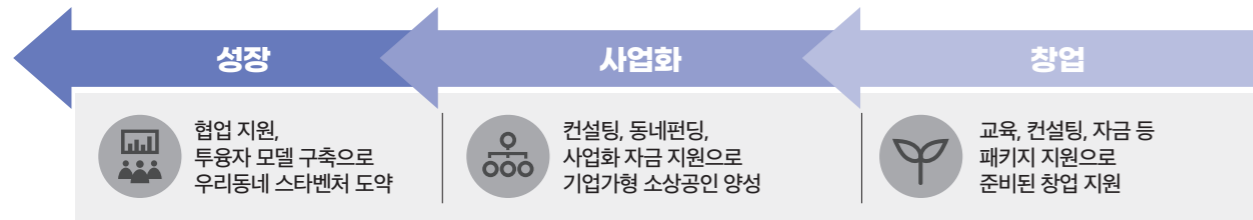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2022년 8월)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 소상공인 34곳을 선발해 스타트업·창업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3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매칭투자 등 성장단계별 투융자 시스템을 신규 구축(2023년, 430억원)하여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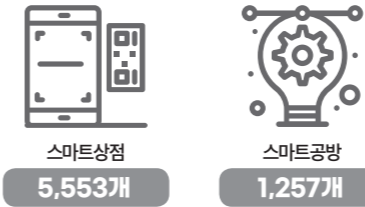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2022년, 17개)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의 생존율(85.6%)은 일반기업의 생존율(44.3%)의 2배에 달합니다.

향후 우수 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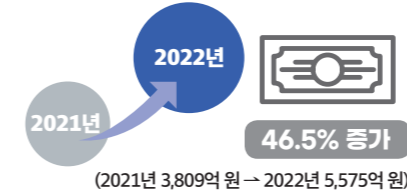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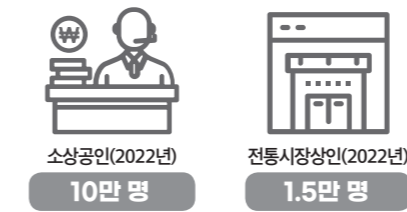
#### < 스마트 기술 보급 >



#### < 전통시장 디지털상품권 판매 >



#### < 온라인 판로 지원·디지털 역량 강화 >



##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공방'을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고도화했습니다.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판로 등 우대 지원

또한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5,55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1,257개사)하여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춘 상생형 모델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 중인 우수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표상점도 지정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통시장에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5,575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 할인 제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2022년 8만 3,000개 → 2024년 9만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채널 입점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상인 1만 5,000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석,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원사업 고도화·내실화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 10만개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170개사)하고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민간 참여가 강화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2023년 2월, 10억원, 10개소)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진단·치료, 백신접종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해외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양상이 계속 변화하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응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전 세계의 이동 증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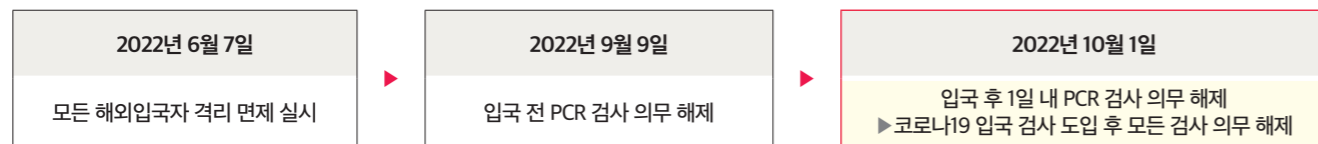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보호 체계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2022년 여름과 겨울철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한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일상적 관리체계에서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재유행과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2022년~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과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대비 관련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

#### < 코로나19 입국 관리 완화 >



#### < 접종 차수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2023년 3월 기준) >

구분	시작일	접종건수(건)	접종률(%)
1차 접종	2021년 2월 26일	45,259,652	87.6
2차 접종		44,808,051	86.8
3차 접종	2021년 10월 25일	33,743,898	65.7
4차 접종	2022년 2월 14일	7,601,114	60세 이상 44.3
동절기	2022년 10월 11일	6,587,859	60세 이상 35.3

#### < 60대 이상 치료제 투여율 및 중증화율 >



종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접종률을 제고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신속하게 국내 도입하여 투약했고, 먹는 치료제 2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처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백신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 심의지원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은 단축되고 심의율은 2021년 12월 19.2%에서 2022년 12월 85.7%로 66.5%p 증가하고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보상 지원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 < 피해보상 지원범위 확대 >



##### 지원금 상황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10개 주요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련성 의심질환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방역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 1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등 중증·사망 예방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통해 접종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백신접종 피해보상 정책의 국민 수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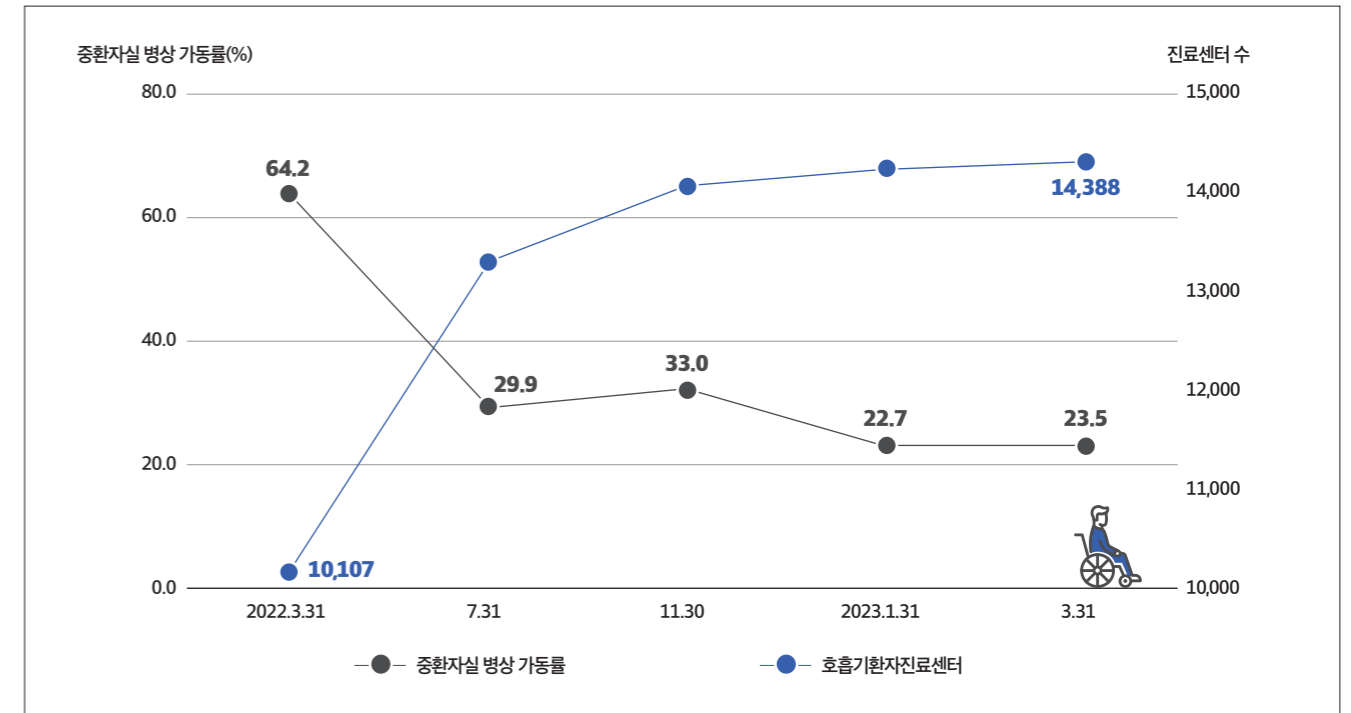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정부 대응 정책에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2022년 6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조정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여 의사결정 구조 기반 확립과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운영하여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체감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해외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 주제로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보건안보 국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치 가능 감염병인 결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등 분야별 대책을 2023년 3월과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핵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2022년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40명 이하를 달성(39.8명)했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글로벌조정(GHS)사무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입니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개소 수 추이 >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육성도 추진했습니다. 의대생 감염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대유행 시 중증병상에 투입할 간호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1,361명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음압·일반격리병상을 확충해 권역완결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어나가는 한편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으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 원전개발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은 탈원전의 긴 터널을 지나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공급산업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매출 28%, 수출 75%, 인력 16%가 감소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재개 결정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포함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2022년 9월 고리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2022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고,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활용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만료가 도래하는 추가원전(한빛 1·2,

한울 1·2, 월성 2·3·4)의 계속운전 절차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지 10기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기업에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생태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향후 10년간 원전산업계에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원전생태계에 조기 일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융자와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 동반성장대출 등 4,000억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우대와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지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저금리 지원 ▲탈원전 기간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신용대출 확대 ▲대출 심사 시 성장 가능성과 계약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 특화 등에서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신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원전산업 일감, 인력, R&D, 금융, 수출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상담 등 원전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1
- 2
- 3
- 4
- 5
- 6



## 원전의 수출산업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22년 8월 정부 뿐만 아니라 원전공업,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원전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전수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사업으로, 그간 일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사업에 우리나라 원전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란드 폰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양국 기업의 원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3개 특별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지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처분 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산정·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전망하고, 연구용역 공개 설명회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작·배포했습니다.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종합안내서인 <사필귀정>(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그리고 특별법 필요성과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소개한 소책자를 발간·배포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에서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핵심요소기술과 세부기술의 확보 현황 및 기술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기술분야를 검토중이며, 향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 Small Modular Reacto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원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하게 입지선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SMR 분야 독자 노형 확보를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담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에는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까지 경쟁력 있는 SMR 독자 노형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적기 진출 목표 달성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평풍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2022년 6~8월)하여 ‘수사준칙’ 개정 방안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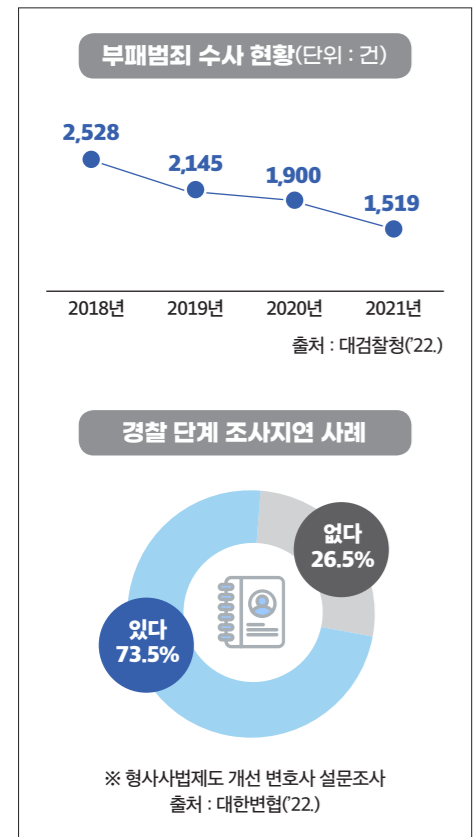
\* 고소·고발 접수 의무 명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명시, 검·경 간 보완수사 및 재수사 절차 합리화, 검·경 협력 활성화,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마련 등

###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검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2022년 9월 10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



##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국가채무비율(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 **관리재정수지(GDP%)**  
(2009년) △3.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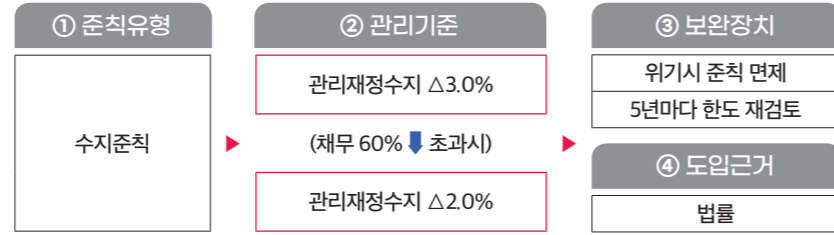
###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8월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했고,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과 2022~

**국제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 주요내용(2022.9월)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준수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노력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9월 20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3월 14일 재정준칙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3월 15일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5차례 개최하여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약 1조 3,000억원의 유휴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사용료 분납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12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2022년 11~12월 중 7회(제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전라권, 대구·경북, 강원권 등)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2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건의 100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고,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재정플랫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으로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정플랫폼(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보고서 형태로만 공개되었던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로 변환하여 제공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입 9.74조원	세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 분야 0.05조원
③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②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8.02조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3년 1월 3일)을 발표했고,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 성과지표란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핵심업무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말합니다. 올해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기준·방법의 내실화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2년 9월 13일)을 발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복지사업 평가기준 강화, 신속예타 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2023년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식)를 전면 개편하고, 결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결산 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적 활용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방송의 ESG 성과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정보,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에 KBS, EBS 경영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 EBS 주요 특화교육 프로그램 >

 <p>한글용사 아이야</p>	 <p>당신의 문해력 플러스</p>	 <p>번개맨과 안전맨</p>	 <p>EBS 스토리북</p>
<p>유아어린이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p>	<p>성인대상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p>	<p>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감형 프로그램</p>	<p>전래동화를 만화·웹툰으로 구현한 VR 프로그램</p>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2022년 12월)하여 공영방송이 환경보전과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EBS의 VR, XR 고품질·실감형 콘텐츠 등 5,971편에 대한 제작을 지원(298억원)했습니다. 제작지원 콘텐츠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등 15개 프로그램이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제55회 휴스턴 국제TV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했습니다.

### 공영방송 경영 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방송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분리 등 수신료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여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 역할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에 부합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채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여 방송의 공적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환경 보전·다양성 증진 등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등 체계적 주택공급 청사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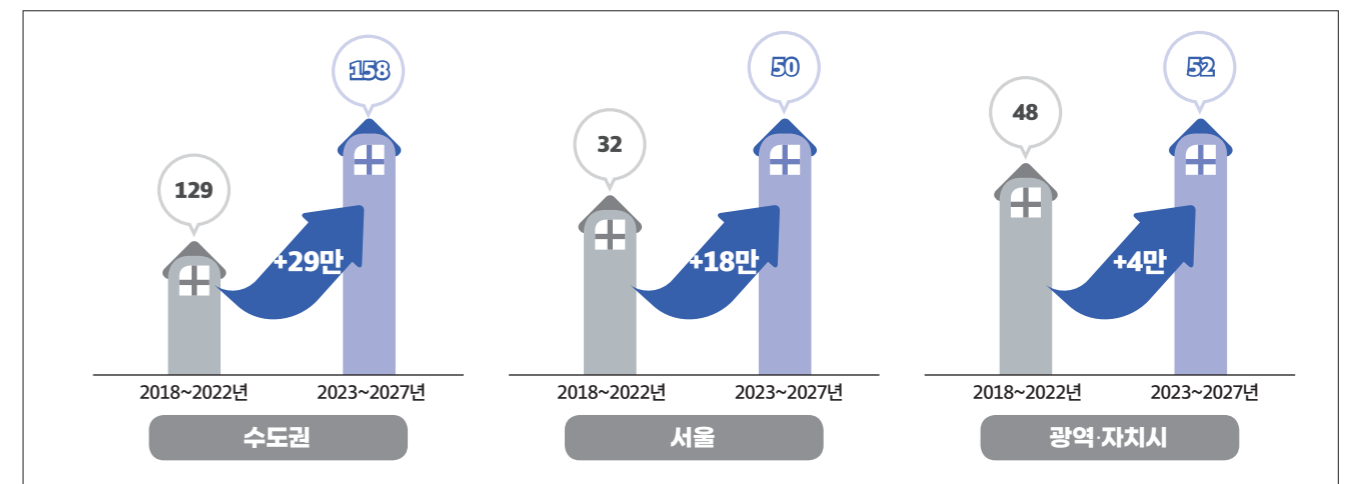
그동안 여러 주택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서민의 내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황 이동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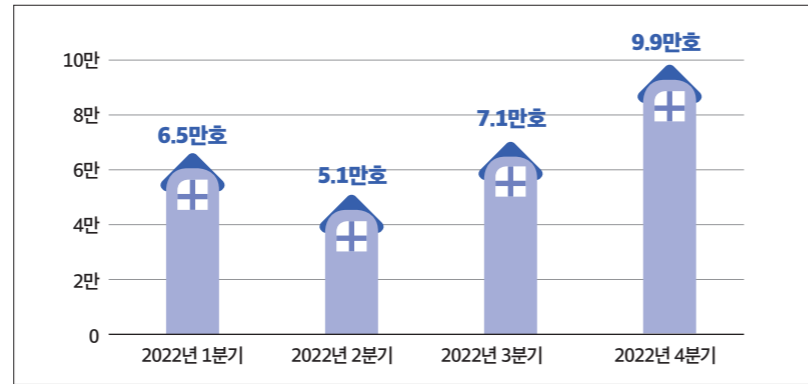
### 250만호+a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 전국 분양실적 >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부족했던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와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래도시 트렌드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10~50%) 및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2022년 7월말 기준)에 개선된 부과기준 및 개시시점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개정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뉴:홈(뉴:홈 사전청약 웹페이지) >



내 집 마련 시기 조기화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로드맵의 구체화 및 자금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50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 연평균 3만호에 못 미쳤던 공급량을 향후 5년간 총 50만호, 연평균 10만호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5,000호와 10만 2,000호에 그쳤던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은 6만호와 35만 6,000호로 각각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개인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분양가격과 지원 수준, 분양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고품질·우수입지·저렴한 가격의 뉴:홈을 조속히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서울 및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 2,298호 규모의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7,119건이 접수되어 2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공공택지 등 우수한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2022년 9월에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

##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하여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지방안'을 2023년 2월에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단속처벌 등 추진방안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약 1만 4,000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으며,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2022년 9월 28일)와 인천 부평구(2023년 3월 13일)에 이어 경기 수원시(2023년 3월 31일), 부산 진구(2023년 4월 3일)에도 개소했으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를 인하여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하게 증가된 국민 보유세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은 줄고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의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했고, 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b>폐지</b>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장특공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b>2년 거주요건 면제</b>
	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b>2년 거주요건 면제</b>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b>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b>	

## 월세세액공제를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에 대응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중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 50% 감면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토록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그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24만 9,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누리집과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Wetax)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택 취득비용 완화 등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불편해소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지급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비과세)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생략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생략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 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 경정 청구: (경정청구서 제출) 세 개월 후, (경정청구서 접수) 1개월 이내 개월
- 환급 여부 검토: 관공서 방문 방문
- 경정 결정: (경정청구서 접수) 1개월 후, (경정청구서 접수) 1개월 후

※ 기타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여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주택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앞으로도 가계대출 1,749조 3,000억원(2022년도 기준, 한국은행) 등 잠재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대출)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 ①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원 → 4.8억원(+33.3%↑)
- ②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원 → 1.2억원(△50%)

주택가격 6억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LTV 60)
2.4억원 필요	
▼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LTV 80)
1.2억원 필요	

##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146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6만 가구(2022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대로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174만호로 OECD 평균재고율 수준인 8%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간 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에 깨끗하고 넓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 물량의 86%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빌트인 품목을 개선하는 한편 마감재 재질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도 확대(16→32m<sup>2</sup>)합니다. 입주자의 수요를 반영한 창업·예술 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결합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공실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을 2022년 11월에 수립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화장실·부엌 등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또한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면 해체 후 신축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32만 가구보다 14만 가구가 많은 146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등으로 별도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황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약 1천호 증가한 7,000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

년에는 주거상황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하여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자복지주택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15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를 2023년에는 148개 단지까지 대폭 확대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놓여온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4년 시스템 구축, 2025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황 지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마스크앱·백신예약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나, 일회성으로 그쳐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민간의 혁신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46만개(2021.12월 기준) 공공데이터 중 14.8만개 개방(32%),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분야 개방률 10%대**  
- 2022년 2월 제4기 전략위 4차 회의 안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결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스크앱과 백신예약 시스템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청약홈이나 마이홈, 서울주거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분양·임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서비스’, ‘비대면 영상 기반 행정민

원 서비스’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공공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재난 대응 관련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현장 예방 대응 서비스’,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역민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아니키움 플랫폼 구축(전남 광양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참여형 가상공간 구축 및 교육강좌 돌봄센터 연계(경기 성남시)’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스마트화(충남 아산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대(2021년 1,056건→ 2022년 3,755건)하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2023년 3월)하여 기관의 별도 시스템 없이도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데이터의 공유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기반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용·재난 등 국가 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적시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여 788만명(2023년 3월 기준)이 이를 이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국민의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추천해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레일톡(앱), 정부24(웹)를 시범 개선하고, 2023년 2월 공공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기존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행정 효율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업 2023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와 민감정

보 보호를 위한 허브플랫폼 제공 등 데이터 자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의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공공·금융에서 의료·통신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확대(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022년 12월)하고, 행정 정보 종류도 확대(2021년 95종→2022년 159종)하여 학자금 신청, 계좌개설 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3억 5,000만건(2023년 3월 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교통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40종)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추가하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5종)’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2022.7월)되었습니다. 신분증 종류도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서비스·데이터가 만났습니다. 그간 공공의 앱·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시범서비스 6종(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을 선정(2022.9월)하여 2023년 개통을 위해 민간앱·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과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법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023~2025년)’, 민간서비스 발굴·개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2023년, ISP)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업·기관 100개 지원을 목표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2023년 3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건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 등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활용 기업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서울·강원에 이어 부산지역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현행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중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에 장착되는 이동형 영상 기기의 입법 미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율해왔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불안 발생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의 격차 발생
개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합리적 체계 정비	국민이 알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동의'	인적 개입 및 설명 요구 등 대응권 신설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조건 다양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법 중심으로 전환

##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부처별 '자율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2023년 3월 기준 총 314만 명이 방문했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여 총 32건의 국민제안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장기화된 사회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환경이 복잡 다원화되고 국제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유연한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가치 다원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를 마련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내각 운영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여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등 총 20회 개최(2023년 4월 6일 기준)

앞으로도 국민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2022년 7월). 32개 부처에서 46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에는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율기구제 대상기관 및 운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

기 위한 특례 확대 등 15개의 인사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채용 여건을 고려한 경제 기준 조정, 전보·과건 관련 불필요한 협의 폐지 등 인사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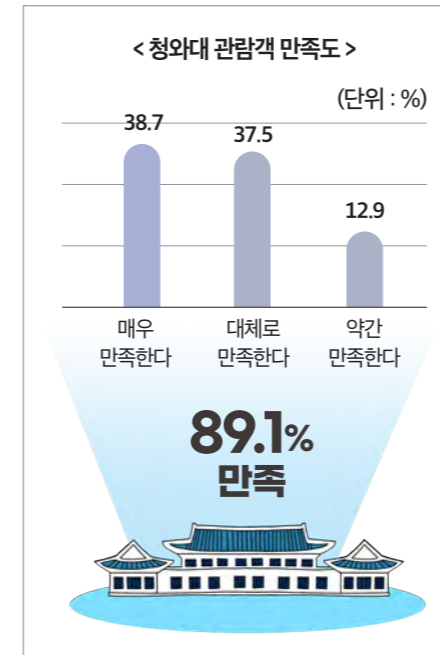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건립방안 기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집무실의 기능·규모·입지·건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청와대 국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공연·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2년 2월·5월·6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기존 개방 부지(장교숙소 5단지)의 경우, 미군 숙소 4개동 추가 리모델링\*을 통해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2022년에는 약 17만명이 방문했습니다.

\* (기존 6개동→10개동)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구분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3월
방문객 수	5,222명	66,250명	178,467명	38,600명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1차 17건(2022.12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차 15건(2023.4월)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 폐지(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2023년 1월), TV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3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주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022년 7월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5개월간 220여 차례 회의)을 통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주제로 16개 특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컨설팅(26회), 공무원 교육(41회)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합동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주요 개혁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예상 갈등 사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장기 공공갈등 이슈를 예측·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통합 가치가 도출·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증원 없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위인설관형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을 둘러싼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73개가 증가했으나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로 다른 행정적·사회적 기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3대 가치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개선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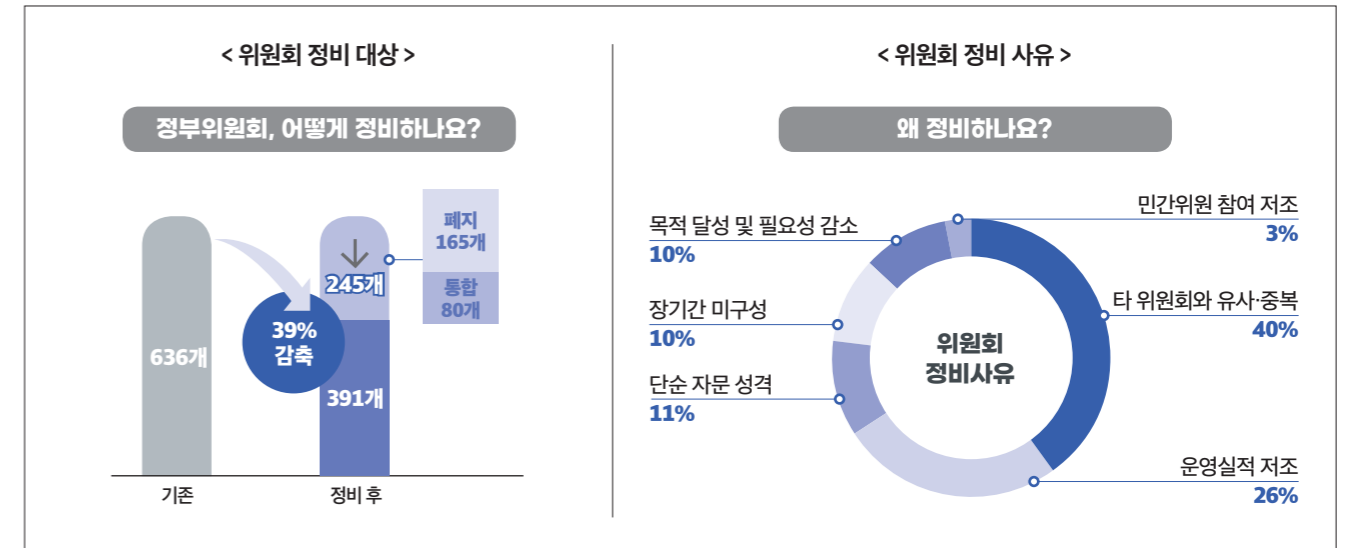
###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5,500여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더불어 행안부 업무보고(2023년 1월), 국무회의(2023년 2월) 시 형식주의 타파·성과주의 확산·서비스 혁신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 공감대를



확산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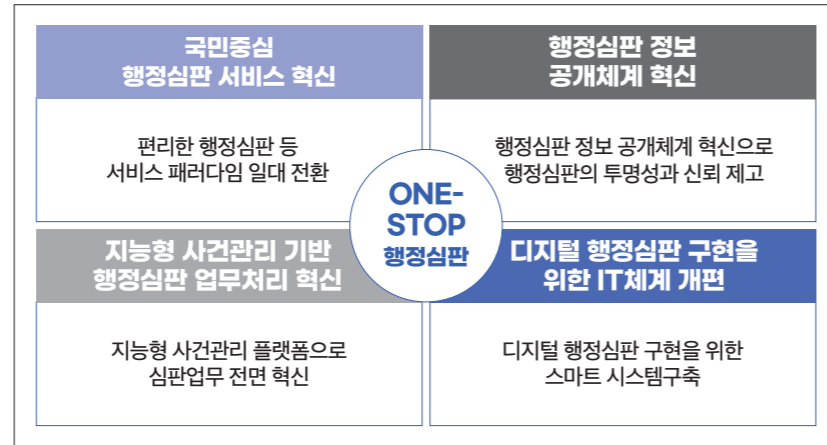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고,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40개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등 361개 기관의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심판의 온라인 신청·접수·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2022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79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까지 123개 전 행정심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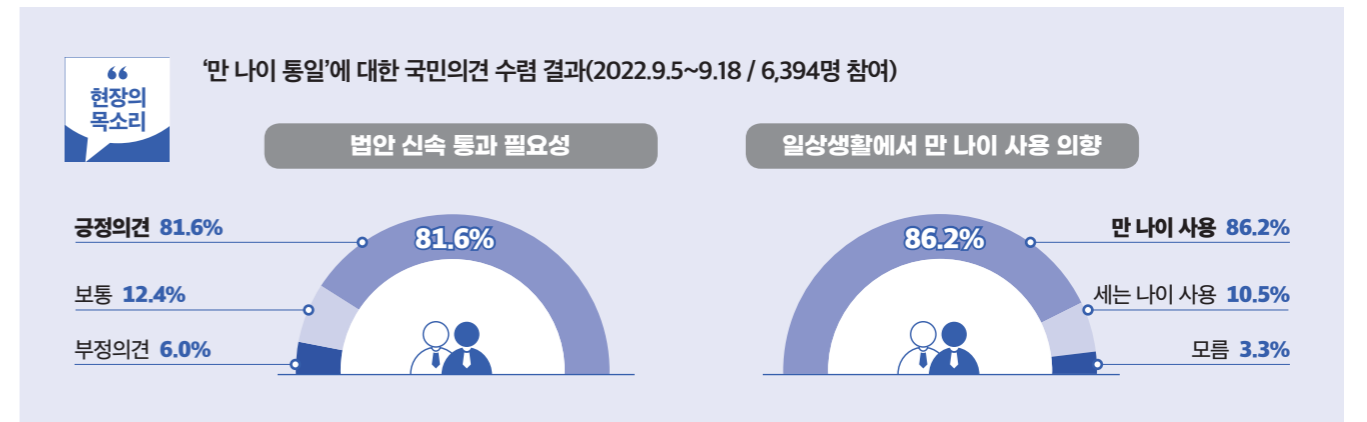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을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으로 다툼 법률상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하고,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에 따라 지난 5월 발의된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统一到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만 나



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대 두 살 더 어렵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현행 '연 나이' 규정 중 국민 편의와 무관한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법무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5,577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동일 단체가 5년 연속 선정 시 안식년 제도 도입, 회계평가 비중 및 페널티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공개,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향후 2023년 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과학적 정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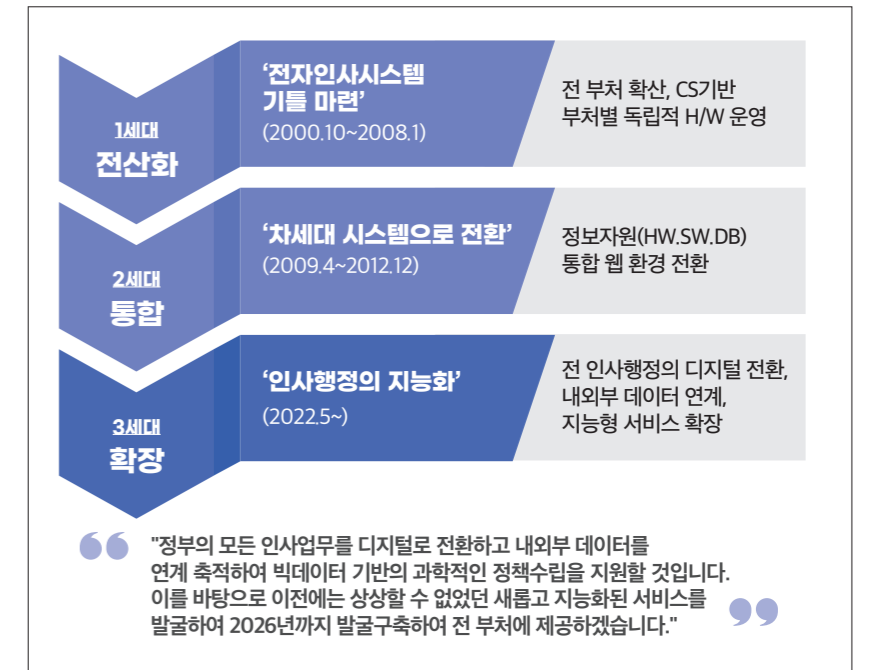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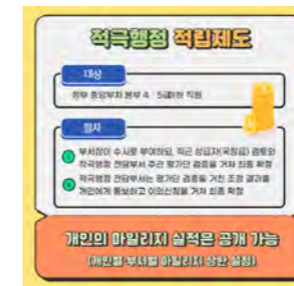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공성을 완화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장급까지였던 공모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으로 확대했으며,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비롯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모직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며, 연공과 경력중심의 '근무연수평정'을 축소함으로써 직무에 기반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와 인재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부처 및 정부 기능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수록·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법정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류,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를 완료했고, 12월에는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 안건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상정·의결했습니다. 2023년 'AI 기반 스마트 복부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



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부처에 확산할 예정이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연계하고, 다양한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부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자율·책임 기반 공직여건 마련 및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상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상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710명(1,165건)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199건의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신과 열정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부처별 자의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



하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 특성에 따른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9월에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공무원 임용령 등 15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①인사특례 확대(9건) ②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③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④지침·기준 완화(10건) 등 총 47건의 과제 추진

2023년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민첩·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의 ‘제2차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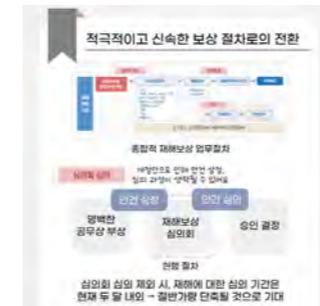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던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재산 통합 공개의 첫 단계로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원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원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법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의 경우 신속하게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생략,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을 두텁게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대응해 지휘관과 동료 직원 간 배려와 관심 갖기 운동을 확대하는 등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연중 지원했으며 비용 청구 시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소방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반영된 기본급 정상화를 위해 경찰·소방공무원 기본급 상향을 추진했으며, 약 20년 만에 경찰·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높은 책임감을 상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중요 감사청구 사항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사대상 주요 정책·사업을 위험분석 등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시범선정하여 2023년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고위험 중점분야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평가·관리체계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 영역(4개), 국민안전과 복지 강화 영역(6개),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활성화 영역(6개),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개)

2022년 6월 공익감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고,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외부인 주도의 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및 감사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도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경상경비 지출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여 34조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습니다.

그간 각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①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②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②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①기능 ②조직·인력 ③예산 ④자산 ⑤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차례대로 확정·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절감하고, 2023년에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여 2022~2023년 동안 1조 1,000억원을 절감 및 삭감할 계획입니다.

#### < 분야별 공공기관 주요 혁신 추진 내용 >

- (기능, 조직·인력) △12,442명 조정(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2023~2025년)
- (예산)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자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14.5조원 매각·정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조 3,000억원,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등 14조 5,000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정비를 추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15개 항목 715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와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윤석열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공기관 재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했으며,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2022년 8월 투자·사업 정비 및 경영효율화방안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을 반영한 ‘2022-202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 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 원 등을 통해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 10조원 수준의 자분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는 경영평가지침에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개방했습니다.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거래 협의체를 출범하고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각각 신규 개방했고, 지난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예약시스템(Alio+)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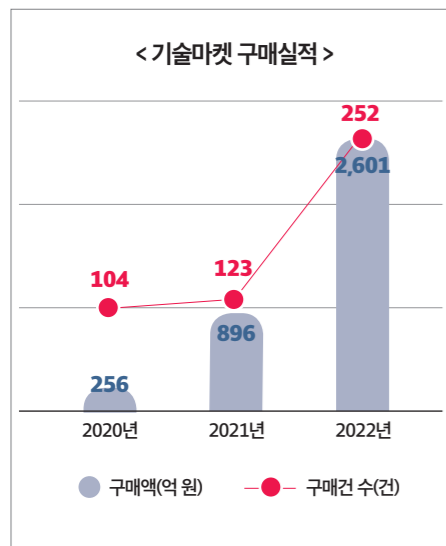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누적 구매실적 3,753억원(490건)을 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기술마켓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기술마켓 이용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규제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30건의 개선 과제 발굴 후 부처·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 (2022년 130개→2023년 87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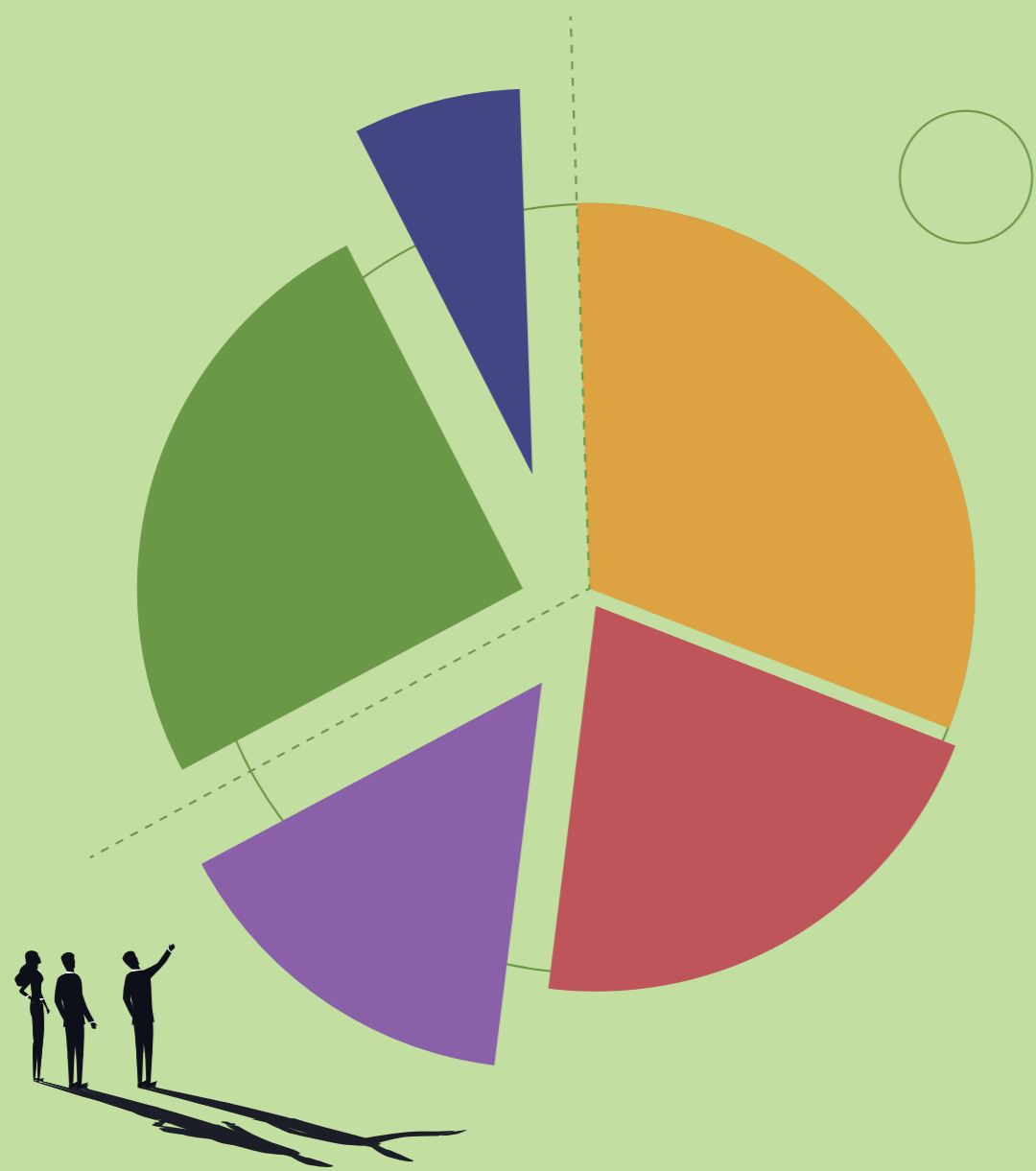
- ①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 ②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 ③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공기업 기준, 10 → 20 점) 등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게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규제가 기업투자와 신시장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고 느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 체감도 추이 : 97.2점(2018년) → 94.1점(2019년) → 93.8점(2020년) → 92.1점(2021년)
- 불만족 사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순
- ※ 체감도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시 불만족, 100 보통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하에 국민 모두가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협과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환경 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했고,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민간 참석자 A사 대표 인터뷰, 유튜브 '신규1월' 발취



또한 2000년부터 민간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여 서울시 면적의 4.3배 크기에 해당하는 2,577km<sup>2</sup>의 국토에 대한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부문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첨단사업의 선제적인 육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1,102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료하여 현장 효과 산출 가능한 과제 분석(104건) 결과 34조원의 투자·일자리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일자리,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지원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한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규제 비율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연평균 대비 약 3배로 증가(3.7%→11.5%)했고, 규제위 권고율도 약 15%p 상승(61.9%→77%)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경쟁제한 및 기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최선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사전 규제영향분석 외에도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규제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중복적·복합적 규제인 ‘덩어리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개별부처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윤석열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협력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2022년 8월 1일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12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344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2023년 3월 말까지 총 6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발족 2년차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심판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제약회사의 반려동물의약품 생산규제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이해단체 간 정례협의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제의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의기한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

제샌드박스’와 특례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었으며, 그중 181건(21%)은 아직 실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2개 지역(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전체)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10.5조원의 투자유치, 4,000억원의 매출증가,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네거티브 전환과제들이 개별법령 중심으로 발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거티브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 분야를 일반 분야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일반 분야는 전부처 소관법령 검토를 통해 100건의 개별 전환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모빌리티·물류·핀테크·K-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7대 신산업 분야를 별도 선정하여 분야별 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하여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가업자식별모델(SIM)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2022년 9월 개정 완료)해 SIM의 개념에 유심뿐 아니라 e-SIM 등 다른 가업자식별모델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업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규제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2022년 7월)를 추진했습니다. 전 부처의 '규제비용 200% 감축(One-In, Two-Out)'을 목표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비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59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건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80%(268조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재하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전주기적 체계 구축과 성장촉진형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금융, 시험 인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견기업을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검증하고 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지역대표 중견기업 5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신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 중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기업과 기관간 협력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상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4 → 10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 증가분의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限)

그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직접 출자에 참여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동 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직접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3년 3월 한시법으로 일몰 예정(2024년 7월)이었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달성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중·중견·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022년 7월)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2022년 9월)을 개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구직자들과 중견기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43개의 우수한 중·중소기업이 참가했고, 1,539명의 채용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2022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중견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자금부담 완화에 주력하여 2022년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사업재

편 수요 발굴부터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106개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섰으며, 향후 5년간 1조 1,000억 원의 투자와 5,45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문턱을 과감히 개선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한편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명(+a)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현장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일관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교원, 정원, 교육과정 등)는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산업협력형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학기준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등 미래형 혁신인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022년 9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2022년 11월),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2022년 12월), ‘철강 산업 발전전략’(2023년 2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단기(256일, 2022년 9월 13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역대 최대 수출액(6,839억 달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적극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a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하는 등 기존 산업거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을 지정·지원하여 전 국토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268조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뀌나가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해 2022년 8월에 5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21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3개소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민간 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취약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민간’으로 전환하여 경제 체질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대기업 (2년)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지방			중소	중견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청년의 범위: 15~34세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하여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60%→80%)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기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600억원)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승계받는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도입 등 글로벌 ESG 제도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하며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2022년 12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내 자문기관인 지속가능성기준포럼의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정부지원정책 등 ESG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구축해 첫 회의(2023년 2월)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형으로 정책금융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제안한 주요 산업정책 금융지원과제를 5대 중점과제 33개 세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별 자금공급 목표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0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4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계		91.4조원

부과제로 분류하고,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205조원)의 약 45%인 91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부처별 핵심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통과시 대출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 1조원, 5년간(2023~2027년)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새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5.1%)을 시현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 각종 규제,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 79.1 → (2017~2021) 58.7

##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 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연초 전망과 달리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6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

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매일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여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KDI 정책 간담회(2022년 9월, 2023년 3월) 등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요국(미국 2.1%, 독일 1.9%, 일본 1.1%)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원+a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안정메시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12회(2023년 4월 10일 기준)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해외 주요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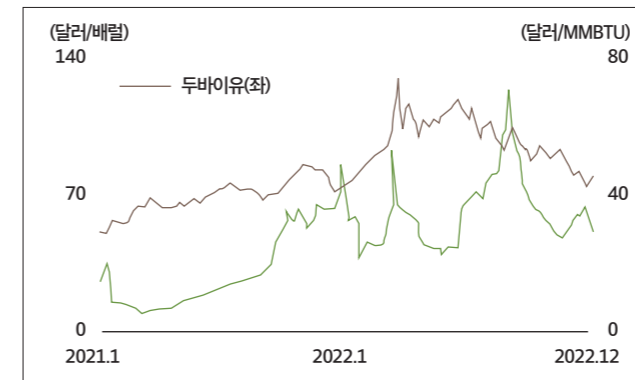
###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가가 고물가에 고통받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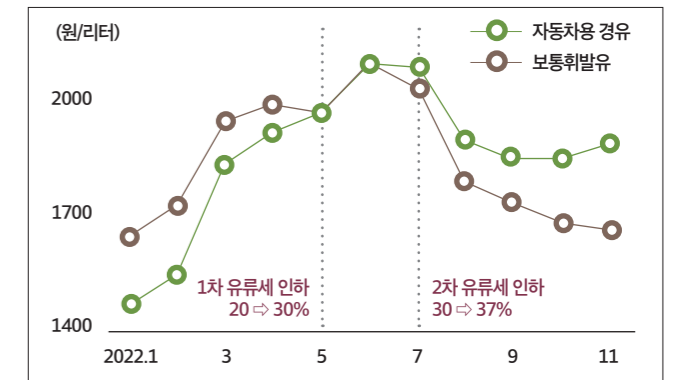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석유가격은 2021년의 저점 대비 2.5배 이상, 천연가스는 12배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22년 5월은 30%까지, 7월에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양파·닭고기 등 핵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으며, 배추·무·감자 등 수급 불안품목은 집중 방출하는 등 농축수산물 및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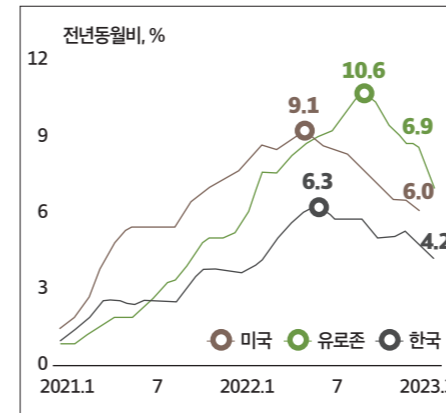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석유제품 가격>



<2022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국민부담과 공기업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전기·연탄 등의 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2배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5.1%를 기록했습니다(미국 8.0%, 유럽연합 9.2%, OECD 평균 9.5%).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4.2%를 기록하는 등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 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전전제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

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대외건전성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Fundamentally Different),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또한, 최근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3월 13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경제블록화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11차례 개최하여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확보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대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지난 1년간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중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과 정부 간 공급망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금 및 입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외국상의 및 글로벌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고충처리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계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사상 최대인 3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 간 상시 교류를 통해 387건의 고충을 처리했고, 규제개선 검토과제 132건 중 4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3월 23일 일본은 통달 개정을 통해 3대 품목을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로 한일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시행(2023년 4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감소(5종→3종, 개별허가 기준)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여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양자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정식서명하여 2023년 1월 1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Partnership Economy Agreement)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분과 협상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노력에 동참하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tn Mechanism)와 같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EU의 이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탄소통상 자문단 등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여타 신흥시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입장과국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다자·양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조치 상대국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등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서한 발송, 조지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WTO가 현재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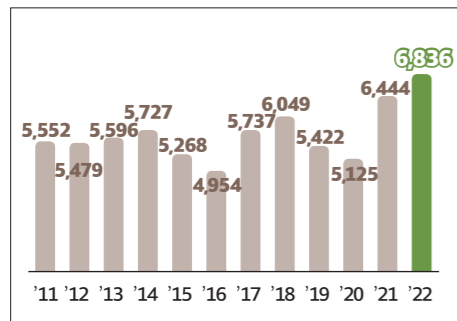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 출범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다양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협력 및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윤석열정부는 두 차례 공동위원회와 한 차례 장관회의(2022년 9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도쿄 무역관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2022년 11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 애로해소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 초기 19% 수준에 불과했던 RCEP 활용률이 2022년 말에는 39.1%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신무역 육성과 무역구조 개편으로 수출 5개 강국 발판 마련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비축·도입·재자원화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효율 개선과 절약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확립하면서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1월 발표)했으며,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2022~2036년 연평균 2.5% 증가)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표 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현재 80%대)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현재 2%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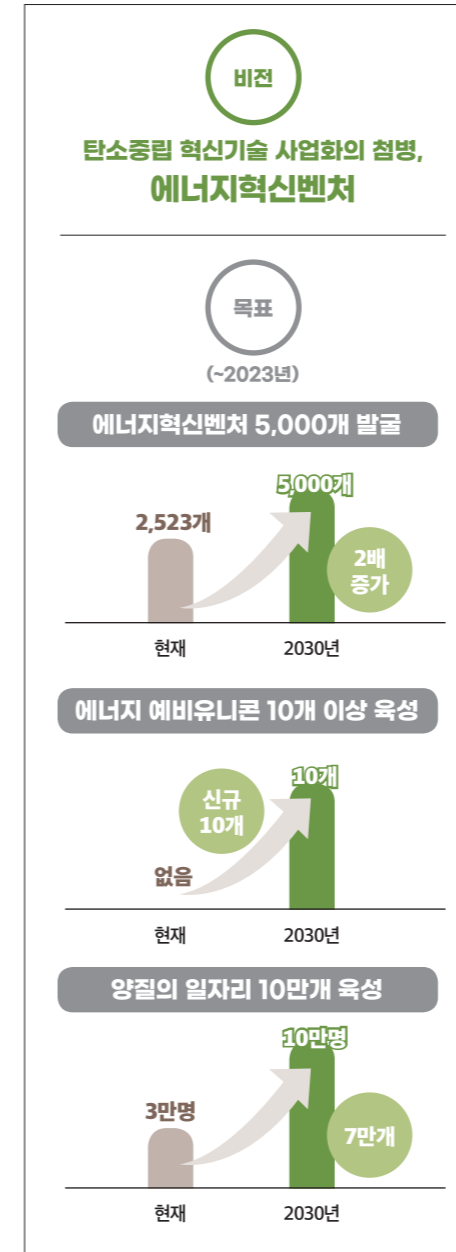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자원안보의 대상을 석유, 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우라늄,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자원안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정부는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 효율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효율개선의 사각지대인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무상진단 사업을 신설하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교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2022년 11월 9일 개최하여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정의·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10MW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2년 9월 제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수송차 25,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기술·디지털기술과 융·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지



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신설(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 (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공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 집중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효율적 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풍력발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풍력 입찰 시장제도를 2022년 9월에 조기 도입했습니다.

##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전력수요와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예비자원 적기 동원 등을 통하여 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하여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중이었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 결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최적화된 전력망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5월 지역 그리드 구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3년 8월 제정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으며, 바우처 단가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전략 마련,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요자 지향형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하여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기업 자체개발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앞선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 신설,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 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매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둘째, 시장·산업 최고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

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산업기술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으며, 단계별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에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동 계획을 통해 산·학·연과 민간전문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업화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현장수요와 사업화계획 등을 고려해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으로 진행하고, 지원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으로 수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투자·금융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2025년 말까 지는 전체 대상과제의 2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완화했습니다.

우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으나,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의 선정 및 중단절차에서도 기관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문제 발생 시 대체기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기업·연구개발·특허 정보 등을 통합연계,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 정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획 지원시스템인 산업기술가치사슬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기술단위 분류체계를 통해 이중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선도형·추격형·신산업창출형 등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모델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상세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2022년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개념·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23년 시범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자유공모 방식의 양·다자형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및 해외기술 도입 조기 상용화 연구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 8월 7개 과제(과제당 연 10억원, 3년간)를 신규 착수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협력국과 산·학·연 간



의 기술·인력교류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항공기시스템 품질 및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굴하여 표준교육, 표준개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기술 바탕 국제표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상호운용성 등 우리나라 우수기술을 담은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표준활동에 힘입어 2022년 9월에는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어 국격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6명(3명 구속)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사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새롭게 시작하여 특허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증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다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화·지능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산업 데이터 권리 확보 및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그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에서도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했습니다.

###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십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패션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 또한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간 산업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인 이익배분,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수시로 추진하며 지속 개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

업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61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첫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은 실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성장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수요기업을 선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DX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기업 혁신을 지원합니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체인 단위의 선도사례 창출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0개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연간 500명 이상의 변화인재 양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5개 업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협업지원센터는 현재 수도권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밀착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업종에 걸쳐 약 500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파급효과 높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2022년에만 121개에 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정부는 이 중 파급효과가 높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 20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유사기업군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연대는 2023년에 참여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

## 0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도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투자,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리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소부장 전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31건에 대한 912억원 규모의 용자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은 8.5% 증가한 375만대, 수출액은 16.4% 증가한 54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중심주의 확산에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36.8% 증가한 55만 4,000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업계의 전동화 글로벌 타이어 도약을 위해 업계의 95조원 이상의 투자 이행과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차 생태계로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핵심 품목은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면서 SW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적극 추진하고, 제조 산업의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국내의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우수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2)해 세계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양산기술 고도화 등에 정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현장부터 설계·연구개발 인력까지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99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배터리 업계-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 미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요건 판단기준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이 당면한 핵심 이슈를 민관이 함께 논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및 조성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 내 입지, 기반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방향,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화단지 공모를 2022년 12월 26일 개시하고,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접수했고,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위한 기업수요 기반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정부는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첨단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3년 3

##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환자 진료 및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품화 기간 2년 이상 단축 및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가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예방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제1차 의료기기 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이동성,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신시장 창출 및 차세대 바이오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분야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 신규 30개사 지정, 수소 분야 28개 규제개선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2023.2.28)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를 통해 그간 총 32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4명의 의과학자를 선발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으로 세계수준의 혁신 신약개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차기 팬데믹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네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여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은 역대 최다인 21개를 기획했고, 6,9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포스트코로나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임무 중심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식(2022.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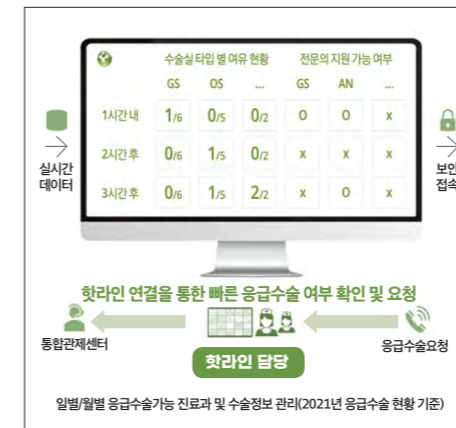
의 R&D 혁신을 위해 ‘제2차 질병관리R&D 중장기계획’ 기획을 추진 중이며,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허브 지정 첫해인 2022년 40여 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도 600명 이상으로 교육생을 확대하고 실습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확인한 미래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한 각 국가의 의지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응축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등 22건의 고위급 회담과 2건의 보건 양해각서 체결·개정이 이루어졌고 투자협약체결식, 현장견학,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 스마트 수술실 >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아 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가 2022년 8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종을 지원·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3개 분야를 지원·개발하고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2022년 설치)를 중심으로 개발된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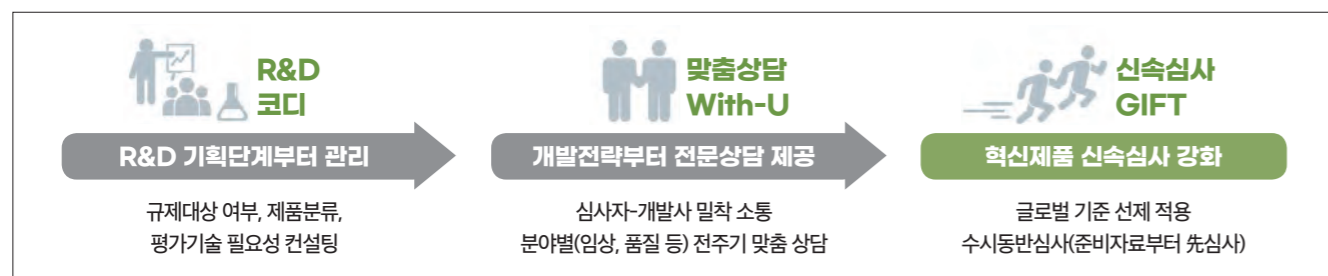
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40개 의료기관에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로서 데이터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했고,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총 138개), 전산·보안 장비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했으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공데이터부터 연구에 활용되도록 웹 포털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0만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가 구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코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R&D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25건, 2022년 5월~)하여 식의약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R&D 사업의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제품화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의료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기는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통상 3~5년에서 평균 1.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의 신속심사 활성화와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운영(2022년 8월)하여, 심사기간을 평균 75% 단축(120일→90일)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내 혁신제품 개발 지원 간담회(대응제약 개발본부장 인터뷰 중)**  
 -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엔블로정)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및 기술 상담을 통해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단축되었고, 허가 기간 단축으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IT조선, 2023년 1월)



이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포함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로써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국내 식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글로벌 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위한 규제역량평가 실시 결과,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중 최초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2022년 11월)하여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보장과 규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허가를 통해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품목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한시품목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소요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3년 3월)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질병 등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가능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감기약의 수요폭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022년 11월)하고, 약가인상·긴급생산명령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긴급 수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외에 비수도권(경상, 전라, 충청, 제주)에 거점 보관소를 확대하여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배송 소요시간이 최대 5.5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거점보관소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보관소 운영 현황>





##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정체된 상황으로 고용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단위 : %)**  
(2018년) 70.3 → (2019년) 70.8 → (2020년) 70.6 → (2021년) 70.7 → (2022년) 70.7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 내 메가트렌드 변화 반영을 위해 2011년 발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했으며, 자체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고도화 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 대응 및 토론회 참석 등 전방위적 입법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간 주도의 서비스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이 되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가 참여하는 구조로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치·운영하여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의 발굴·구체화가 목표인 조직입니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TF 작업반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에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13개 업종)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같은 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공 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조물품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진행으로 서비스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반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의 2025년까지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년대비 1.1%p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7년) 60.0 → (2018년) 60.9 → (2019년) 62.5 → (2020년) 62.4 → (2021년) 62.5 → (2022년) 63.6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태펀드의 대기업 수익지분 제한 완화(30%→40%)를 발표하여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활성화 지원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한방(일본) 등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내 보건·의료규제반, 금융규제반 등 서비스 분야별 특화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규제개선과제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콘텐츠·관광·물류·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32건의 조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보건·의료)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관광) 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 (현황) 등급별(1~2성/3성/4성/5성) 신청 가능하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 *예: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 · (개선) 신청가능 등급 통합(1~3성/4~5성) +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축소 또는 삭제) ⇒ (기대효과)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5억원 절감	문체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수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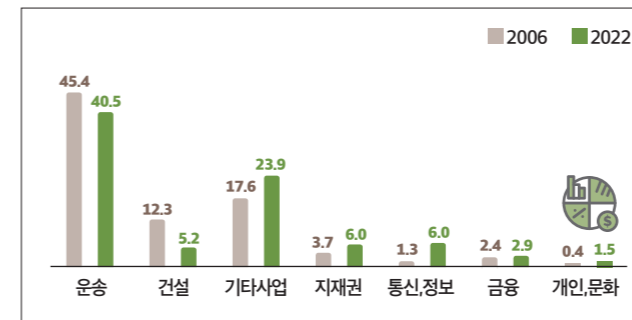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수출유망 기업(2022년 기준 30개사)을 선정하여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보다 많은 서비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 적용 서비스 업종을 2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고, 콘텐츠·금융·지재권 등 새로운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이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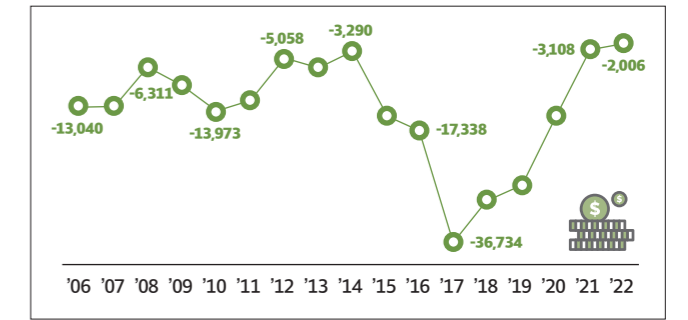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 2006년 대비 22년 분야별 서비스 수출 비중 (%) >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억달러) >



아울러, 23년에는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①관계부처 합동 서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 구성·운영 ②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③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는 로봇을 활용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 등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와 같은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정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안)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되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동반성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유료방송 협회 입장 발표('22.8.16, '23.2.23)

-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 적극 환영',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등 긍정적 반응

##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22년 9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상파의 경우 종합평가 매체(DTV) 이외 매체(UHD, DMB 등)는 편성·제작 기술 관련 사항만을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수립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종합편성채널인 (주)조선방송을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을 간소화(11개→8개)하여 2023년 3월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23년 5월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전기본계획 상의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2023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심사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투자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간소화, 시설 변경허가 폐지 등을 추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채널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방송상품 저가화 방안을 위한 결합상품 요금 승인절차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비율 단계적 하향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광고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 중소기업 K사(매출액 390.2% 증가, 고용 46명 채용)

- TV 광고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임. 광고 후 검색량 월간 15만회 돌파, 동일 카테고리 내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하고 판매량 증가 및 매출 상승을 경험

##### 소상공인 Q사(매출액 358.7% 증가, 고용 1명 채용)

- 광고 이후 검색 엔진들에서 회사 검색량 및 고객 문의 증가, 공중파 채널에서 광고가 나와 기업 제품 신뢰도 및 회사 이미지 상승 경험

다. 한편, 공익광고에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작 전반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광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경을 넘는 미디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OTT 행사(국제 OTT 포럼)를 국내 최초로 개최(2022년 11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o the Future)’을 주제로, 국제 OTT 포럼에 국내·외 정부, 산·학계 전문가 190여명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OTT 협의체를 구성하여(2022년 11월) OTT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국내 OTT를 널리 알리기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플랫폼 현황, 시장규모, 이용자 수 등 해외 3개국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2월). 현지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수출 엔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집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11월) >



중 육성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OTT의 글로벌 성장,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의 선제적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스케일업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OTT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외국가별 인프라, 법제도, 문화이용자 선호 등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발표된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 아카이브 영상 검색·재가공 등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제 콘텐츠 마켓(MIPCOM)에서 ‘한국뉴테크 융합 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하여(2022년 10월) ICT 기반 신유형 및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했으며, 미디어 ICT 기업 종사자들이 최신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2022년 11월)도 마련했습니다.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2022.11.1~4)

국내 OTT 혁신을 위해 실감·맞춤형 서비스 등 OTT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제작·편집시스템 개발을 본격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R&D 기술교류회를 개최(2022년 11월)하여 미디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OTT사와 방송사·제작사가 협업으로 제작·기획한 OTT 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부산, 대구, 강릉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를 구축(2022년 12월)해 신인 창작자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타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2022년 4개 기업을 지원해 서비스 상용화, 총매출 8억원, 투자유치 9억 5,000만원 및 신규고용 8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2022년 403명 양성)과 재직자 대상 심화교육(2022년 2,196명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예비인력 대상으로 신설된 미디어스킬업 캠프는 기업이 직접 참여해 ‘히든보이스’ 등 5개의 웹드라마 콘텐츠를 창출했으며, OTT 채널 송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직 방송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감미디어·UHD·OTT 기술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창작·가공할 수 있도록 ‘IP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플랫폼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OTT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수퍼톤은 배우 목소리를 극중 나이에 맞게 변형하는 ‘AI 보이스 디에이징’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OTT 콘텐츠 ‘카지노’ 제작 시 적용했으며, 일루니는 실감·모바일 환경에서 스스로 제작한 동화를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를 개발해 통신사에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 흐름을 분석·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및 한국 콘텐츠 음성의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습니다.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환경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비 총 36억 원을 지



중소·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원했습니다. 지역밀착형 뉴스·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2020년 87.0점 → 2022년 87.4 점)하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시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콘텐츠마켓에 참가(2022년 6월 베트남 콘텐츠마켓, 2022년 12월 싱가포르 콘텐츠마켓)하고 콘텐츠 번역·자막 재제작(2022년 11개 방송사 23개 프로그램) 등 유통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디어 미래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원팀코리아' 해외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형 R&D 과제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판로개척·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은 생산성 증가(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제조업 3.6%, 전체산업 2.7%, 건설업 1% 등) 추세를 보여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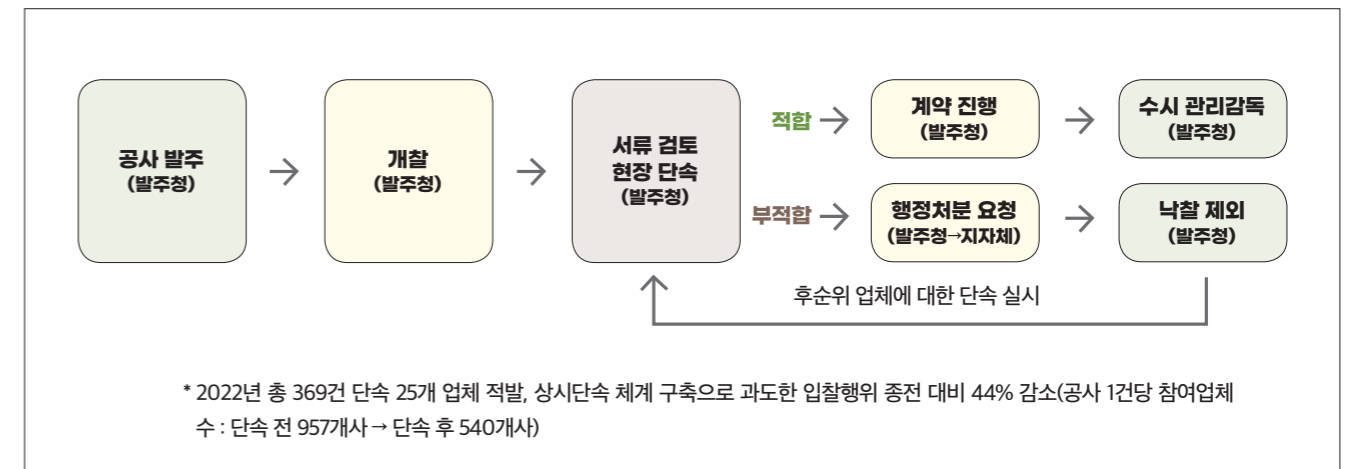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2022년 6월과 11월에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했고,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론 보험이력·사고정보, 기체신고, 자격·비행경력, 사용자업체 등 드론 안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에 20곳 이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실증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에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데이터를 3D 모델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비

<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도 >



롯한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과 같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를 구성하여 채용 강요, 기계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2022년 10~11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자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주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수주특성과 발주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12월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간(G2G : 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토부 장·차관 등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등 중동 지역,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다양하게 파견했고, 각종 공동투자 협약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형 대규모 R&D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지원 및 활성화 기술, 지역도심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는 신규 R&D를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초고속 미래 혁신 철도모델인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도시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중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분야에 걸쳐 R&D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2023년~2032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2년 역대 최대 금액인 587억원(정부 200억원+민간 38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개 펀드, 1,113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8개 품목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발주청 설명회 등 공공관로 개척을 지원하여 당초 혁신구매 목표수준이었던 108억원을 163% 초과한 17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에는 전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원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방면의 우수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월·10월)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2022년 1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스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항공안전 강화, 공항운영 효율성 제고, 국제 위성항법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이동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안을 모색했고,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	보험·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p><b>영업구역 밖으로 편도 이동 시 반납지역 영업 허용</b> 소비자 편도 이용 후 다른 지역 반납 시 반납지역 영업 불가 → 15일간 영업 허용</p> <p><b>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법제화</b>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 주차장법상 설치근거 도입</p>	<p><b>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확대</b> [보험]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 사고위험 경감 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p> <p><b>[카드] 대면 모집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모집 시 연회비의 100% → 대면 모집 관련 금액 상한 상향</b></p>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공공조달 제도 개선
<p><b>관광·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등록요건 완화</b>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에 대한 2종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혹은 유원시설 보유규정 삭제 등</p> <p><b>중소사업자 파산 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창업 제한 폐지</b> 관광사업자 파산 복권 시 즉시 재창업 가능</p>	<p><b>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 완화</b> 신규 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인원), 매출액, 업력, 시설기준 등 기준 완화</p> <p><b>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 확대</b>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p>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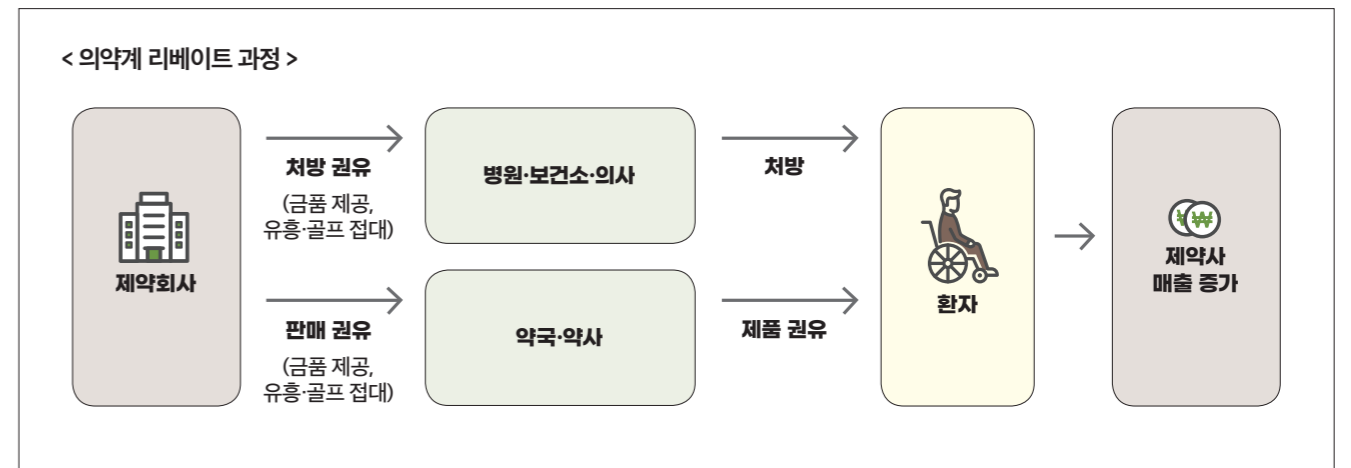
###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확대로 토지, 사무실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영업양수나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추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단순 투자 성격의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활용한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불이익한 계약의 시정,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제재(과징금 26억 원)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랜드, 경동, 한국타이어 등 총 3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158억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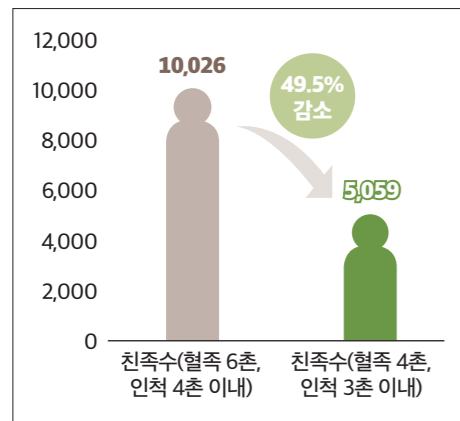
###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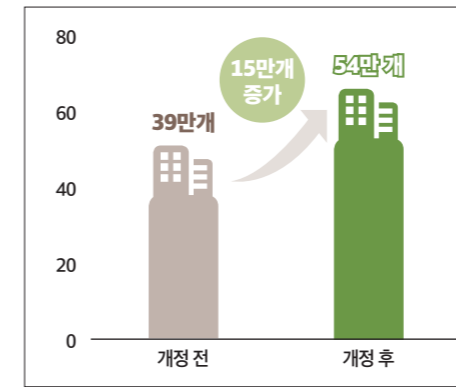
동일인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기업집단이 파악해야 하는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0,026명 → 5,059명, 2022년 5월 기준).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출자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약 39만개에서 54만개로 약 15만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민간업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약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 8회 개최했으며, 민간업체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관계기관·업체의견을 수렴하여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 방법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 세부실행을 위해 기재부·국토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LH·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기관 TF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련된 개선과제 및 개선안·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계약 법령 개정안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조달 혁신 및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운영을 확산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과징금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모빌리티, 앱마켓, 숙박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배차권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57억원)하고, 구글이 인기게임을 국내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수수료 방침은 수정토록 적극 대응했고, 부킹닷컴·아고다가 숙박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플랫폼 시장에서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완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플

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논의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납품대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대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2022년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3월 현재 원사업자 50개, 수급사업자 354개사 등 404개사가 자발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별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납품대가 조정협의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경제 여건 변동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매장임차인,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이를 이유로 중도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하고 분쟁조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분야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CP평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의 날(2023년 4월 1일) 및 각종 심포지엄·포럼(2022년 6월, 12월)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여도 소상공인의 피해 자체를 구제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유통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제재보다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병원 또는 소방서를 방문할 정도가 아닌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1,059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조력자로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촉발된 복합위기에는 정책자금 집중 투입, 지역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우려도 상존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 및 혁신성장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성과 창출을 촉진하도록 평가항목·배점을 개선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성장·성과창출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간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사업의 성장 성과에 따라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여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단기간내 개편가능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 건수가 미미한 상황(2020년 106건 421억원, 2021년 110건 34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업상속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공제·특례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지분·고용유지·자산유지 등 완화 등

다만, 현장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며, 그 결과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여력 확충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2014~2022년 누적 3만 144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29.3%, 매출액은 6.4%가 향상되었고, 고용은 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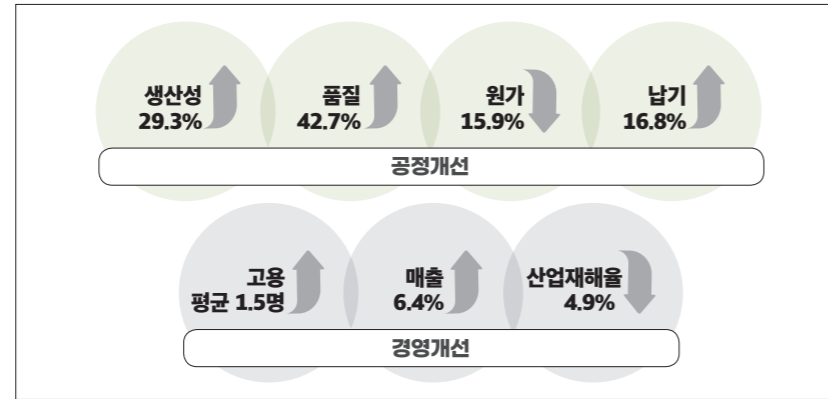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여 프레스 장비의 진동자료(제조데이터)를 수집하여 부품 파손을 사전에 예측(1시간 전)하는 등 200개 공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차세대 미래기술이 적용된 선도모델, 가상공간에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등 혁신적인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자율주행, 미래차, 로봇,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분석자료(2022년 4월, 한국통계진흥원)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338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6% 증가한 2만 1,392개이고,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도 83개로 2022년 대비 26개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민간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간 기술·인력·인프라 자원 공유 촉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관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성장기’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약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대출금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출만기는 최대 3년으로,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했으며, 새출발기금(30조원)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2022년 9월)하여 7일간 매출액이 2,200억원을 상회했고, 2021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2023년 2월)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기업 174개사에 위기진단,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위기징후 파악과 긴급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핵심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과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년 11월)’를 통해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9월)’을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 7개사 (2021년말 기준)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텐센트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 투자까지 특화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 선정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 모빌리티
4. 친환경·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2031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약 2,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2022년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Summit)’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VC : Venture Capital) 등 글로벌자본이 참여하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신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글로벌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신규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 총 7국가에 K-스타트업센터를 확보했고, 벤처캐피털(VC) 발굴, 현지기관과 협업 지원 등을 통해 2,627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투자 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최초로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태펀드(정부주도 펀드)에서 총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도 7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친화적인 투자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2022년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6곳을 운영했고, 510개사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2월 창업중심대학을 3개 추가로 지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업 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폐업과 고용 감소는 국가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14건 대비 2022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전환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금액을 2021년도 1,000억원에서 2022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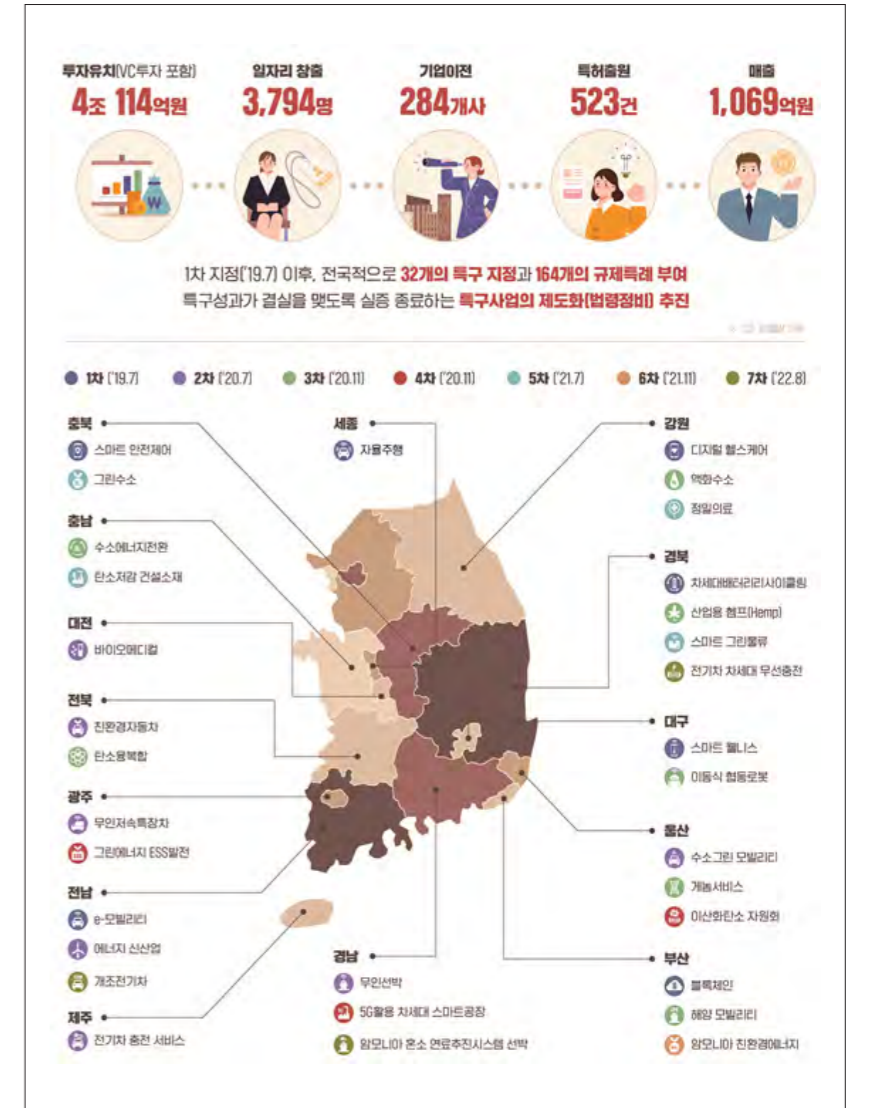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 1,000억원(2022년 578명)을 공급했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168억원(2022년 281명)의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하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및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그간 양적 성장해온 규제자유특구가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제도 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특레이용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증특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주소지로 이전의무가 있었으나, 기업 주소지 이전 없이도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3



년 2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특구 후보제도’를 2023년 도입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특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검토, 특례방향 설정, 특구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 확산, 업종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쇄, 제지업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완화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의조정 실적이 없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계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전문조직(TF)을 구성하여 2022년 8월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2022년 9월 체결했고, 수·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약정서에 연동조건을 기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2022년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시행에 의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쟁조정협회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회의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22년 5월 시범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기술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2027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 구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비용(최대 750만원 → 1,500만원)과 시간(최대 30시간 → 최대 60시간)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기술보호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무지원단 규모를 확대(기존 66명 → 75명)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하여 총과징금 38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부과 건수로는 2배 이상, 총 과 징금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도급 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향했으며,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





##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논의 결과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을 정립 확산했습니다.

그간은 기업 평가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운영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달의 상생블’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상생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상생블’ 운영에 국민심사단, 국민추천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등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약 3조 6,0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여 ‘상생결제’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865조 원(누적)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플라스틱 선별업 등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갈등을 조정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 및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하여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구조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감독은 아직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방안들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시범적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던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활발해져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227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점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되면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하여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초국경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재무부·법무부 등에 방문하여 글로벌 규제 공조를 협의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민간전문가가 소통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3년 4월 기준 6회 검사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중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안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지방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중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중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모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했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하여 법인별 1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금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의 주식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불편과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2024년 0.18%, 2025년 0.15%)해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 공모도 근절 및 공모도 운영 개선

공모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모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모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모도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모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하여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및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제도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를 확대했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022년 9월)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 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험·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공무원 인력 확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금감원 행정지도를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

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의를 진행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협의를 완료(2022년 9월)하여 2022년 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서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삼성화재(위풍대명) 등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 신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펫보험 가입자가 2020년 약 3만 3,000명에서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하여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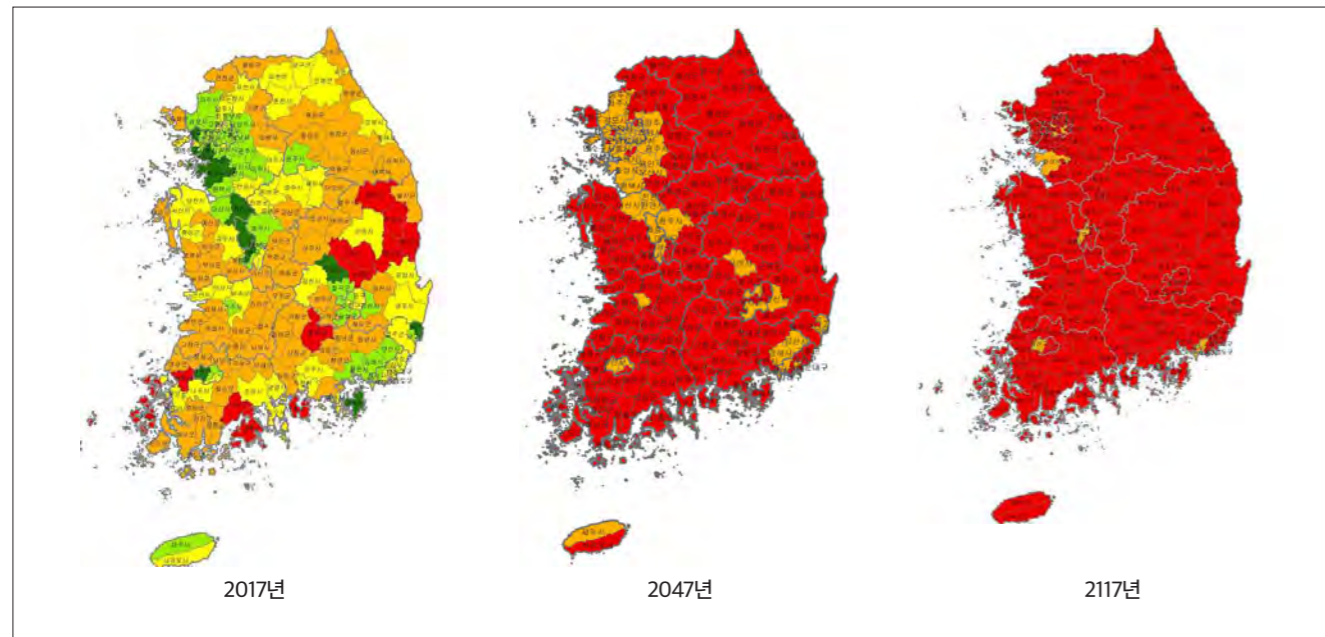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5대 초광역 거점도시 조성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이자 권역별 대도시권의 중심이 될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대학의 유희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경련 등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 및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에너지 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 개발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했고, 2022년 12월 대구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노후한 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노후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까지 대구·부산 등 6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곳은 준공(서대구산단), 3곳(부산사상, 성남, 대전)은 공사 진행 중, 2곳(부산사상, 성남)은 구역지정 준비 중이며, 공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2월 ‘노후산단 리뉴얼(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철도역 및 배후지에 주거·산업·상업 등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속초역, 경북 신경주역, 경남 통영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을 관광거점지로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간 연계를 통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30개의 사업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산업계 요구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근거를 마련했고,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2021년 12월~2023

년 6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 승인(2023년 2월) 입주(2024년 3월)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세종테크밸리 분양 및 네이버 데이터센터 준공(2023년 9월) 등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2022년 6월 개최하는 등 새만금지역이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2023년 3월 건설사업 입찰 공고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분석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지로 강원 정선, 충남 예산, 전남 해남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거점사업 등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정착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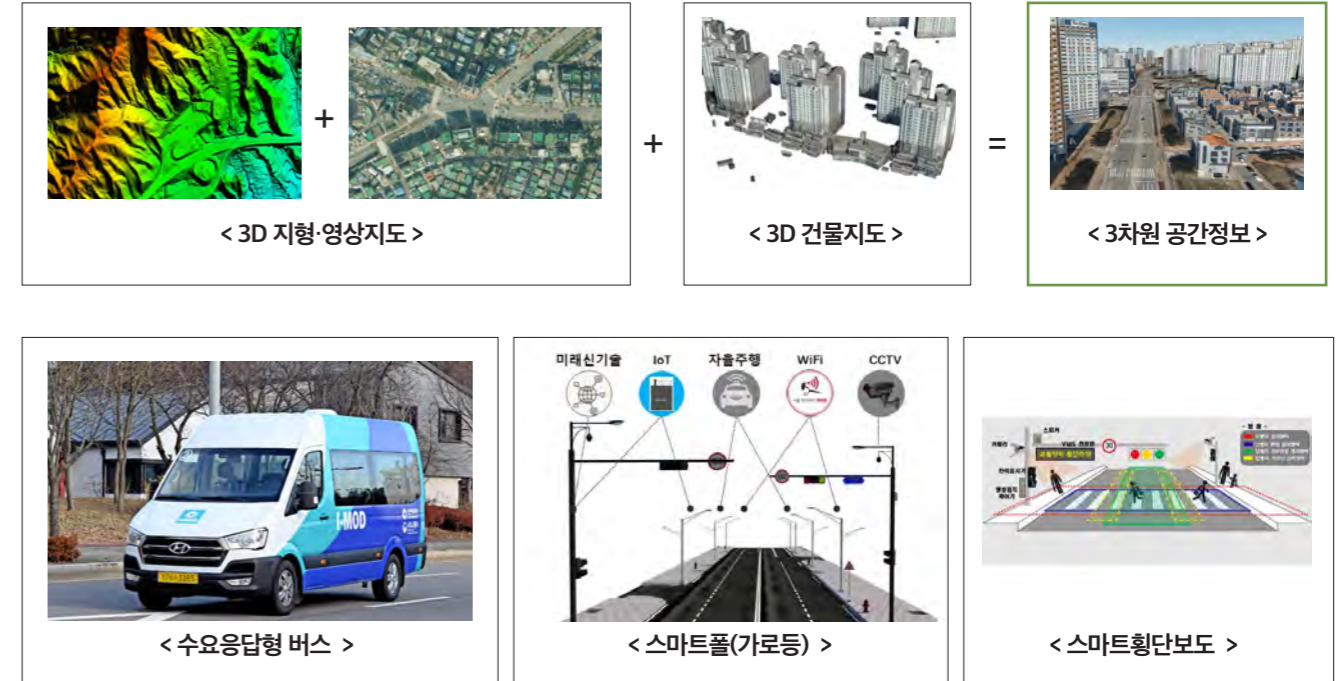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희부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제도가 활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N분 생활권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 세종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했으며, 전국 64개 도시에 240여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편리·안전·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등 기존사업과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스마트시티가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3차원 입체지도의 경우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국토·지자체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확대 구축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2만 6,889km(총연장 대비 27%)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도로망 디지털 트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도로 구축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적기 추진, 지역 간 광역철도, 간선도로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벽지노선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해마다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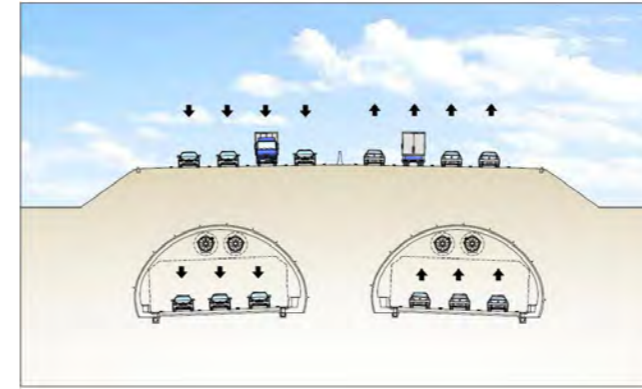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는 70분이 소요되던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기존 75분이 소요되던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종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을 앞두고 고조되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착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단축 효과 >

구분	운정 ↔ 서울역(A)	송도 ↔ 서울역(B)	덕정 ↔ 청량리(C)
현재	70분	90분	90분
개통 후	25분	28분	23분



지하고속도로 개념도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2022년 5월부터 경인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및 지하화로 확보되는 경인선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심도 고속도로에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경부 지하고속도로(화성~서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인과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5대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광역철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2022년 12월에 개정하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에서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로 합리화했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권역별 5대 선도사업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2개 사업은 202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이 아닌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들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덕~용산 일반국도(2022년 12월 개통) 등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신청, 북일~남일2 및 청도~밀양 일반국도 개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고성 죽계~마산 진전(1공구) 개통



정선3교 개통

##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2022년 9월 신성~주포 구간을 착공하는 등 간선철도의 완결성을 높여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022년 1월) 등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요 간선망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2022년 8월)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2022년 12월) 등 거점 간 간선도로망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했고,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성 죽계~마산 진전1(2022년 5월), 정선3교(2022년 7월), 거창군 주상~한기리(2022년 10월) 등 21개 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남해~여수, 비금~암태(신안) 및 고창~부안 사업은 터키 발주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덕도신공항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8월)하고 고시(12월)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안) 협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새만금국제공항·흑산공항 설계 착수 등 지방권 항공 인프라 구축과 간선철도망·도로망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안성·평택 등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1일 운행횟수를 680회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성남~북정 광역 BRT’ 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고물가 시기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업지역을 기존 163개 시·군·구에

### < 2021년 대비 20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비교 >

구분	월 평균 대중교통비(원)	평균 절감액(원)		절감률(%)	대중교통 이용횟수	
		마일리지(원)	카드할인(원)			
2021년 (저소득층)	62,226	9,419	4,753	14,172	22.8	38.9
2022년 (저소득층)	62,716	9,245	4,124	13,369	21.3	39.6
(저소득층)	57,070	14,263	3,394	17,657	30.9	39.1

서 1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상향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9만명(2021년 12월)에서 60만명(2023년 4월)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일리지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원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범위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교통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제·국내선 확충, 지방공항 취항지원 등 항공네트워크 조속 복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동계 슬롯 스케줄을 조기 확정하여 안정적 항공교통 운영을 지원했고, 2023년 3월에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2022년 9~10월)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하고, 2023년 2월에는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지방공항·몽골 간 공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운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스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 및 공공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성장 기반을 확보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국적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383억 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운산업 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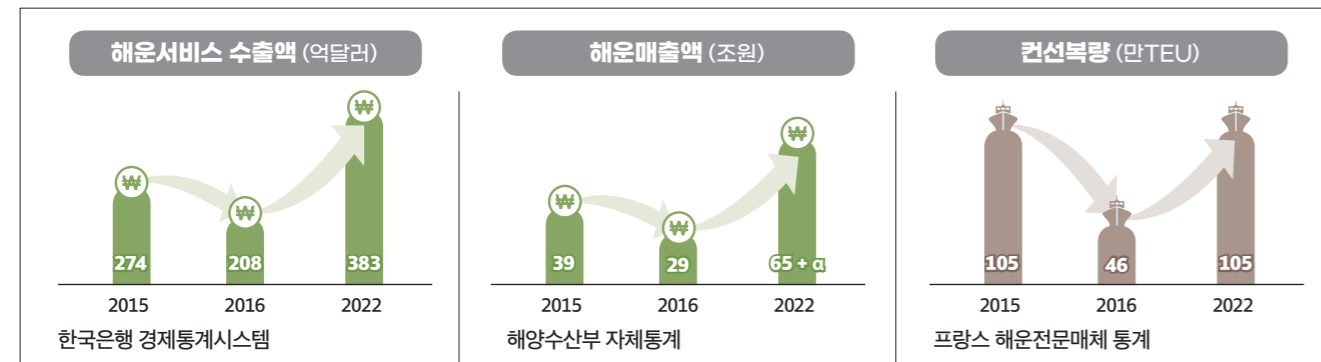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환경선대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51개사 1조 4,000억원, 2022년 기준)한 결과 해운서비스 수출액·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우리 주요 품목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수출 6위 품목인 철강(384억 달러)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또한 한진사태 직

< 주요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수준 상회 >



후 대비 해운 매출액은 36조원(2016년 29조원 → 2022년 65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9만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22년 105만TEU)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해운업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술 접목, 선박펀드 개편, 세계 지원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21억 달러 규모 선박 투자펀드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임이 70% 급락하는 등 시황변동성이 커져 해운업 위기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수출입물류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조원 규모의 선사 경영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2023년에 들어와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2023년 1월에 ‘자동차 수출 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는 민관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월 29일 선사·자동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적선사는 자동차운반선 여유선복 발생 시 국내 화주에 우선 제공하고, 국내 화주는 운송계약 시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선·화주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온 우수한 선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으며, 22개사를 인증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중심이었던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범위를 벌크화물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운송계약을 중소화주까지 확대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해운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 등 해상물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육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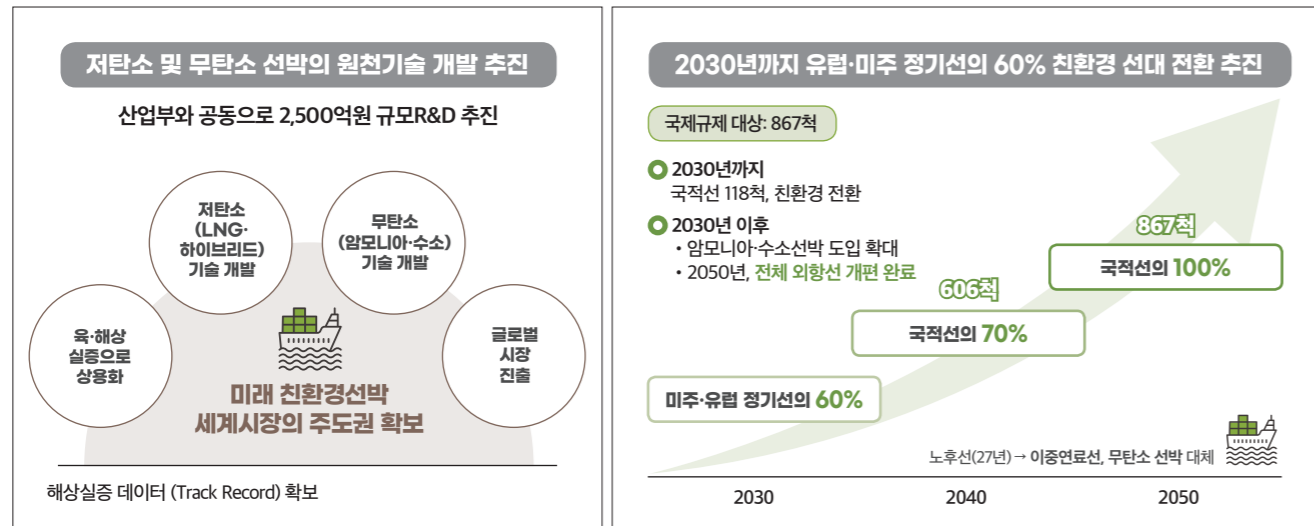
국내 기술기반의 스마트항만을 조성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을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자동화 항만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안벽-이송-장치장으로 구분되는 항만의 영역 전부를 자동화 장비로 배치하는 국내 최초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물류 처리 효율성 증대와 무인장비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3년 말까지 발의하는 등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윤석열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60척의 건조·개조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친환경 전환·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시장 선점으로 해운·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실증 소형시험선을 건조하고, 11월에 성능실증센터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선박 선도국가인 노르웨이 수준의 경쟁력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율운항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발의하여 2023년 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해양분야 4차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오차 정보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으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운항 선박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장비 및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디지털 항로 구축을 통한 실증 및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119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으로 양질의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일자리 100개를 창출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기사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해기사를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반선박 855척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293명 중 800명을 대한민국 국적 선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감소 및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취업 해기사 200명을 선발하여 선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HMM, SK해운 등 주요선사 10개사와의 취업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선(8,719명)과 근해어선(285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2022년 6월, 7월, 10월)하여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체계 강화, 불법어업 단속 등 대응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 등 경제·과학영토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등 해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육상자원 부족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은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지를 적극 탐사하고,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2022년 6월), 어업공동위원회(2022년 11월) 등 중국 정부와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EE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중국어명: 범장망) 42통을 강제 철거하여 불법어획을 근절하고 어린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보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 최외곽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고정 배치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권을 보장하고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23개) 중 13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설치된 영구시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제·과학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남·북극 탐사 확대, 남극에 세계 여섯 번째 내륙기지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11월)하고,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해저공간 창출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해저공간 플랫폼 개념설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2022년 8월) 후보지의 물리탐사 및 지반 시추 조사(2022년 12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첫단계를 완수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50m에서 5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89.1%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해양영토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경계 미확정 해역에서의 순찰을 2021년 대비 49% 확대했으며, 항공순찰 탐지범위 확대, 위성영상 분석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성·항공기 감시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비세력 배치,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기동전단 운영, 해수부·해군·해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 외국어선 출현이 2021년에 비해 79%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서해 경계 미확정 해역에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함정 9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정 단독으로 해상·항공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대형함정과 해양경찰서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융합·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항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도입 등 관제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86,004km<sup>2</sup>)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5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에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 중이며, 2023년에는 서해권(군산·목포), 2025년까지는 제주·동해권 광역 VTS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VTS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음주운항, 닛 끌림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박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2024년부터 현장에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복잡·다양한 환경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예인이 가능한 친환경(LNG) 다목적 방제함정 3척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현장에 배치하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복합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된 울산, 광양 등 6개 주요 항만에 유관기관·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환경재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해양 인명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복 지원, 보험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안여객선 공영화 도입 및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에서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0개의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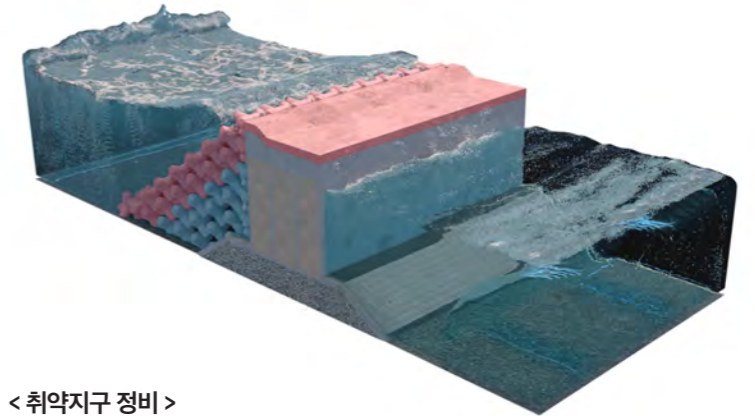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선(선령 18년)을 신규 건조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7.1%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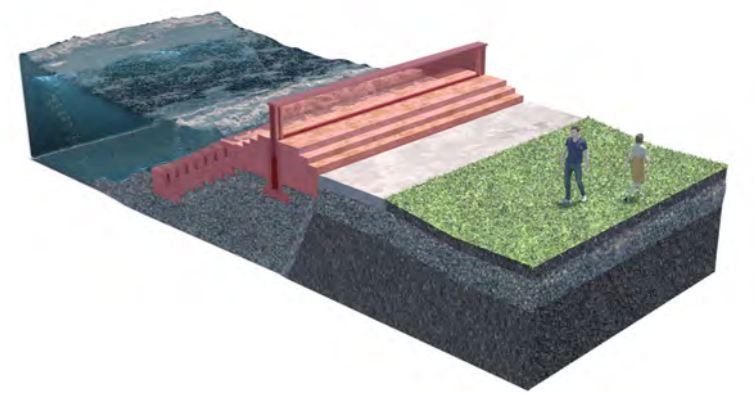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안조성을 위해 2022년에 전국 74개소 연안을 정비했습니다. 연안 침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동·서해안 2개 지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

#### < 외곽시설 보강 >



#### < 취약지구 정비 >



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 16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해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디도록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고,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7개항 37개소의 재해 취약지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촘촘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2021년 130회에서 2022년 178회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악천후에도 투입이 가능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취항(2022년 7월)하여 풍랑 주의보 등 열악한 기상 여건에서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영해 전 해역(8만 6,000km, 11개 광역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선점식 해양이용·개발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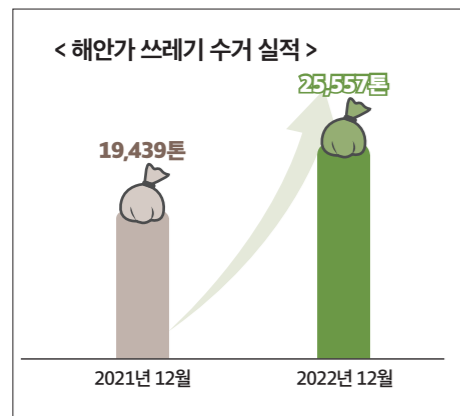
향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 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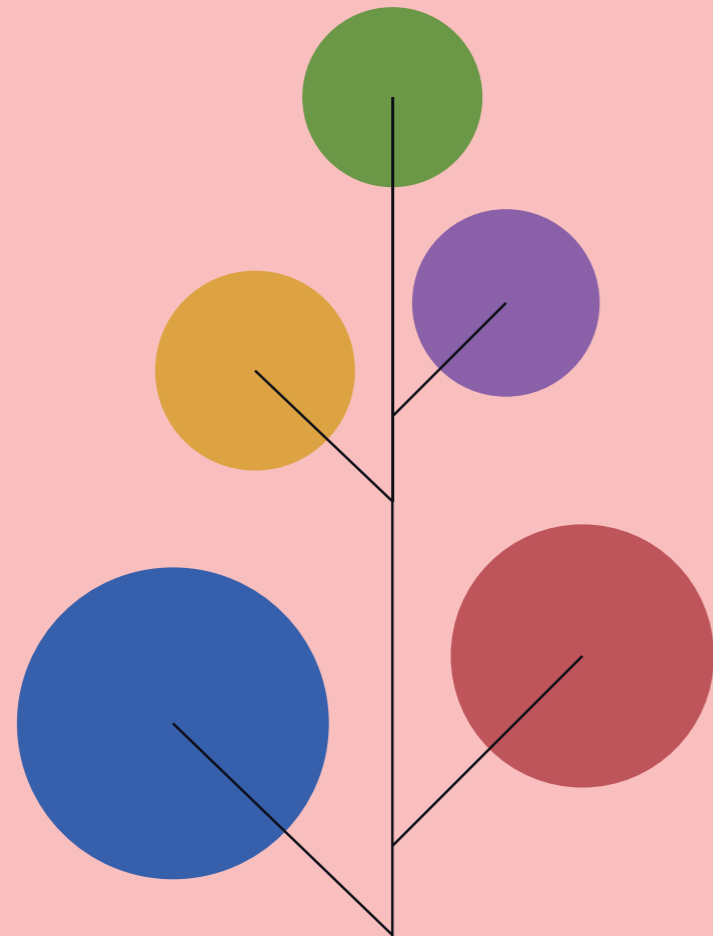
###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는 2021년보다 20% 늘어 1,200명이 활동했고 2022년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은 2만 5,557톤으로 지난해 대비 31.5%가 증가했습니다. 총 450억원을 투입하여 선박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폐기물 대응체계를 수거·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최신 연구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쓰레기의 국제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에 경북 울진 주변해역 3.8km와 멸종위기 철새서식지인 고흥갯벌 59.43km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4개소(약 1,862km)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톤(자동차 2,100대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2개소의 갯벌은 복원하고 4개소는 염생식물 군락지로 갯벌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22년 ‘수족관 고래 폐사 개체수 0’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자원 및 영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에 착수(2022년 8월)하여 연금개혁 논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023년 3월)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설치(2022년 7월)에 따른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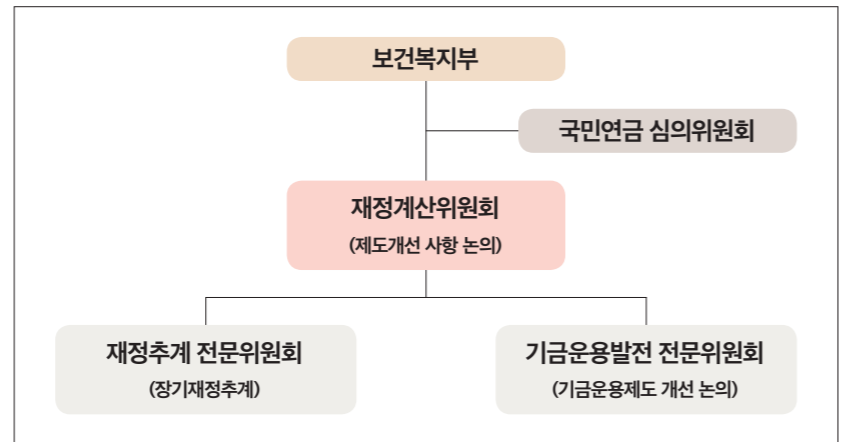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2022년 8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 재정계산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전망 우선 도출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2022년 8월 구성했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제도 및 인구·경제 변수 등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계 시산결과를 2개월 앞당긴



2023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  
기존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도 **5.1%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본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상황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2023년 3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포럼 실시간 생중계, 기획 기사·기고 게재 등을 추진했습니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백지광고를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청년층 대상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로 인상했으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실시했고,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3년 9월까지 평가(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국회 논의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중앙부처의 장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국정비전과 철학, 사회보장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알기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기획·분석·평가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확보된 19.4% 표본에 31개 기관의 행정데이터가 가명정보 형태로 연계된 것으로 2022년 1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고 체감도를 높이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30%)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2억 4,000만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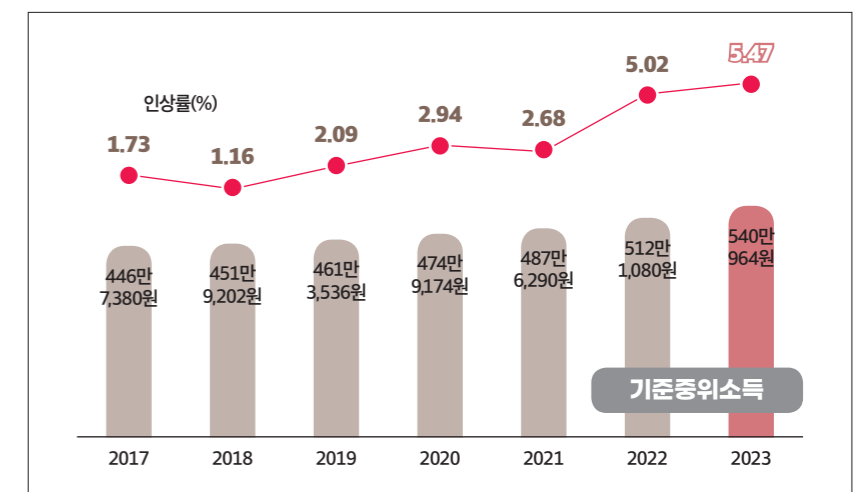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유행·실직 등 소득상실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76개)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기로 결정(2022년 7월)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가구 기준) >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99만 가구를 대상으로 8,980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인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 (주거용재산 한도액)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율 1.04% 적용하고,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과 추가적인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333만원 → 512만원, 4인 가구 기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2023년 2월 22일부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연료비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36%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5,606건이 신청되어, 4,355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3일, 약 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3월 기준, 건)

신청	심사완료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지급금액
5,606	5,168	4,355	18.3일	816천원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을 확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모형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 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산(16개소)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공급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확보(100억원)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는 민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 혁신, 수요 창출,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 전체 제공기관(23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가 44.7%(103,638개소)이며, 100인 이상 업체는 2.1%에 불과(4,865개소)

##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자금(100억원)을 복지 분야 최초로 확보하고 현장의견 수렴(21회)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2022년 8월)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 충청북도 2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2022년 22,942건)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역 내 소규모 영세시설을 지원(2022년 2만 8,740건)했습니다.

돌봄뿐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추진단(2022년 6월-)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20대 중점추진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2023년 2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 2억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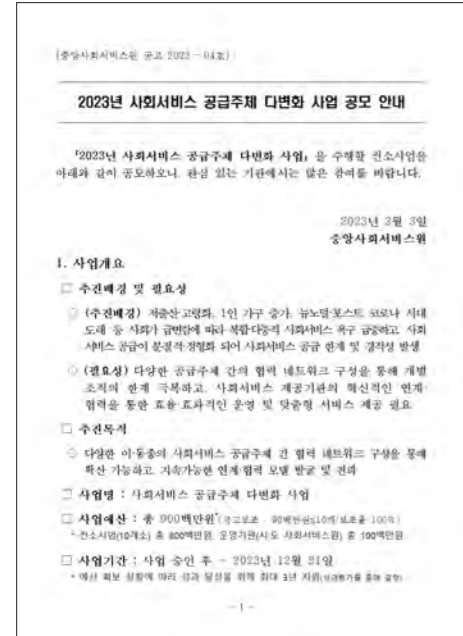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023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우수사례집

향후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선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15개 시·도에서 30개를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2023년에는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가치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상생협력모델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시범 운영으로 15개 제공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자립기반청년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등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147개소 어린이집(6개 지역, 30개 그룹) 대상으로 교재교구, 놀이공간, 식자재 등 공유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0개소까지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MOU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의 정부·민간 연계·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 돌봄, 가사, 심리 및 교류 증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획기적

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2023년 신규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 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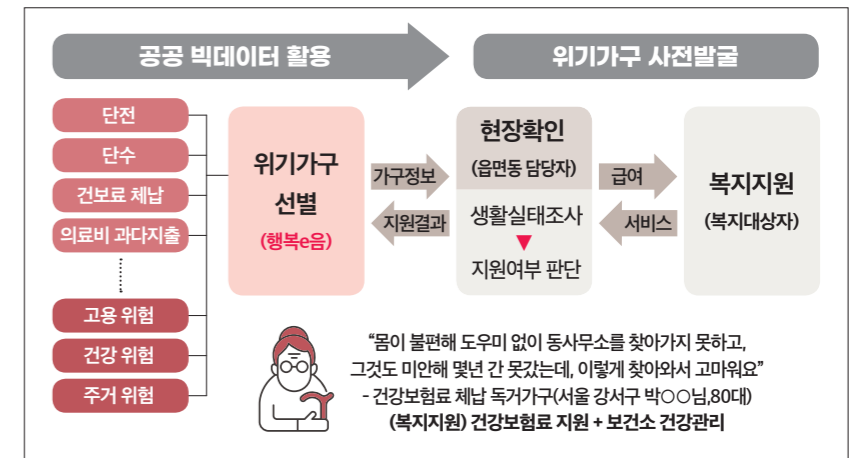
###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23개 중앙부처 363개 사회보장사업, 2022년 12월 기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윤석열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022년9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96만 건(2022년 12월말 기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47만 가구 가입(965만명), 20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정확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확대(5종), 세대단위 위기분석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 8,000명을 발굴하여 지자체의 상담·조사를 통해 60만 6,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2022년(2022년 추진실적 : 21과정 139회 4,441명 수료, 2023년 추진계획 : 23개 과정 127회 34,550명 교육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복지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



##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 혁신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서비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실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부)인건비 가이dra인(권고) 준수율을 2022년 93.4%에서 2023년 94.1%로 높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 2022.10월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사회복지서비스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022년 50만명 → 2023년 55만명)했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돌봄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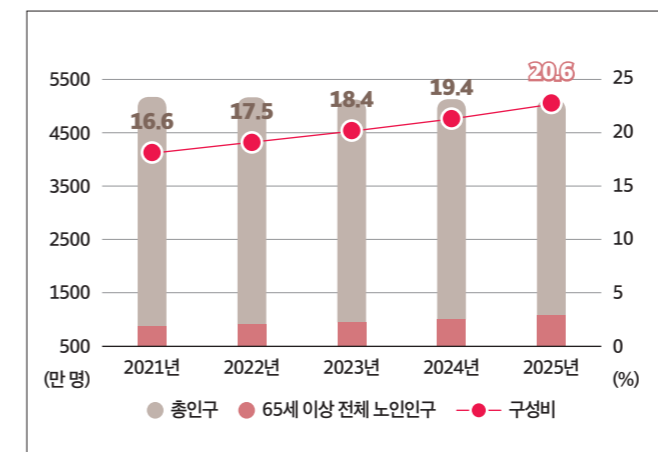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돌봄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 진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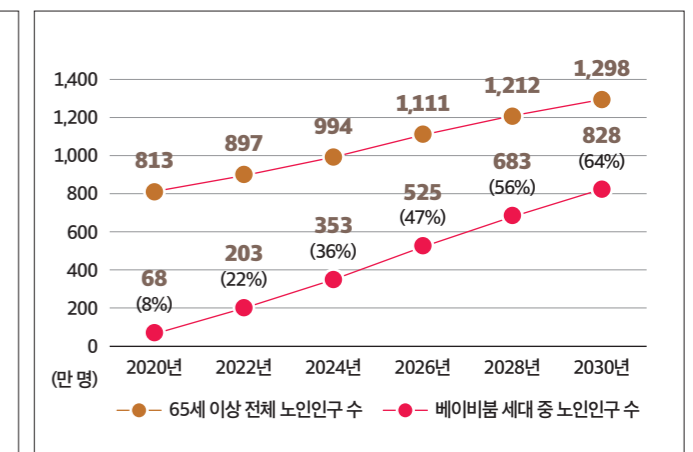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만 5,000명을 지원했고, 2023년은 일자리 수를 88만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1만 5,000명, 민간형 일자리 2만 3,000명을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 (11개 → 50개, '23.4월)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8개소)을 실시(2022년 12월~)했으며, 개인의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총 50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대상자 수를 55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통령, 독거노인 가정 방문

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의 공모·선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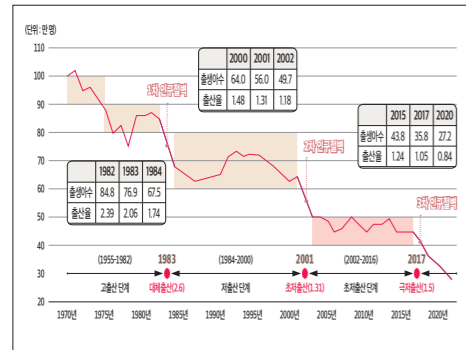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기준 누적 17만 가구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했고, 총 24,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총 3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 어플 등 고도화된 스마트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소득 제공, 의료·돌봄·요양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과 아동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권리 중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우리나라는 2002년(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진입) 이후 일정 수준 유지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2년(합계출산율 1.76명, 출생아 수 73만명)과 비교시 각각 1/2, 1/3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출산의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2~3년간에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도입, 난임·출산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필요아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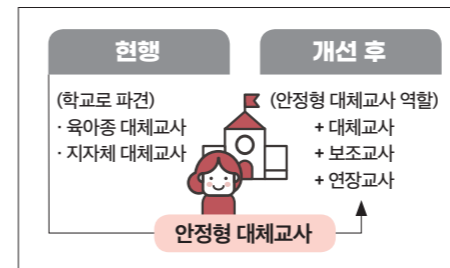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1조 6,214억원을 확보했으며, 부모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도 단기간에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 취지 및 지급방법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약 25만명의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했고, 2월에는 약 27만명의 아동에게 지급하여 영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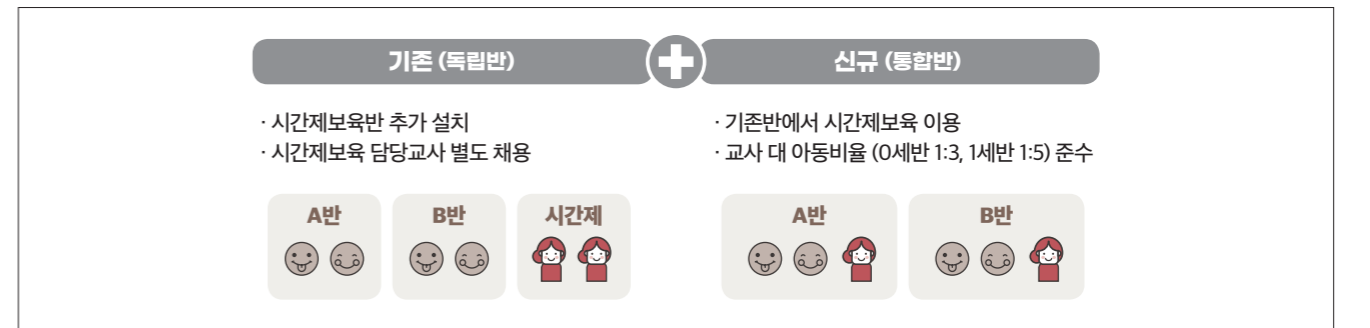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체·보조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경력직 교사(선임교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 53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정식 신설·운영하여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946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존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통합반) 적용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 결재만 가능했던 시간제 보육료 결제 방식을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의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12월)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보

###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육·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49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4월까지 2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사업대상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1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영유아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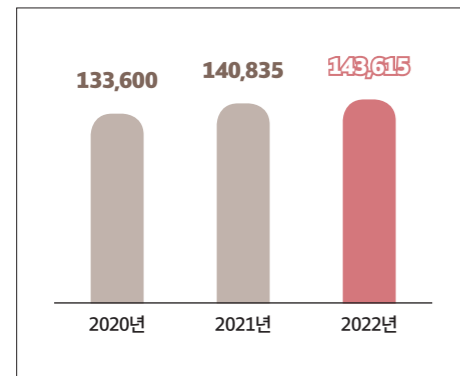
###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지역아동센터 4,25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에서 약 24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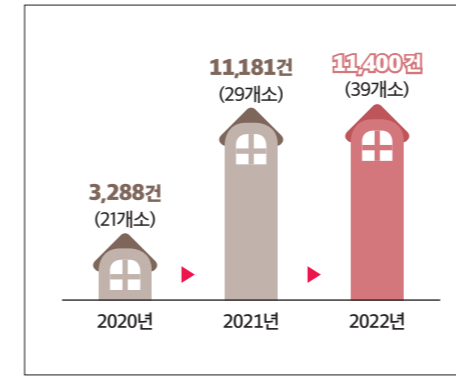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23. 2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부족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이 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부모들의 퇴근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종료시간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연간제공시간을 '22년 840시간에서 '23년 960시간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공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충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정원(명)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



###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 발달상담·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1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확대하는 등 약 1만 1,400건의 방문을 통해 약 5,300 가구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임신부 등록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 모바일 앱(아이마중)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배포를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역도 확대하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난임기술 지원 확대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난임부부와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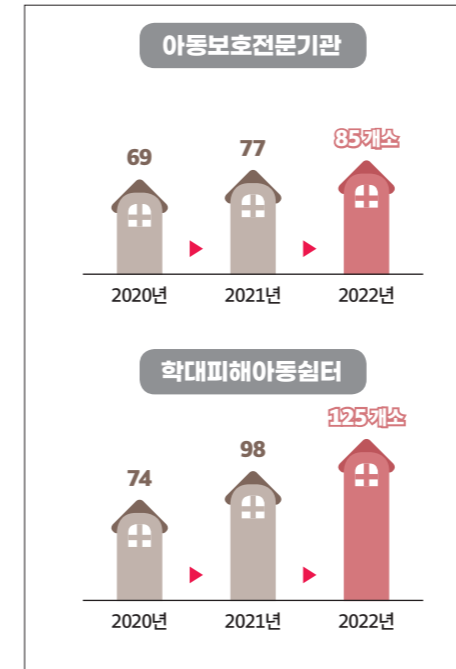
###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예방, 대응, 사후관리 단계를 촘촘히 강화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기준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



향후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소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현장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적 아동보호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아동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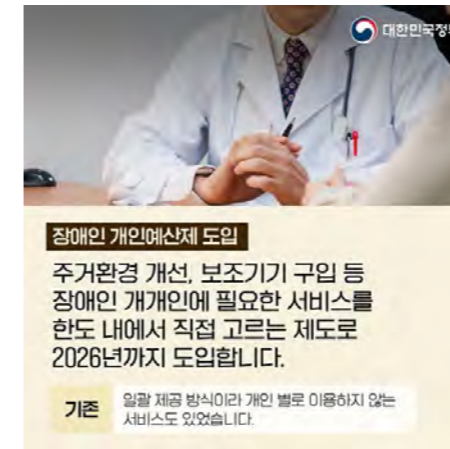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난임·임산부·영아 생애 초기 지원 확대,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6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와 같은 해 10월부터 도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모의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전문장애관리를 제공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활성화방안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여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미지정 권역이었던 강원·충북(각 1개소) 포함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부터는 15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인력을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220명으로 확충하고 사회복귀 지원 2,028명,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1만 463명, 보건의료자원과 연계 5,882명 등 4만 8,606명을 대상으로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256명까지 확충하여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리 대상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7개소에서 2022년 22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했습니다.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검진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검진기관을 8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2005년 이후 동결된 보조기 20개 품목(팔, 다리, 척추, 골반 등)의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4개 품목(무릎, 발목 의지)을 급여 확대하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급여 대상을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8만 7,500원에서 올해 40만 3,180원으로 인상했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수를 2만 9,546명으로 2022년 대비 2,000명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023년 최대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총 42종의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2개소(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2만 819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축·증축·개보수·장비보강 등 236개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9개 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2023년 3월 기준 762개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1만 4,28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국토부(LH) 협조를 통한 주택 제공 및 서비스(활동지원, 일자리 등)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장애계 등의 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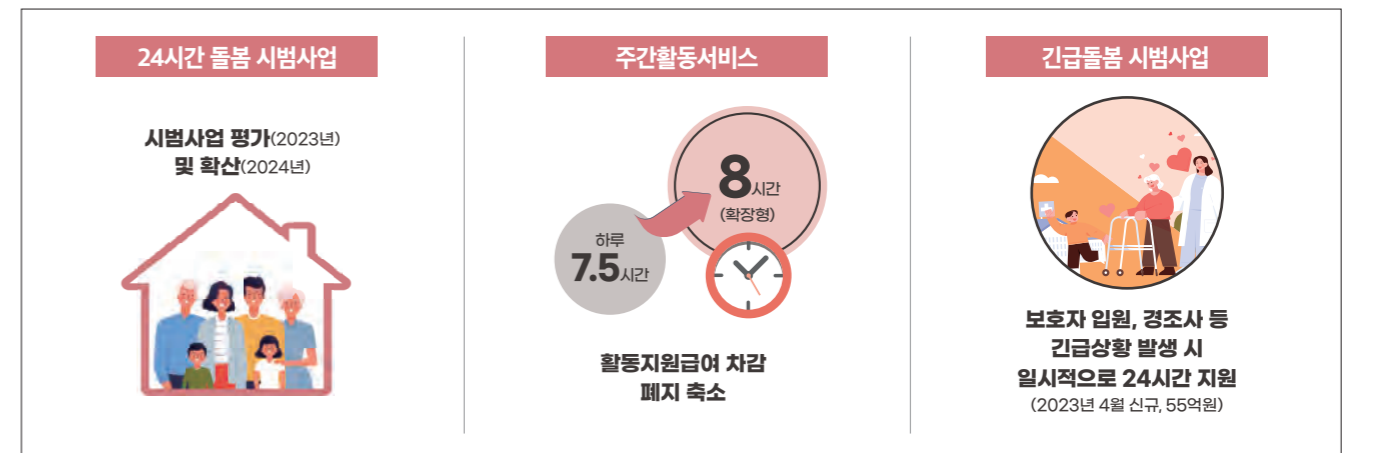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발달의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탓에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1:1로 지원하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하루 3시간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



황이 발생할 시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 이상인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 통과 유효폭을 확대(0.9m→1.2m)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대(1.6m×2.0m→2.0m×2.1m)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바닥면적 기준 축소 또는 삭제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받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민간시설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모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들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수혜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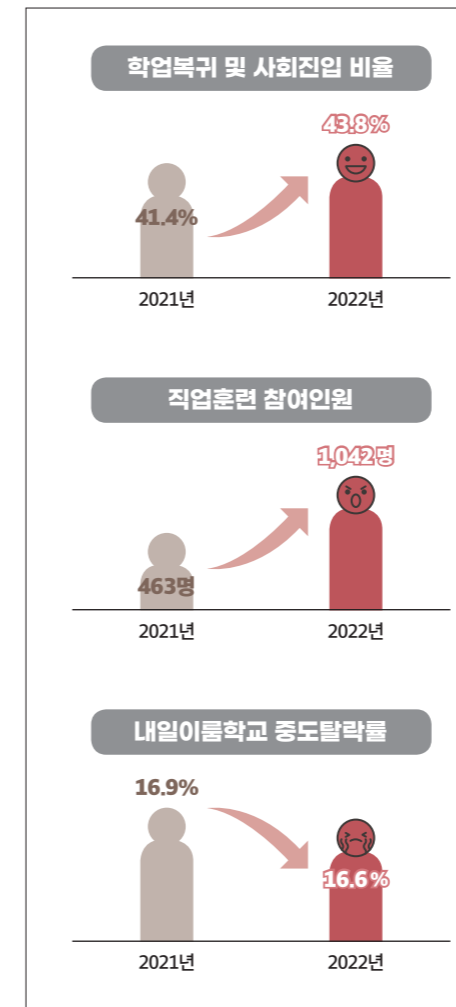
##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방안’ 마련 등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증가로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건강 상담 및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28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수용인원 또한 과밀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22년 말 기준 약 22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3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교정시설 조성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44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대면 서비스를 꺼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향상되었고 직업훈련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했으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2023년),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30만원 → 월 40만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발견과 지원을 위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022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2월) 등 청소년 분야별 대책 마련으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효율적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상향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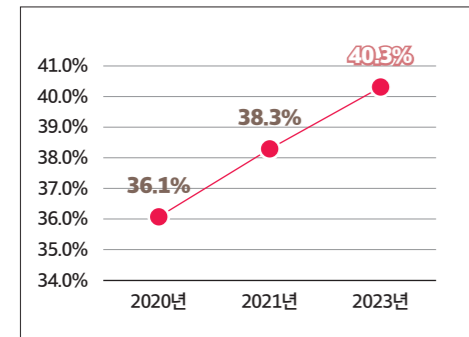
###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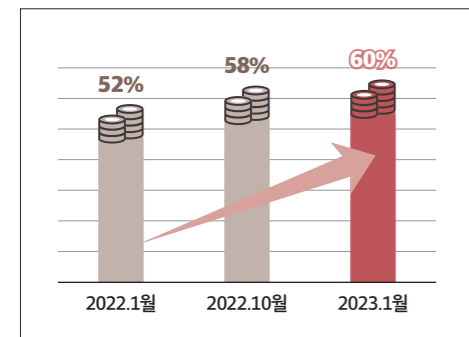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범운영(가족센터 12개소, 2만 3,189명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모든 가족센터(244개)로 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 간병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양육비이행률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상향 >



다.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7만 3,000여 명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했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34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했고,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상담·진로지도를 지원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12만 8,000여 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이중언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8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안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개방시설로 기능 전환 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분산 수용했으며, 2023년 1월에는 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거창구치소를 준공하여 과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 신설,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일일 평균수용률 >

(단위: 명, %)

구분	5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8,242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현원	54,581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률	113.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10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그동안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1월 25개 언어 14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인증·위촉하여 현재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심사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송환대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내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시설이 밝게 바뀌고, 적절한 식사도 제공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인권보호관 지정, 보호 장비 규격 및 사용 기준 명확화, 특별계호 절차 구체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원 → 2022년 157억원) 대폭 증액했습니다. 동물의료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를 지원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동물 보호·복지 업무와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74명을 추가 확충했습니다(2021년 130명 → 2022년 204명).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마련(2022년 12월)했으며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의 울타리를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2년 0.43%으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으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기규율과 엄중책임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전환하여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법 위반사항 적발 및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이 도입하고,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2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3,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1만 2,621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개편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기존 50인 ~ 299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만 6,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로 개편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실시하면 정부가 기술지도 및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 우수기업은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2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기계 1,716대 교체 및 위험공정 2,812개 개선 등에 3,27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육영상 약 791만회와 사고다발 구역 알림 약 594만회를 송출하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p><b>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b></p>  <p>장비의 인공지능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p>	<p><b>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b></p>  <p>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p>	<p><b>인공지능 크레인 충돌방지장치</b></p>  <p>작업자, 크레인 동작을 학습·분석, 위험경로에 접근 시 경보 및 정지</p>
---	--	--

2023년에는 노후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2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규모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시공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활성화하고, 기술지도 표준 지침을 배포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2021년 대비 3.6% 줄어든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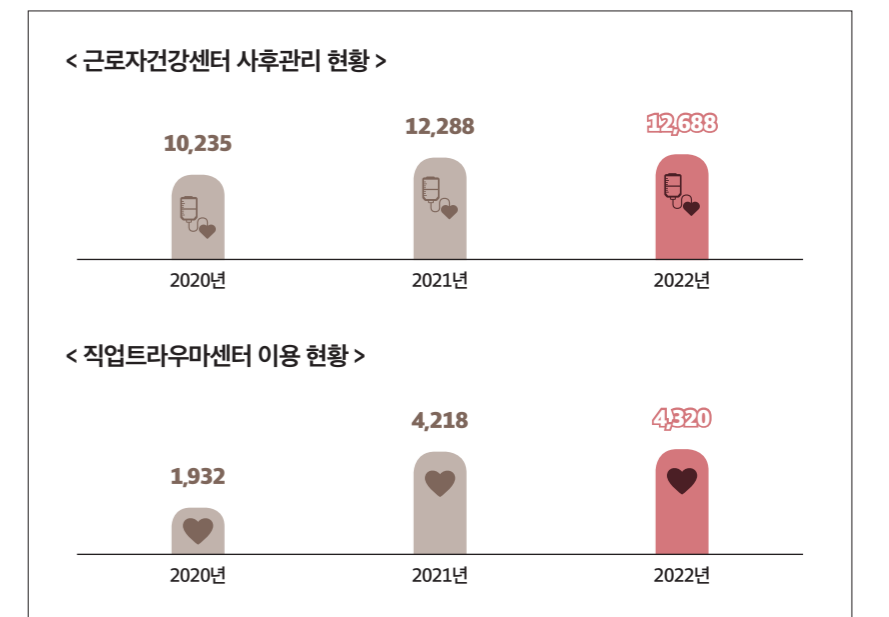
##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약 223억원 규모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6개 지역에 직업병 안심센터 10개소를 신설하고, 권역별 협



##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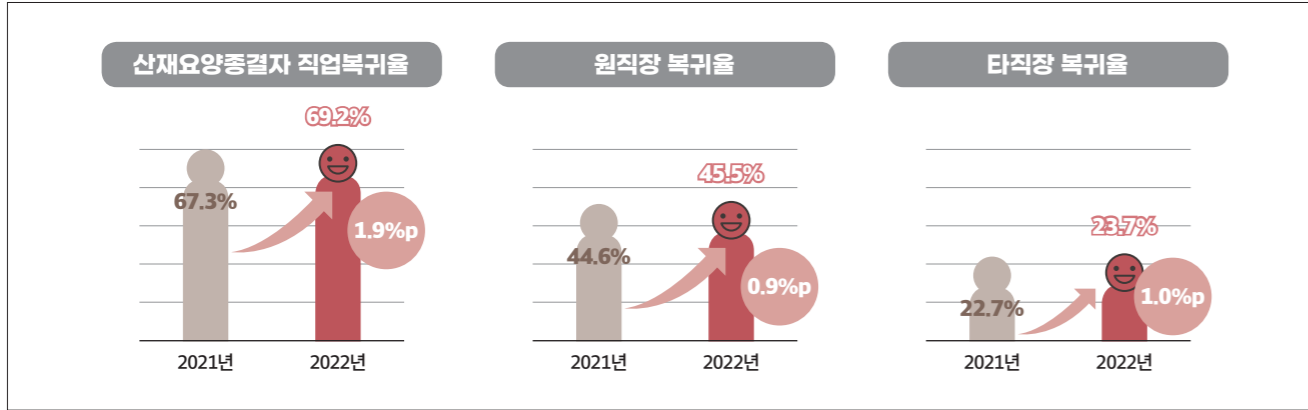
산업·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법·부당이 아닌 준법의 테두리에서 구축하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력병원 81개소와 함께 직업병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별 협력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근골격계질병 신속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했습니다. 맞춤형 요양·재활서비스 지원과 직장 복귀계획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요양 종결자의 직업복귀율을 1.9%p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산하여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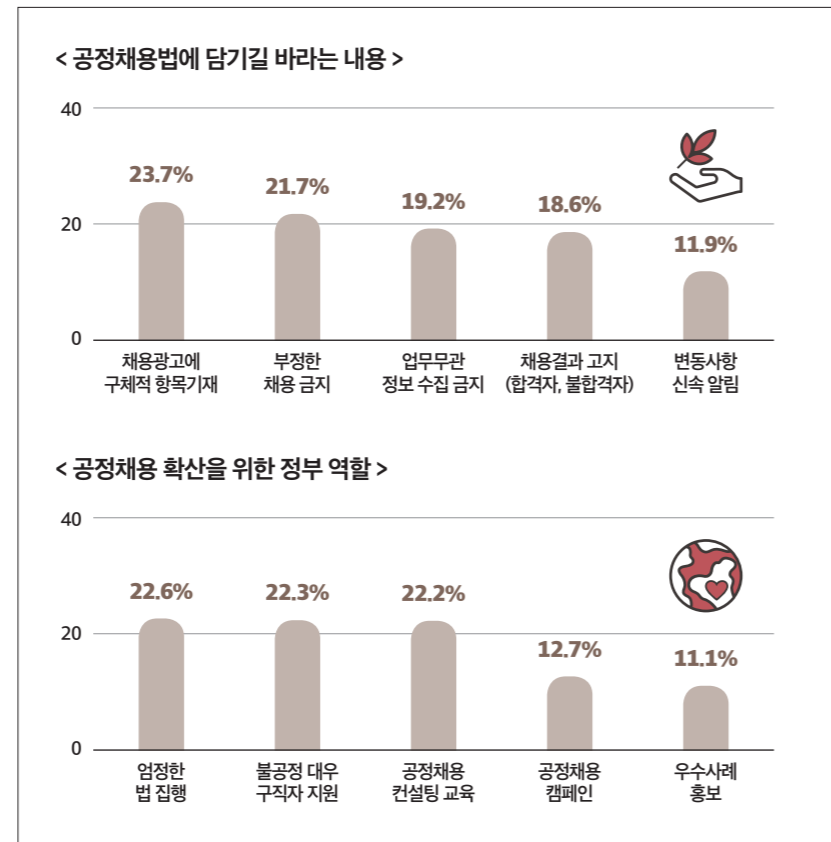
**(조선일보,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기로')**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년·기업·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채용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정한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용심사비용 전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청년들이 자주 겪는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채용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10개)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이하 공감채용)을 실천한 기업(20개)을 발굴·시상하고, 공감채용의 정의·운영방식·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2022년 공감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감채용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265명)·신용제재(438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 국내 법체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만 6,000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사용자업장이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체계 구축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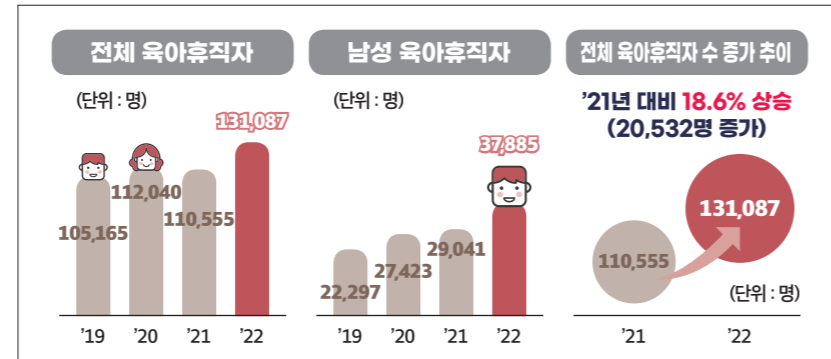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감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 시범실시(2022년 60개소)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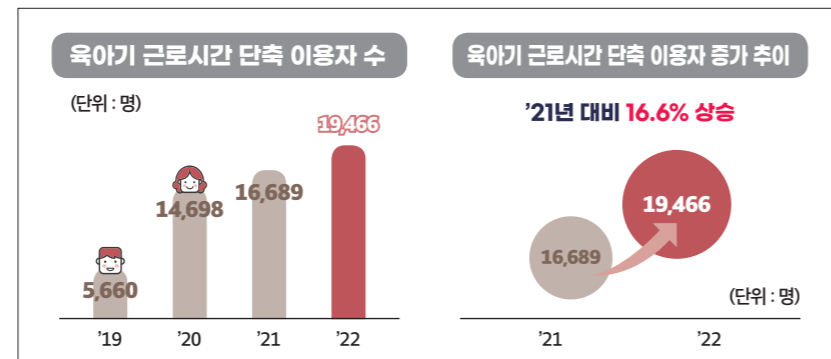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통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3만 6,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처음으로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4.30)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	287	106	84	102	127
근로손실일수	1,140,262	687,292	646,099	1,058,951	275,394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첫째(2022년 5월 10일~2023년 4월 30일)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 평균 145건 대비 87.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27만 5,394일)가 대폭 감소하여 이전 정부 평균 88만 3,151일의 31.2%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수노조, 초기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회계·세법, 노동법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정부·국회·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를 통해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4월 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 강요·방해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채용 등 차별 등 금지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로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업종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시간 사업장 감독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2022년 7월 18일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체회의(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업종·규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12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해결이 공정과 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제로 여겨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 역사상 첫 감독 계획 발표 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고, 올해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해결을 목표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직무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직종(돌봄·정보통신기술업종 등)과 지역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760여 개소에서 총 3,900여 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600개소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운영 설명회를 430여 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을 4,805개 기업에 지원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등 자발적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100개 기업에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구축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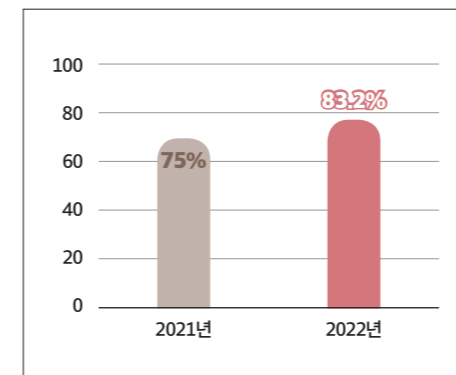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당초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2년 8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 설치율 확대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였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부·산업부·공정위),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조선

< 노사협의회 설치율 >



업 상생협약'이 발족되었습니다. 상생협약체는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원·하청 노사·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직접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 외연과 내실을 다지고,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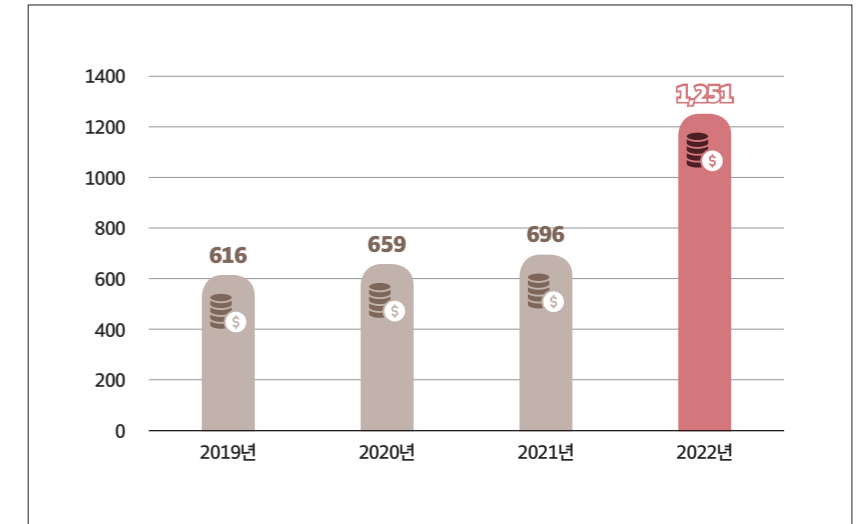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으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임금 인프라 확충,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등 다양한 임금·직무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실천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으로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임금 평가체계 컨설팅 >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2022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청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및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장의 동향·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분쟁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조선·철도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이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쟁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갈등의 체계적인 예방·조정 노력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진하여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평균 40~60분) 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는 4.3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46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음 선보인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75→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서울남부, 인천, 안산, 부산, 대구, 대구서부, 전주, 천안)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소가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 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고용둔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여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및 뿌리 업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총 1만 2,663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Industry-Belt) 단위의 특화 취업·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조선업, 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하여 고용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성으로 원하는 서비스 신청이 어렵고, 고용센터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과중하여 방문자에 대한 심층상담

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통합채널 구축,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 및 업무 자동화 등을 위해 (가칭)고용24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7월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2개 장려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36분→4분)되고 온라인 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칭)고용24’ 한 곳에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채널(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처리 등에 대한 자동심사 기능을 구현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도 2022년 5만 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잡케어)’에도 2022년 3만 1,430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용센터 등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 대국민 잡케어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에서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하여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취업의욕 향상→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2022년 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2023년 356억원) 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 군산시 등 기존 6개 고용위기지역의 충격 완충 및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을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 설립 등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도 확대 개편(2023년 70억원)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여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4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으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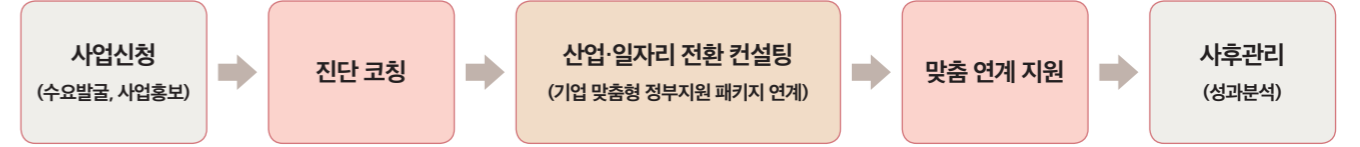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산업별 협·단체 등과 연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구축(2022년)하여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하여 산업전환 계획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업 재직자들이 새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이직예정자의 전직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1,433건 수행(2022년 목표 1,300건 대비 초과 달성)

2023년부터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에 사후 컨설팅 단계를 신설하여 컨설팅 종료 후 6개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을 조기포착하고 기업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환지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경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기업 DB를 구축했고, 향후 확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산업 등에서의 고용변동 파악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세부 산업별 고용통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2월까지 노무제공자 128만명(2021년말 대비 135.5%↑, 누계 기준), 예술인 17만명(2021년말 대비 64.7%↑,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3,580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만)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80만 9,00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급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42만 9,000명에게 5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고, 올해에도 20만 1,000명에게 11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3년 3월 기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 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사업장 2,144개소가 가입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균형수지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갈 것입니다.

##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게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명에게, 올해 2월까지 72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0.3%에서 33%로 2.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2023년 1월)) 2023년 상반기 중 노사·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직급여 대상·지급수준·기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바탕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핵심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구조화하여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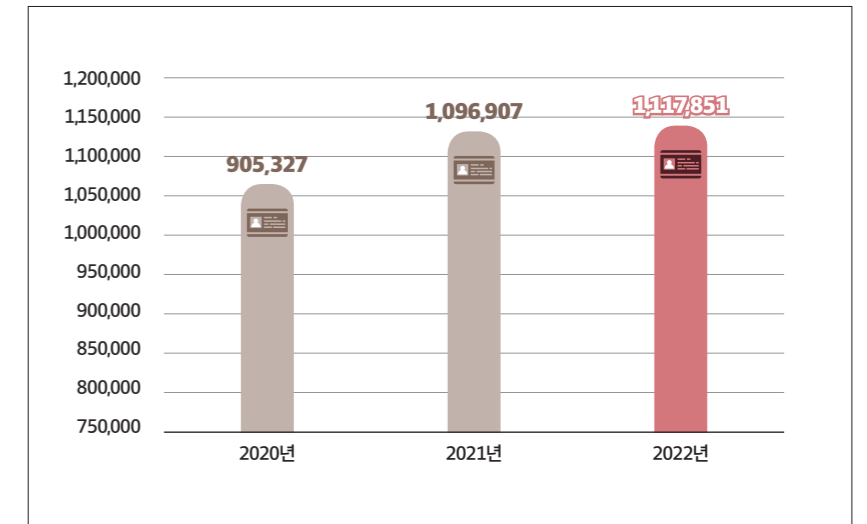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재학, 재직, 이·전직, 중장년 등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312만 1,000명이 카드를 발급받았고, 15만 2,201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71만 2,433명이 훈련을 받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야는 서비스업, 기초자격증 등 과정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국가기간 산업에서부터 정보통신·전자 등 디지털 분야까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공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도 2022년 기준 3,169개소이며, 민간학원 등 전통적인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삼성·SK·Microsoft·Netflix 등 첨단·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K-디지털 트레이닝(67.4%) 훈련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 취업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인원 >



생애단계별 지원현황은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49개 직종(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등)에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815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신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직단계는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디지털·신기술 훈련기회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2만 2,394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비중이 기존 직업훈련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3년차인만큼 ‘훈련생이 만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더욱 확보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디지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직단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플랫폼종사자에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4개 직종(인공지능·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2023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수시심사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직종 및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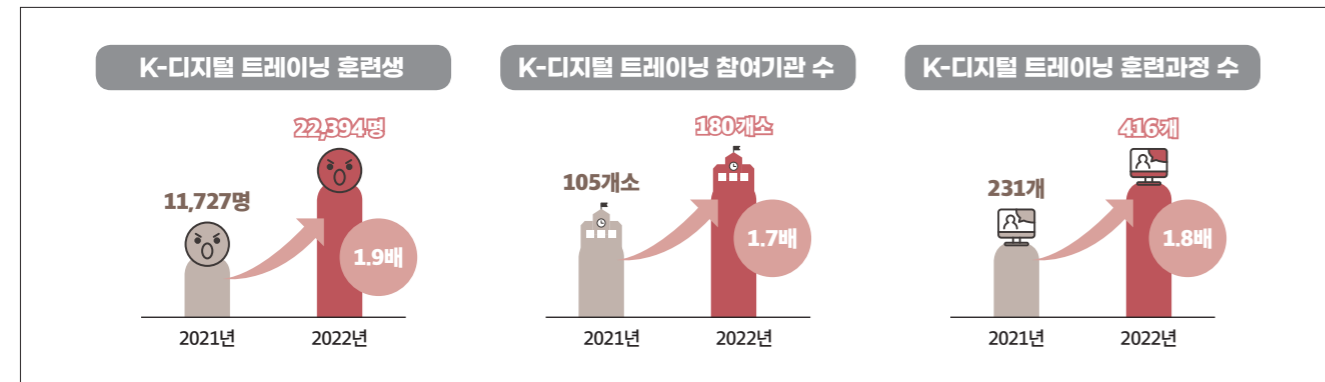
이·전직 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

동·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해양 플랜트 특수용접(경남),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충북), 그린에너지 설비 기초·응용(전북),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울산), 항공기 전기·전자 설계(인천) 등 2만 5,075명 규모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만 2,43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별 전문가 및 대표기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화과정 발굴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화과정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심층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집계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1:1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3년에는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현행,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 → 개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하여 더 많은 중장년 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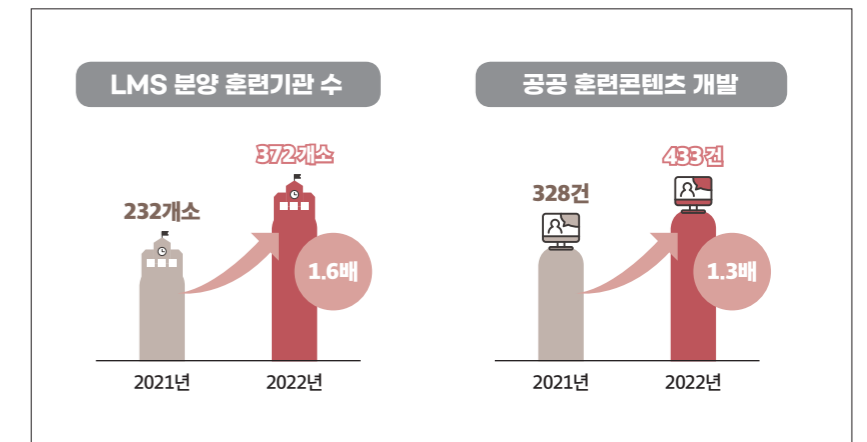
기존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훈련의 교수자·훈련생, 훈련생·훈련생 간 상호작용 부족과 실험·실습의 현실감, 몰입감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2회),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24건), 네이버, Spatial 등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민간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 다각적 노력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지향적 훈련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4년제 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강좌(7개 강좌, 280명)에 시범 적용·운영하여 효과성(메타버스 기반 원격훈련 만족도 3.88점, 일반 이러닝 만족도 3.57점)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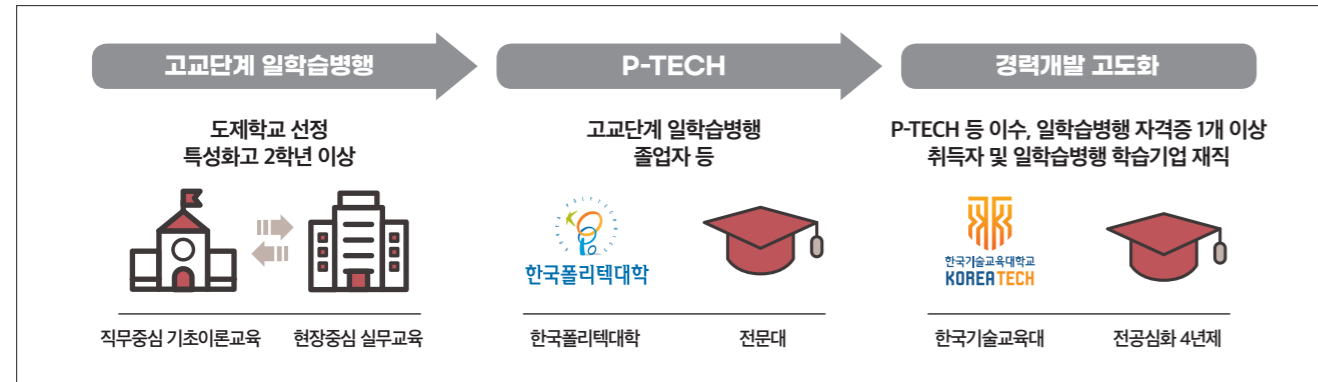
이외에도 민간훈련기관 등이 원격·혼합 훈련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을 60% 이상 확대하고, 높은 비용과 난이도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공공훈련 콘텐츠 개발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표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방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계 활용 가능한 이러닝,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STEP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훈련모델을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 >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운영으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체계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경로 확보를 위해 전문대 과정(P-TECH)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 유능한 청년인력의 지속적 확보,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개발 고도화' 제도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중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54명이 훈련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2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일·학습병행 훈련 분야를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첨단분야 훈련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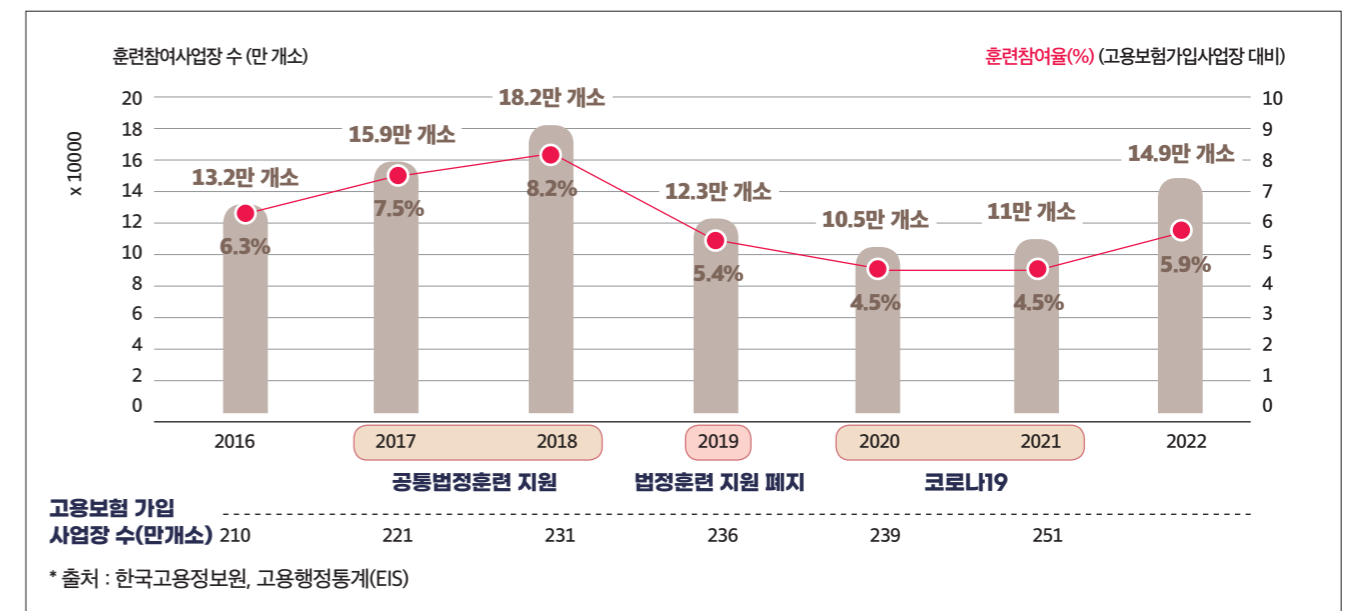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추진된 기업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HR 전담자 부재, CEO 관심 부족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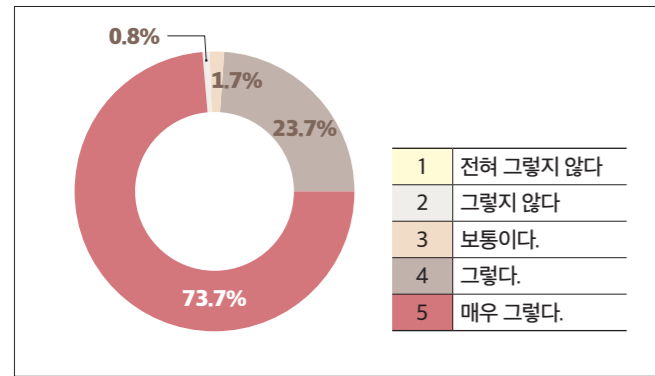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113개 기업에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제공했습니다(2022년 총 71억원, 기업당 평균 640만원). 특히 452개 기업에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7%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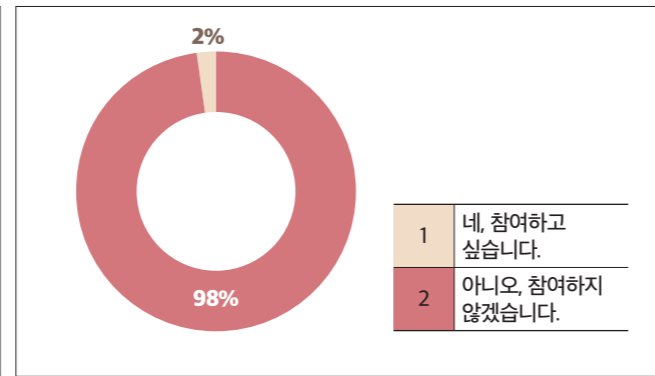
< 정부 지원 훈련사업 중소기업 참여사업장 수(만개소), 참여율(%) >



< 사업참여 만족도 >



< 재참여 의사 >



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8%는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1,9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 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바우처로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여 2022년 중소기업 1,199개소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위탁훈련 시 자부담 없이 훈련비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훈련 시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의 실비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2022년 1,280개 기업 5만 7,838명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수료율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신 기업별 최소훈련시간을 이수하면 1인당 14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대학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훈련 확대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전국 20개소에서 디지털 인프라 개방 및 공유·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지난 3년간(2020년 13만 8,319명 → 2021년 14만 2,114명 → 2022년 16만 1,102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훈련과정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또는 산업별 선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하여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을 전담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HRD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발굴	• 중소기업 DB, 지역별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발굴 • 메일링,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상담
HRD 기초진단컨설팅	• 업종, 훈련역량, 규모 등 기업정보 기반 진단·분석 •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과정개발컨설팅	• 직무구조,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성과컨설팅	•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심화컨설팅	• 기업 경영전략 및 직무분석, 재직자 역량 모델링 지원 • 맞춤형 능력개발로드맵 수립 및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이를 위해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30개 중소기업에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 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훈련 필요 기업 발굴을 위한 통합 DB를 구축했습니다(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전국에 주치의 162명을 배치했습니다. 2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하여(2023년 2월 2일) 중소기업 대표 및 HRD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체계적·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추도록 주치의가 기업을 밀착 관리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로드맵 제공, HRD 담당자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영세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269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

##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의 문화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2014년)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2022년, 10만원→11만원)하고,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480억원(2022년~2027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022년 12월)’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즐기고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1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1년 1.81배

이에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등 약자 친화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득별·지역별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2022년 9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되었고,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일상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까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담당자 교육(229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문화누리카드와의 만남은 병원을 드나들며 희망 없이 아픈 몸으로 허공만 응시했던 회색빛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카드 발급제한 기준인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FGI·통계분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별·수준별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1, 2차 시범사업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도 운영과정부터는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플랫폼종사자의 단계별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심사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시심사를 진행하여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40개 기업 1,355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과정별 사전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닌, 기업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해 훈련인정 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으며, 과정별 수수료에 따른 지원이 아닌 기업 전체 훈련 이수시간에 비례한 지원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훈련기관이 자유롭게 훈련내용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획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주기별로 훈련기관을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23년 90개 기관 시범선정·지원).

앞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22년 7~12월)**

- (조사대상) 497개관
- (편의시설 설치율) 준공 시 기준 시행법 적용 설치율 71.6%, 현행법 적용 설치율 67.6%
- \*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 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2023년에는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2022년 기준 3,080명 활동)'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을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6070세대의 문화참여 열망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Z 드림머스(문체부 2030자문단 21명)' 운영을 본격화하여 청년이 만드는 문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등 국민이 문화누림의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세대의 인생경험을 후배세대와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학교 밖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881회 신규 운영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과 종교차별 예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시한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 연간 103만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는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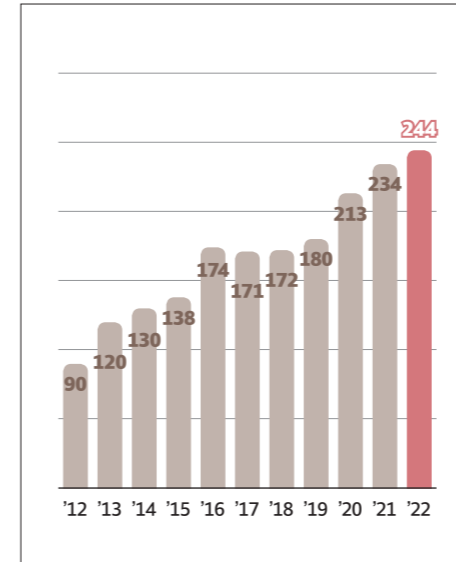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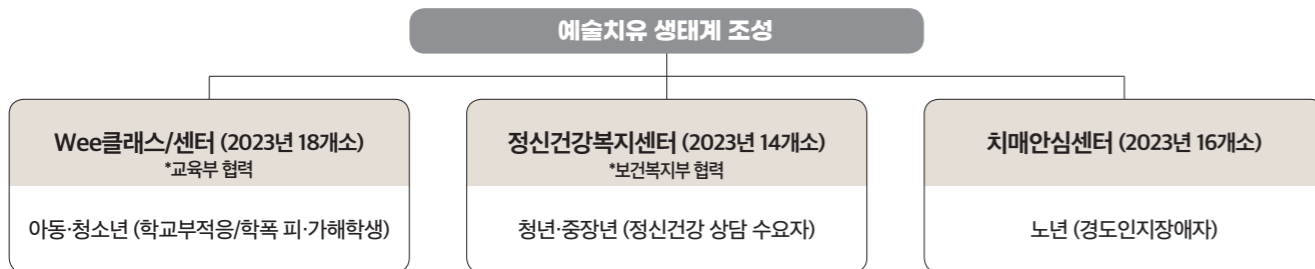
아울러 2023년 2월 말에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약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2023년 51개소), '꿈의 댄스팀'(2023년 20개소) 운영과 함께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은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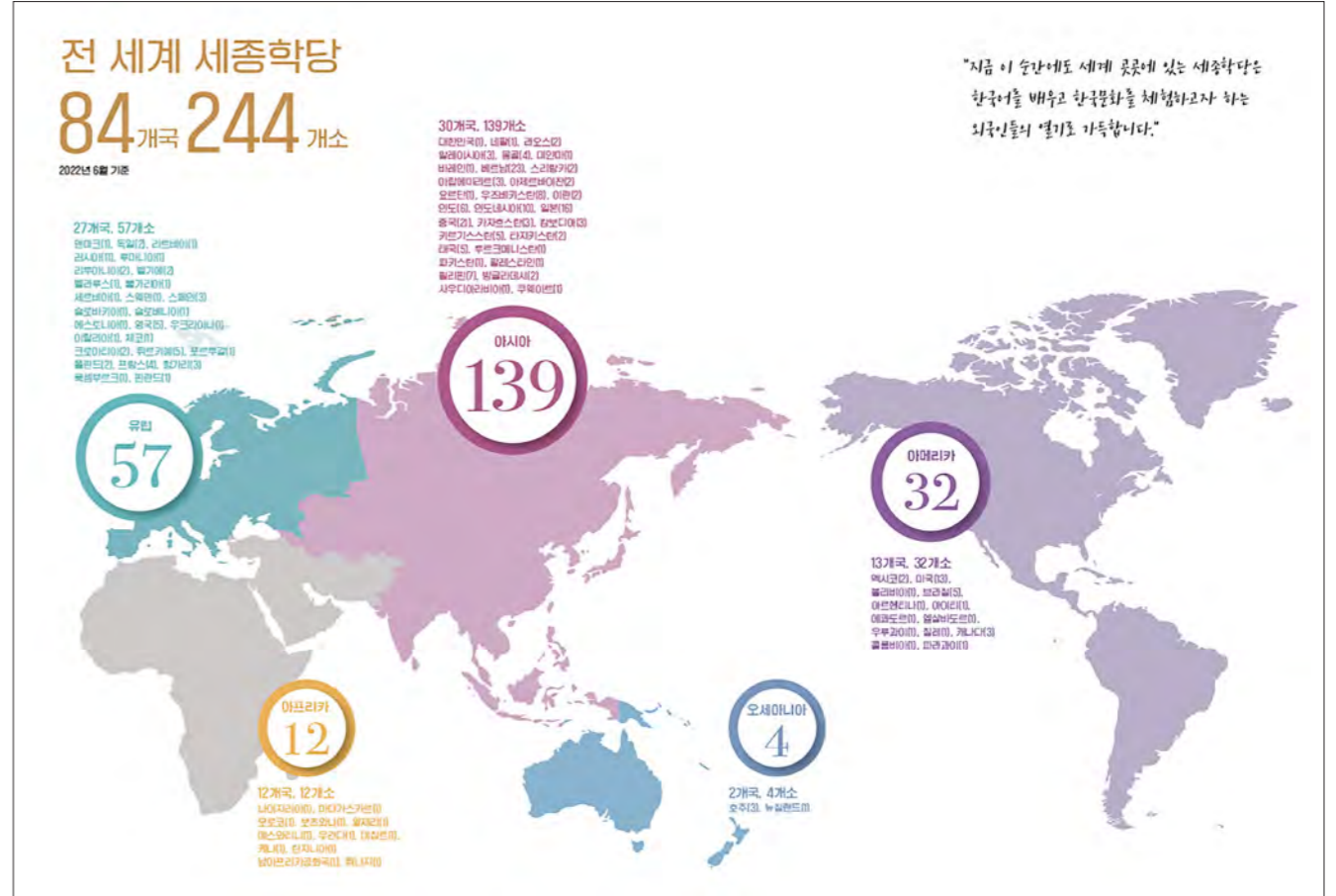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여행지 길위의 인문학(장애인 대상)



2012년 이후 세종학당 수 변화



2022년 지정기준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순차 개편하여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윤석열정부는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진되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한복 원단, 한지 활용 의료용 멸균 부직포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금속·옷질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86개사를 지원한 결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44.7%를 크게 상회한 9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통문화산업 인프라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이 전통문화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전통문화의 매력과 가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예술인 김연아와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었고 프랑스·멕시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의 마중물이자 한국어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려 2022년 244개소로 지정 확대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종학당 최초 개설 당시에 비해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최초로 메타버스 세종학당 플랫폼을 구축(2023년 정식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한국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1 '우리말겨루기-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특집'(2022년 6월 27일), JTBC '특파원 25시'(2022년 12월 19일), KBS1 '동네한바퀴-LA편 2편'(2023년 3월 25일) 등이 방영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SBS '나랏말싸미'과의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572억 원이 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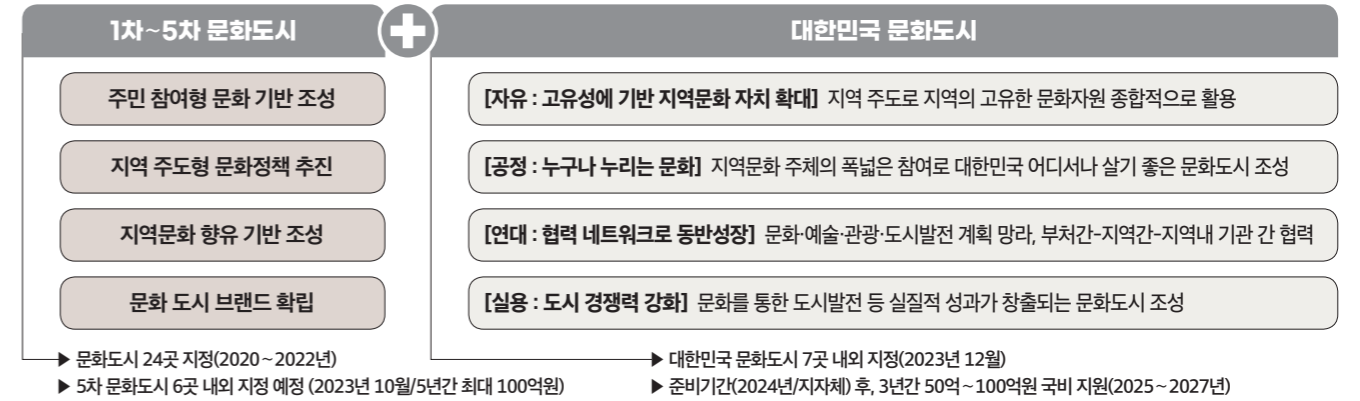
2022년에 한글·한국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을 원천으로 하는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53종의 한글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국어 말뭉치(2022년 누적 22억 어절 → 2027년 누적 27억 5,000만 어절) 및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말뭉치(2022년 누적 2,750만 어절 → 2027년 누적 8,850만 어절) 구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의 원천자료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문화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2023년 3월 23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집중 지원을 위해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문체부 문화활력지수 기준 하위 30% 지자체(69개소) 대상 공모, 2022-2023년 17개소 지원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게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함께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원,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부 최초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간인 예술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생계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의 창작 열기가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2022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명, 추경 2회, 1,012억원)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원)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의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와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연장의 안전설비 설치와 방역인력을 신규 지원(2022년 총 348억원)했습니다.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년간 지원사업을 확대(2021년 1개 장르(공연) 70억원 → 2023년 5개 장르(공연, 문학, 시각 등) 192억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의 선결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하고(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2023년 3월)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진)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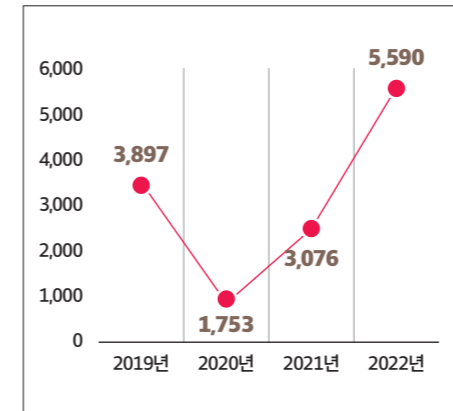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서계동 국립공연예술극장, 국립당인리문화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을 포함한 문학·공연·미술 장르별 기반시설과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설계·공사 중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와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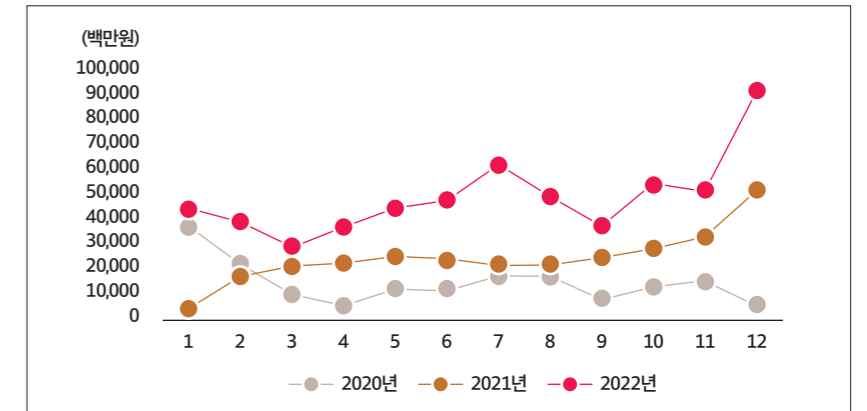
### 공연시장 재도약, 미술시장 신성장 등 한국 예술의 산업적 성장 견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했습니다. 2022년 공연티켓 판매액은 5,59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897억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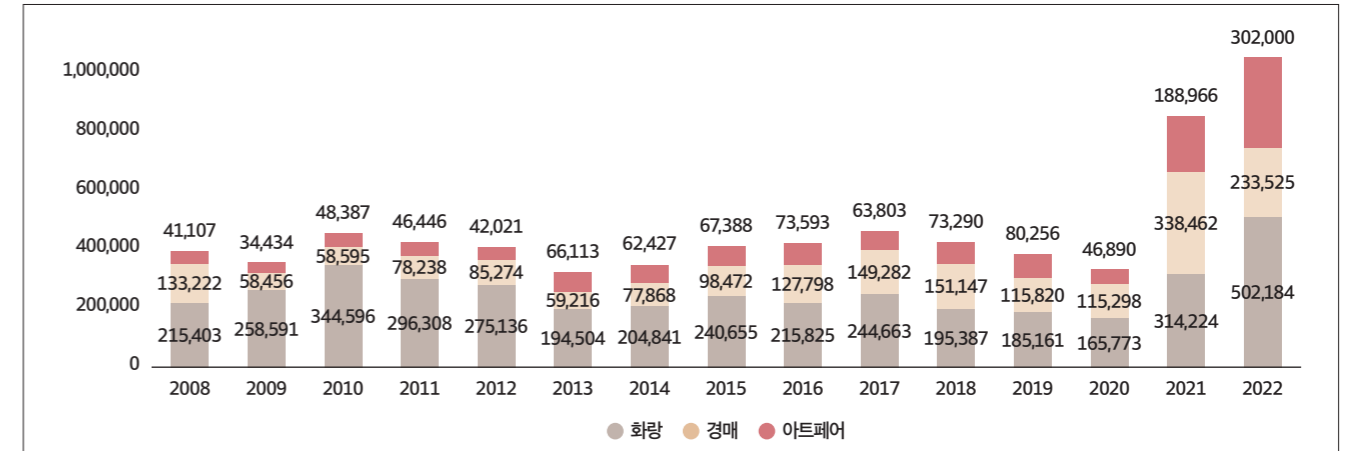
< 공연예술 티켓 판매액(통전망) >



< 2020~2022년 월별 티켓 판매액 추이 >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추이 >





비 43.4%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협업하는 공연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24개 공연, 87억원)하여 공연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우수한 콘텐츠 영상화(90편, 4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미술시장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해 전속작가, 작가 비평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작가의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2021년 1,132명 → 2022년 1,537명)하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 지원(8개)을 통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29개 언어권, 218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7개 언어권, 121명 수료)하여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120개 기업)하여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264억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원)하여 예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예술가가 창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공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바우처 사업을 도입(21억원)했습니다. 10월에는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하여 예술 창·제작 영역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하여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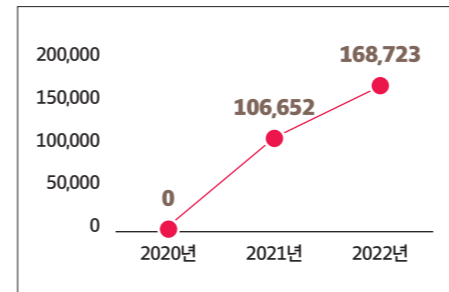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연계 부가서비스 및 제휴 할인 제공, 할인적용 문화행사 확대 등 ‘K-문화예술인패스(가칭)’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지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별 산재실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지속적 안내·홍보 및 가입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운영모델 정립 및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시행, 서면계약 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산재실태 분석(2023년 4월~), 예술인 산재보상대책 관계기관 협의회(2023년 3월~)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이수자 4,950명(2023년 1~3월), 서면계약 신고상담 135건(~2023년 3월), 신문고 신고 82건(~20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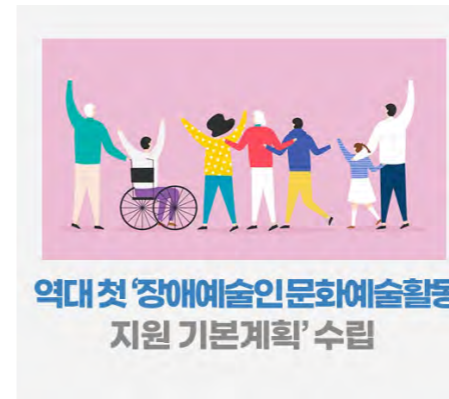
###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마련

윤석열정부의 약자 친화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을 위하여 2022년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장기적·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의 창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2022년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문화예술행사로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2022년 8월 31일~9월 19일)하여 20일간 7만 2,103명 관람과 작품 25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장애인 프렌들리’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공간으로 표준공연장(2023년 하반기 개관)과 표준전시장(2025년 상반기 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장애예술인 특별전

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대표공연과 전시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동창작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국 문화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거점별 무장애 창작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창작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하에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예술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2022년 5,268억 원)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2017~2021년) 매출 5%, 수출 9% 급성장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영국 모노클, 2020년)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의식조사, 2022년) 국민 66%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022년 5,268억원의 자금을 콘텐츠 산업에 지속 공급하여 산업성장을 견인\* 했고, 드라마펀드 조성(400억원, 2022년 8월) 및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 보증 우대 실시(2022년 9월)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수출입은행, 2022년)

한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신속 대응하고자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을 신속 심의(2주→1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2022년 9월)하고, 인터폴, 각국 정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IP펀드(2023년 1,500억원 조성 목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문체부 표준계약서 재점검, 신진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계약 관련 법률 지원 확대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문체부 장관 주재로

창작자 좌담회를 개최(2023년 3월 24일)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상담을 총괄 지원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23년 4월 17일),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표 장르의 단계별 지원(인재 양성, 인프라, 창·제작지원, 해외진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해 지역 기반 음악 창작소 조성을 완료했으며(전국 17개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중음악 전문인력,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2022년 328억 원)하여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기술 접목 음악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2023년 1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음악·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음악과 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K팝 쇼케이스 및 B2B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게임인재원에서 전문인력을 159명 육성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사(2022년 73개사)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업체의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315건) 등을 통해 신규고용 427명을 창출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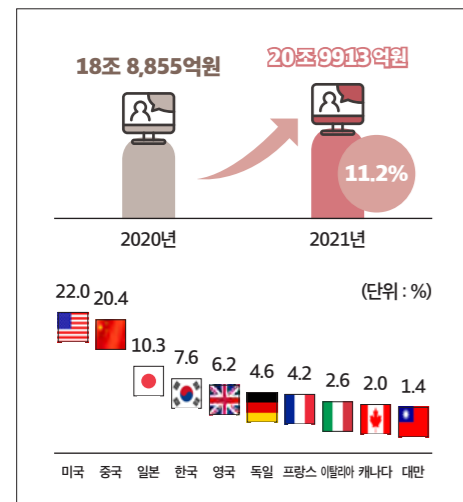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게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K-영상콘텐츠의 미래 주역들을 지속 육성 중으로, 제작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내외 주요 영화제 92건 초청, 18회 수상

또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2007년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2023년

#### < 2021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감독상



K-웹툰 해외진출 성과

800억 원)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증폭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칸영화제 수상 등 K-무비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때, 독창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계속 창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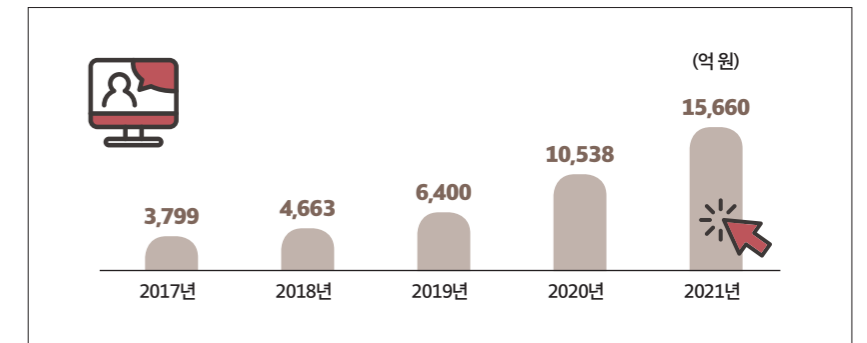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드라마를 육성했습니다. 기획개발과 연계한 제작지원을 2022년 160편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재벌집 막내아들'을 비롯한 성공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하여 1억 3,8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등 K-드라마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 음원교체, 번역 등 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을 2022년 47개사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만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웹툰 IP의 해외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전세계에 K-웹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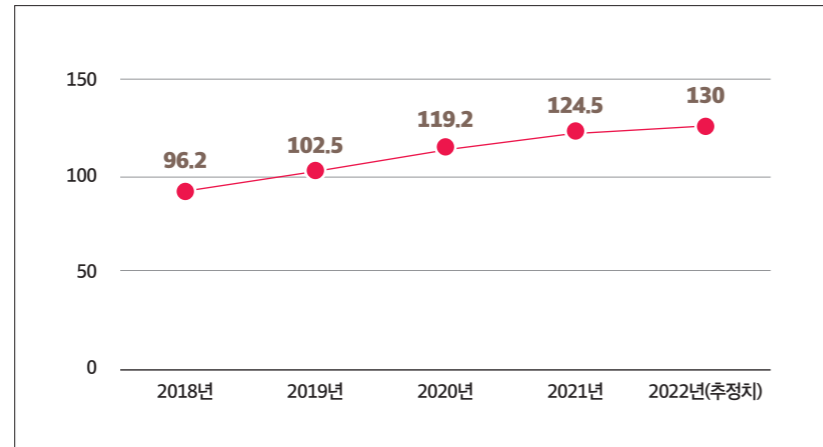
\* 다양성 만화 제작, 출판 지원 등 207개 과제 지원, 웹툰 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44개소 운영

####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앞으로도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툰 IP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



###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K-콘텐츠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확대 및 한류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를 개최하고, 5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2022년 10월, 베트남)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관산업 제품 상설 종합홍보관을 개관(2022년 12월)하여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디자인상품, 생활용품, 수산식품, 전통문화, 관광 등 266개 브랜드 2,526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있으며, 2023년 2월까지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한류 행사 및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내 한류테마파크(K-원더랜드) 조성(2022년 10월) 및 ODA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한류 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저조한 한국문화축제는 과감하게 폐지(△92억원)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수출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을 전담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진출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 2027년 50개소)와 관계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및 K-박람회 지속 운영, 한류협력위원회 개편 및 격상 추진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윈스톱 통합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소(2022년 9월, 강남 역삼)하고, 인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2022년 12월).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2023년 3월)와 제작비 세액공제(2023년 1월)를 도입하고, OTT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운영(2022년 9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를 2022년 4회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컬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산업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동영상의 배열·노출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여론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필수역량으로 부상하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0개 강좌), 노인 등 소외계층(115개 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2년 기준 참여인원이 48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량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전문화했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교안을 개발하여 소외계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체계화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2년에는 아직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인 경상남도과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구축(2022년 9월)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통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TV 1만 5,300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가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7%)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포털뉴스 제공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1기 협의체를 구성(2022년 5월)·운영했으며,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 >



< 미디어 나눔버스 >



< 음성-자막-수어 변환 >



< 2022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



또한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강인원 1,444명)했으며, 시민들이 팩트체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 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022년 7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정식 출범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에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손해배상액은 초고속 인터넷 6배, 이동전화 8배를 각각 10배로 상향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의 고지 방식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조정신청 1,060건에 대해 82.9%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고, 1만여 건의 조정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증원(10명→30명)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023년 1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운영(2022년 5월-)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자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사례)**

- 피해상담 신청인 모친이 스미싱을 당한 막막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스미싱 피해예방 및 명의도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해결사례)**

-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속아 동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당했는데, 통신분쟁조정위가 개통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개통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 처리함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유형 피해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했으며, 유사사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태를 기반으로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2022년 5~8월)했으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사실조사로 전환(2022년 8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하여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2년 141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2022년 9,448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육인과 소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선수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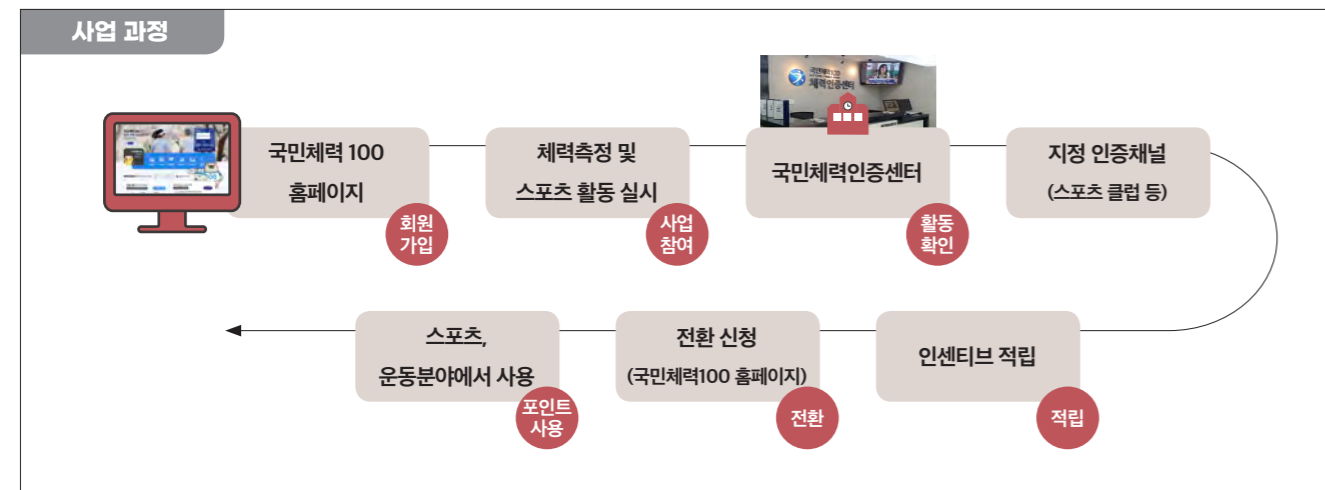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하여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지원기간 10개월 → 12개월, 지원단가 월 8만 5,000원 → 9만 5,000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 참여율이 향상(2021년 60.8% → 2022년 61.2%)되었습니다.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3년 시범운영, 2024년 본격 도입). 체력인증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 등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시 체육시설 이용이나 체육용품 구매에 사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정부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 체육 전문가들을 추가하여 체육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인상(2022년 7만 원 → 2023년 8만 원)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제정(2022년 8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2022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2월 14일, 진천선수촌/체육인 1,600여명 참석),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체육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개 학교)을 신설하여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하여 실제 체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종목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도입하고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교육부 정책연구, 2022년 12월)

: 증가 필요(68%), 적정함(11%), 기타·무응답(21%)

<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2022년도) >



골볼 리그



휠체어 컬링 리그



휠체어 럭비 리그

만 8,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간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용산공원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 체육현장에서도 쉽게 사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확대(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하고, 체육현장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하여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처리건수 72.4% 증가(19.2건 → 33.1건), 심의건수 41% 증가(9.5건 → 13.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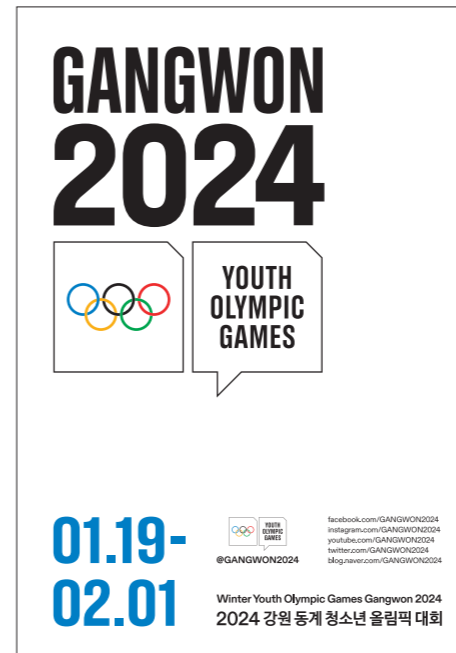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5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670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설하여 노령층에 적합한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12개소,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최초로 개최(2022년 9월, 인천)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전을 본격 도입(3개 종목, 골볼, 휠체어컬링, 휠체어럭비)하여, 2022년 12월 골볼 여자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며 28년 만에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전 지원 종목을 점차 늘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어울림체육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89억원의 용자를 실행했으며, 기존 스포츠산업펀드(2022년 1개 286억원 결성) 외에 스포츠출발펀드를 신규 결성(2022년 2개 90억원)하여 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개 과제 2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물에 대한 실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전 세계 200여개 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38개국에서 실시하는 한편,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진흥방안’을 발표(2023년 1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를 매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K-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에는 2기 조직위원회(이상화·진종오 공동 조직위원장)가 출범했고, 김연아·윤성빈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폐막식 총감독단을 임명하여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문화올림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개회사(2022.10.19)**  
“우리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의 스토리와 K-POP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한국인들께서 저희를 환대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2022.10.19)**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022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국제관광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국제 관광시장도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컬처를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일자리 제공하여 1,400여 명의 휴·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총 5,700억원(2022년~2023년 4월) 규모의 관광기금 용자를 시행하고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3,843억원을 지원(2022년)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2022년)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8,000억원 규모로 확대(5,000억원 추가 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추가결성 계획 발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0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펜션업 층고 기준을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온천장 등 개별시설기준도 완화했습니다(2023년 3월). 또한 관광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재창업 가능하도록 규제완화(2023년 2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발빠르게 추진했습니다. 대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달’(2022년 6월) 기간 중 67만 4,000여 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2022년 6월 16~19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할인 제공하고 참여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해 관광업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서울 페스타 2022’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2022년 8월 10일~31일)했고, 2023년 행사(2023년 1월



12일~ 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1,60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게임 등 지역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2023년 1월)하여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습니다. 메가 K팝 이벤트(드림콘서트, 인천 INK 콘서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와 연계하여 전 세계 1억 6,000만 명 K팝 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뷰티를 테마로 한 ‘코리아 서머(뷰티) 세일’(2023년 7~8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협력단’을 발족하고, 쇼핑·교통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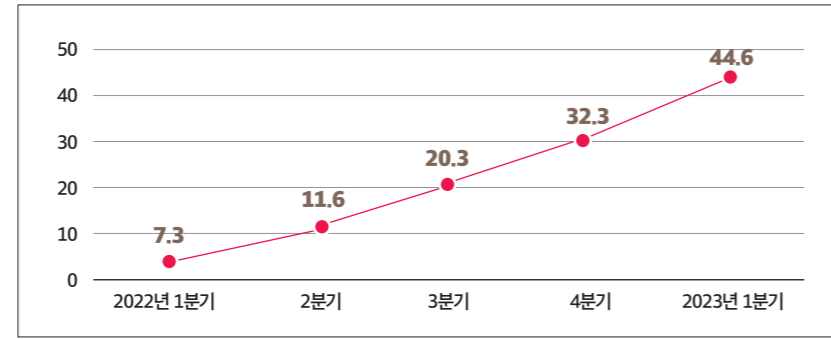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국제관광을 재건하기 위해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인프라를 복원하고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국제선 항공을 조속히 증편하였으며, 일본·대만 등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한시 무사증 입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2022년 6월) 무안지역 지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한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한국의 과감한 무비자에 일본도 따라온다”(자신감 있는 결단으로 외교상호주의 견인, 9월 15일 헤럴드경제),  
“8월 일본인 관광객 폭증 한시적 무비자 영향”(9월 30일 OBS)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 , 2019년 동기 대비) >



편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2023년 4월~2024년 12월),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보다 전향적으로 입국편의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2~3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거점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통한 대규모 세일즈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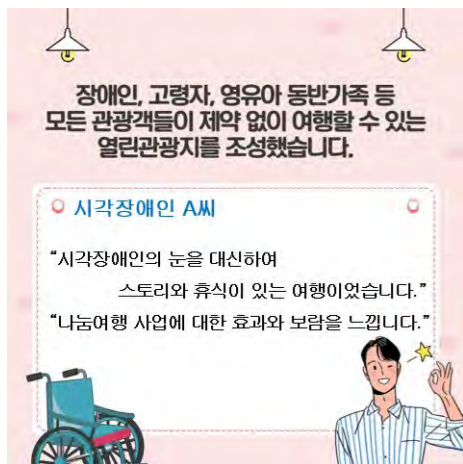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2022~2023년 신규 40개소 조성 중(누적 132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광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여행을 추진(2022년 236명)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중입니다. 투어케어는 관광취약계층의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상품기획, 관광활동 보조 등을 포함하는 인적서비스로 2022년에 18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화 추세에 따라 국내여행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동반 크루즈·기차여행·캠핑 등 시범상품 개발, 관광DB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며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여 콘텐츠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생활관광’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15개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지역균형관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처 융합 확산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2023년 6월)하고 있습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이밖에도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관광지·숙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2022년 2개소 시범운영, 2023년 11개소 확대 운영)하고,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제, 디지털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2023년 12개) 축제 현장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등(~2023년 40명) 축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수원 화성(2022년 7월)과 대구 수성못(2023년 4월) 일원이 개소하면서 XR(혼합현실) 모빌리티, AR·VR 가상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인·인제·통영 3개소를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가 조성 중입니다.

초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빅데이터를 수

##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0년이 된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집·분석·공유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통신사, 네비게이션,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와 지역 관광정보, 정책동향 등 데이터를 확충하고 분석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월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신기술 융·복합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2년 총 2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는 한국 관광기업 최초로 4개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현지 기관과 투자유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벤처기업의 중동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 범위 확대, 국제회의 기준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대전, 경주) 및 국제회의집적시설(16개소)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을 확대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한 해 동안 8개국 11개 도시에서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박람회를 추진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국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세적인 해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기존 분리되어 운영되던 웰니스·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통합한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신규 선정(2023년 2월)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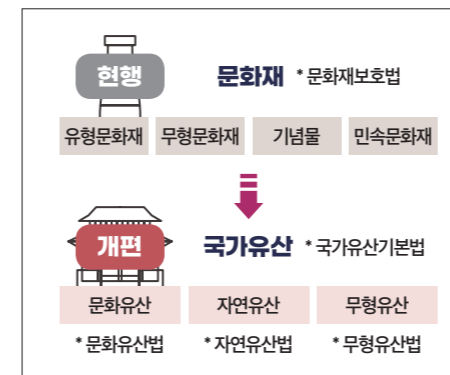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자산을 토대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가피하여 보존과 개발 간 갈등도 증대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국민(1,000명) 및 문화재 전문가(404명) 대상 설문조사(2022.3월,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국민 76.5%, 전문가 91.8%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국민 87.2%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유산’ 선택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 법체제로 개편 중이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2023년 9월 국회 발의되어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연유산법은 2023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내 국가유산 법제 개편을 완료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 문화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약 1만 4,100여 건의 목록을 구축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3년 역사문화자원 조사대상 : 광주, 전남, 제주지역(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약 1만 2,000여건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출연한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를 개최(5월 22일)하여 일반국민 1,000여 명, 6·25 참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초청되어 함께 관람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장애인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여 장애인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2022년 12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와대 노거수 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2022년 8~12월), 청와대 노거수 군(6주) 천연기념물 지정(2022년 10월)

- **장애예술인 특별전(2022.8.31~9.19)**  
: 7만 2,103명 관람, 장애예술인 50명 참여, 작품 60점 전시
-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2022.12.22~2023.1.16)**  
: 2만 4,014명 관람, 초판본 등 97점 전시



청와대 야간관람

작년 5월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다녀가셨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역사의 어울림 속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로 국민권의 증진

전 국토면적의 4.2%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유산의 규제범위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문화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하여 2023년부터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2023년 50억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3%(1,659건)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수·정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18억원 확대 지원(2023년 1,196억원)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419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확대(총 16종목, 2022년 ‘한복생활’, ‘웃놀이’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개 사업, 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하여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당 종목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 종목의 전승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9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 지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대상 1,46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문화유산 정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4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라·충청지역,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통하여 100건의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제공했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하여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162건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750건에 대한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를 제작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들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 3D 서비스 화면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 민간활용 분야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 현실화,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함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20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2022년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등까지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발표(2022년) 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매 단계별 대응인력 전체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감호위탁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는 월 2회

이상 밀착지도 하고, 피해아동에게도 월 2회 이상 대면·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이 사항과 보호관찰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피해아동 면담 기법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뉴얼 개정을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이른 출소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찍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또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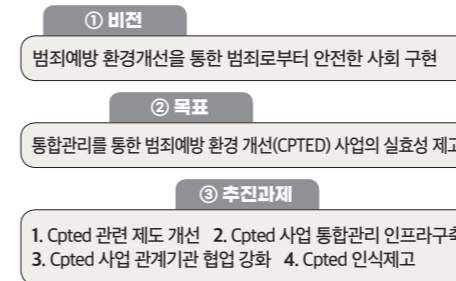
\* ①CPTED 관련 제도 개선 ②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③관계기관 협업 강화 ④CPTED 관련 인식 제고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2022년 12월)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CCTV 연계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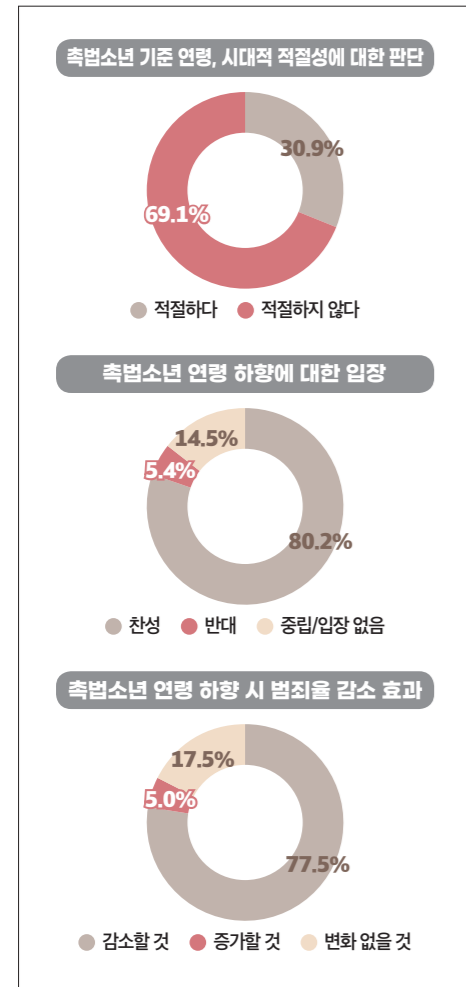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전담제 및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도입(2022년 10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흉악범죄자가 일정한 주거지나 생계대책 없이 출소하여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 < 범죄 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 촉법소년 연령 여론조사 >



\*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 제한, 직업훈련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

이를 위해 2022년 8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 생활관 운영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가석방자의 전담 생활관 입소 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되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촉법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2년 12월)하는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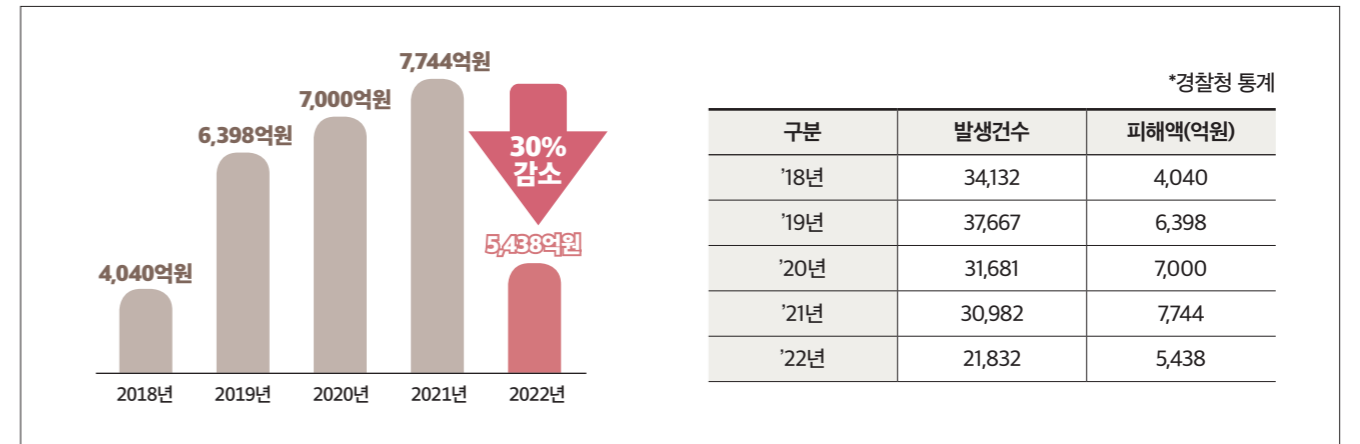
**무고·위증 등 거짓말범죄 처벌 강화 추진**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증죄의 기본·가중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재정 범죄 대응 현황 >

구분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계
자금세탁범죄 인지·기소(명)	78	55	33	97	75	92	122	146	73	79	151	1,001
보전처분(건)	120	111	67	78	91	94	125	158	129	114	131	1,218
보전재산가액 (백만 원)	33,285	2,774	7,190	3,742	34,117	34,179	189,583	138,623	54,615	721,098	66,215	1,285,42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정부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및 서울북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신설하여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와 같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 가상자산 관련사범 및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행위 등 국가재정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1,001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비 159%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기간 검찰이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1조 2,854억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후 폭리를 취하는 등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사범을 다수 적발하여 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최초 국내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총 178명을 적발(45명 구속)했으며 제도개선에 집중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발생건수가 약 30%씩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과 수준 높은 전자감독제도 운영 등을 통한 재범률 억제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법률구조 서비스가 산재되어 국민이 적절한 지원을 직접 찾기 어려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범행초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신변보호,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장소 제약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치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잇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잇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2022년 9·12월)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2023년 3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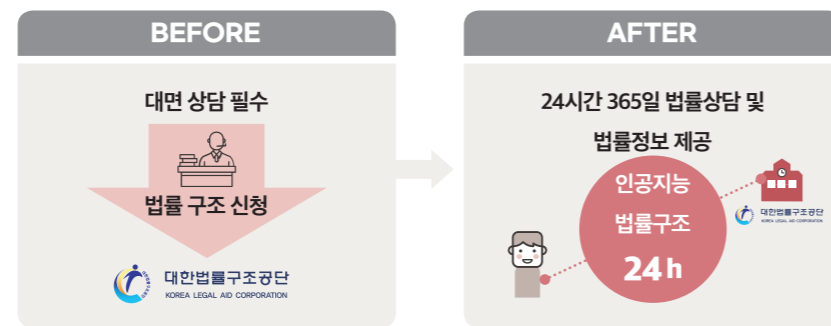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2년 6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16개 시·도)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 및 제도로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TF를 구성하여



각 법률구조기구·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형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등을 구성하여 법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잇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2021년 10개소 → 2022년 14개소)을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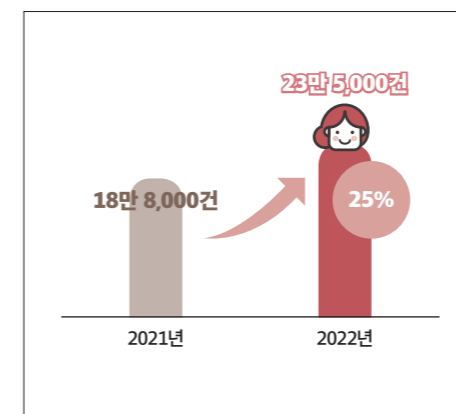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신설 등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3년 2월)했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임시거소 등 주거지원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하고, 2022년 5월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구축하여 교육부·EBS 등에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단위 2개소)’,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확대하여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사고의 근본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과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과거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넘어선 재난·사고와 앞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 **최근(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 30년 비교**  
- 강수량 +135.4mm, 강수일수 -21.2일
- **1시간 최대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일수는 11% 증가**  
- 1991~2000년 평균 1.7일, 2011~2020년 1.9일(전국 62개 지점 평균)

이에 윤석열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및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위험의 예측과 예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봄철 축제 인파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데



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 2023년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풍수해·감염병 등 10종의 재난유형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3단계에 거쳐 추진되어 2024년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거법률인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24년 1월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2022년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9,000여건 이상의 창고시설 화재를 조사하고, 특히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분류된 16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현장 인터뷰 등에 기반하여 2022년 12월 3대 대응 전략\*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민관 재난원인조사 심의·조정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민간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원인조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 (3대 대응전략) ①건축·시설기준 정비 ②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했습니다. 상향해 지원했던 주택피해 지원금에 대한 제도적

< 주택 전·반파 및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안) (만원) >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인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주택 전파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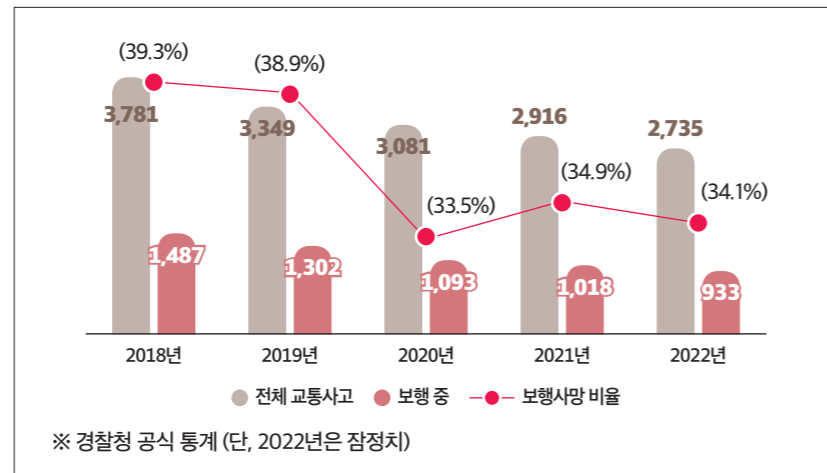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TF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현장기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 2월 5개 추진전략\*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5대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충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8월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제도 시행 및 활성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잠정)으로 2021년 1,018명 대비 85명 감소(8.3%↓)했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1%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범·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문화 전반에 걸쳐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



###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 추세에 따라 이를 지휘·관리하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계급별 4단계(초급·중급·고급·전략)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 범위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객관적 평가·인증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재난환경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VR)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소방학교 3개소에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보다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악화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도입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대구·전남지역에서 시범운영(2022년 8~12월) 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탑승한 '중증환자 항공 이송(119Heli-EMS : 119Helicopter-Emergency Medical Service)'체계 도입을 위해 2023년 2억 3,7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사 인력풀 20명 확보와 환자 인계를 위한 헬리포트 42개소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승대원과 의료인 대상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가동훈련을 6회 실시하는 등 2023년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정과제와 더불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중증환자 응급처치 내용 >

처치대상	①심정지 추정	②심인성 흉통 추정	③중증외상 추정	④아나필락시스추정	⑤응급분만 추정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범위확대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투여	탯줄 결찰, 절단

※ 출처 : 소방청, 2023. 4. 7.

##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원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가치료제 등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연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추진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감소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학회와 의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이 어려운 외상·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생이 해당 분야를 학부 시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73명이 실습 지원을 받았고, 시뮬레이터 술기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감염·신경외과 등 필수분야와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역 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5개 국립대 병원과 7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전공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고 지역의료기관은 수련 역량을 키웠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58개 의료기관 233개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56개 의료기관에서 7만 363개 병상을 운영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2022년 12월에 구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역 연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진주)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1,123억원, 2023년).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77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60명,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17명)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최후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9월). 향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2022) ▶ 5.6% (2027년까지 약 10% 개선)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2022) ▶ 60% (2027년까지 약 20% 개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2022) ▶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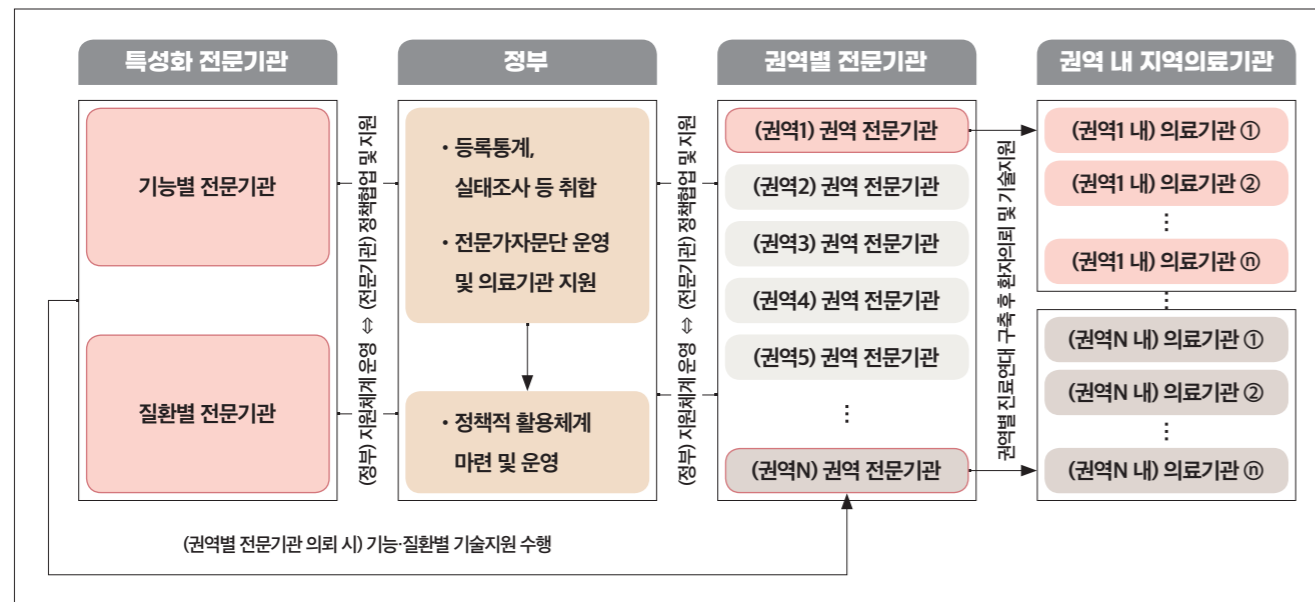
후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소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의 특수성·다양성 및 진료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 현장점검 및 통합운영회의를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다 역량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는 구체적 지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희귀질환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방식과 홍보를 확대해 전년 대비 지원건수 2,840건(16.8%), 지원



금액 155억 900만원(34.7%)이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 기준 완화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년 3월 28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하여 신속등재가 가능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아환자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만1세~12세) 구루병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아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공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2023년 2월)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 시설, 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 ▲키워드 검색, 검색시간 확대 등 추가기능 도입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미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과 자살률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조사 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 :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
- **사망원인조사(통계청) 및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2021년 기준)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 / 연간 자살사망자 : 1만 3,352명(2021년 기준)

이에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동네 의원에서 지역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동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많은 내원 환자를 사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ICT 기반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을 통해 내원 환자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2022년 10월에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인증했습니다.

\* 위대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한편 의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326개소에서 526개소로 확대(2022년 6월)하고, 의사 방문진료 시에 간호사 등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1,287개소 → 1,739개소)했고,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일차의료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가 장기입원 대신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휴식과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2023년 3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수가의 산방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2023년 1월)했으며, 이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여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2022년 10월 14일), 정신건강 홍보 주간 추진(2022년 10월 7일~2022년 10월 20일) 및 국민·공무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인 포럼(3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에게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는 등 많은 환자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77.8%), 재이용 의향이 있다(87.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윤석열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네가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앞으로 환자의 상시적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가계당 비용부담(20만~24만원)이 높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근거를 확보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대상 확대(만 12세 남아),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2023.3.6~3.31)

- 참여의료기관 : 3,421개소
- 총 접종 건수 : 7만 7,798건(보건소 726건, 의료기관 7만 7,072건)

접종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던 수동감시체계와 더불어 적시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를 정비했고, 의료계 등 입장 차이로 그간 사업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백신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백신 부족 발생 시 의료기관 간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도모했습니다.

#### < 공급방식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백신명	공급방식	백신명	공급방식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민간 개별구매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정부총량-사전현물
피내용BCG	정부총량-사후현물	피내용BCG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민간 개별구매 유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상반응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의와 국가예방접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구축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확대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생산·소비·생활환경 변화로 신종 먹거리 위해요인, 건강위해요인(유해물질·흡연 등) 관련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발굴 및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2022년 8~11월)를 시범운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항생제 신속검사키트 개발·사용 등을 통해 수산물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검사) 3일 → 3시간, (농산물 검사) 4~5일 →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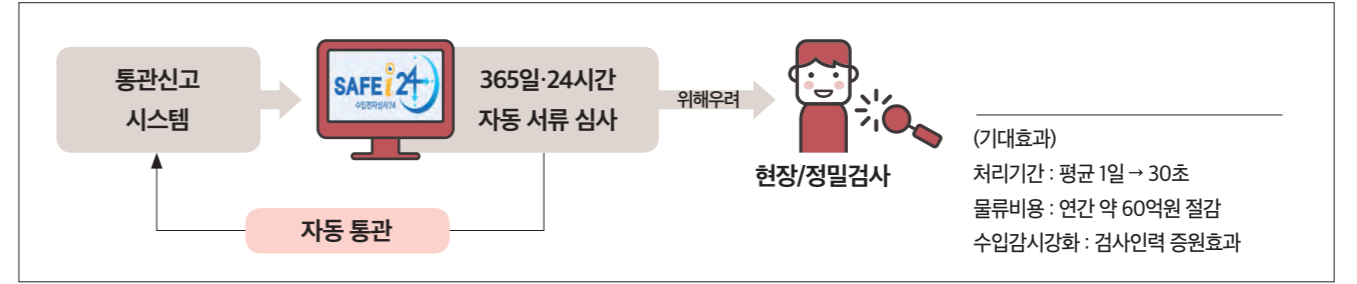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한시적 원료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2년 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도입(2022년 8월)하고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를 확충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 국민 안심도를 제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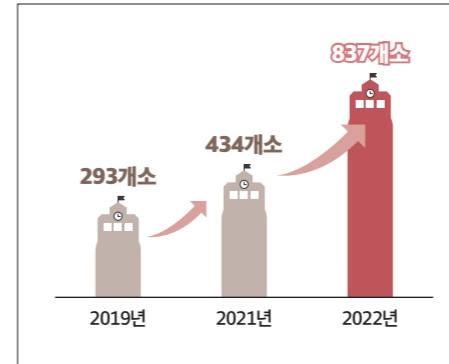
검사관이 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를 개발(2022년 9월)했고, 수입식품 등을 자동 신고수리하기 위한 법률(수입식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행되면 365일·24시간 자동처분(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마핵종 분석 장비



###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사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취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68개 지자체로 확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양지수 프로그램’ 제공(2022년 9월)·‘자폐아동 영양관리 모델’ 개발(2022년 12월)로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급식관리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2022년 6만 5,000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식품 섭취 가능 안전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업계는 2,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6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공개(2022년 600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유해물질 52종의 위해수준이 어떤지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평가해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인력을 보강(2023년 3월)하고 2023년 5월 범부처 협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담배 21종의 유해성분(니코틴 등 16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2023년 3월)했습니다. 향후, 유통 중인 궤련형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DB 구축, 신종 무연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추가 마련을 통해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 직제화(2023년 2월)했고,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 및 교육홍보, 재활·치료 지원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해 마약유통재활TF를 신설(2022년 8월) 했습니다.

\* 마약사범(명) : (2013년) 9,764 → (2016년) 14,214 → (2019년) 16,044 → (2022년) 18,395  
재범률(%) : (2017년) 36.3 → (2019년) 35.6 → (2022년) 36.6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방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범부처 사범·치료·재활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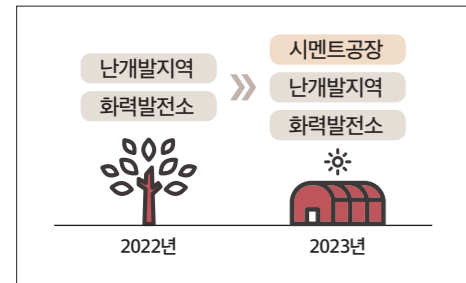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규모 배출시설 주변과 배출시설 밀집지역 2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8월에는 조사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에서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에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26개소를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공장 주변 등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진료지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17개 기업과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1,902가구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을 실시하고, 553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누적 26,69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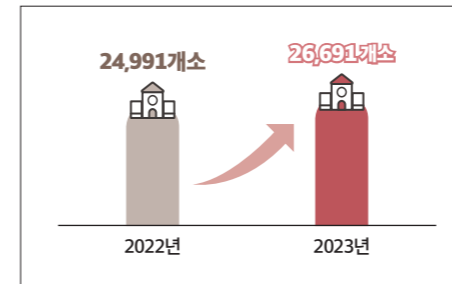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17개 지자체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건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처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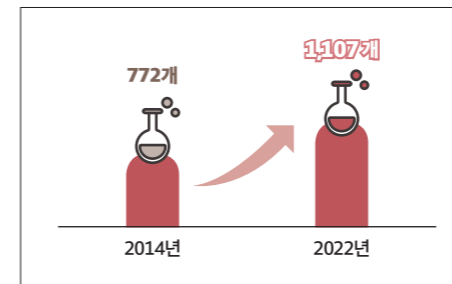
####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



####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 >



#### < 유독물질 지정건수 >



반영 방안을 공유·논의했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기술발전 사항 등을 주제로 연 6회 이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급성·만성 유해성, 액체·고체 등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했고,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등록의무 부과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국가들보다 엄격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산업계·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로 사업장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및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화학물질관리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강화 조치가 산업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통사고,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집단적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와 함께 건설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대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8.3% 감소했습니다.

속도규제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 등 보행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시간대별 교통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동시에 제고했습니다.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피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경찰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입체적인 경찰활동을

펼친 결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검거 인원\*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조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1,394명 → 1,723명(23.6%↑), 성폭력 : 5,754명 → 6,065명(5.4%↑), 가정폭력 : 7,910명 → 8,800명(11.3%↑), 데이트폭력 : 1,901명 → 2,088명(9.8%↑)

\*\* 스토킹 잠정조치 : 857건 → 1,162건(35.6%↑), 가정폭력 응급조치 2·3호(기관연계) : 9,177건 → 10,295건(12.2%↑), 가정폭력 임시조치 : 911건 → 1,046건(14.8%↑)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이 전년 대비 4.4%p 증가했고, 일상회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학교폭력 추이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증가되는 신학기 초에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검거인원이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2명으로 20.6% 증가했습니다.

###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등 요구조사 정밀위치 측정 고도화’,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등 9개의 치안 R&D 신규규제를 발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 및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동아시아 유일의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해외경찰 및 바이어 등이 참관하여 약 3,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소음·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신고 281건을 금지통고(부분금지 포함)하는 등 집회 신고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충분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검거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 상황 점검 회의(5회)를 통해 주요 항만·물류센터등 현장 주변에 경찰부대와 형사·교통경찰 등을 배치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운송보호 기동단속팀(115개팀 599명)을 운용하여 게릴라식 운송방해, 기습점거 등을 차단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위력행사,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813개 경찰부대 4만 8,780명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782명을 단속하고, 그 중 68명을 구속하는 등 498명을 송치했습니다.

##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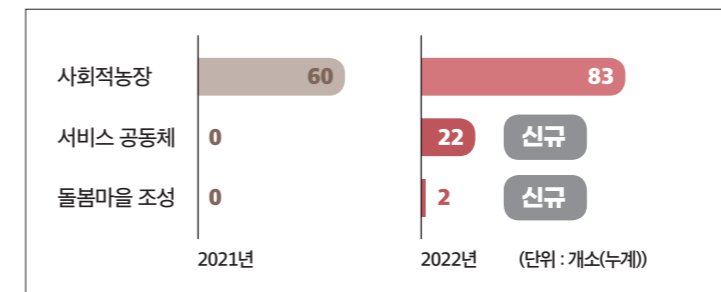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분산개발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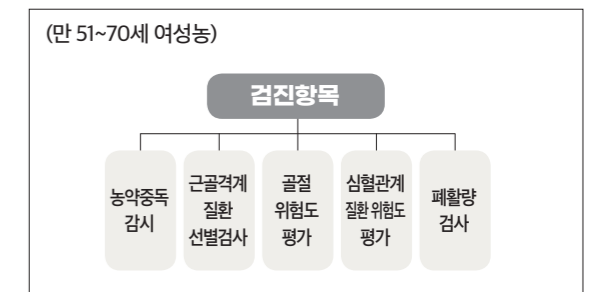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연금보험 수급액과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인상(2021년 : 1만 5,000원 → 2022년 : 1만 9,000원)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농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농촌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초 시행 >



2023년 3월 25일 1만 2,000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는 소음 측정 결과를 집회주최자·참가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LED전광판을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의 소음통제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공사 현장은 소음·진동 등으로 위험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간 규제 위주의 건설안전 제도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굴착공사 등 건설현장 32개소에 지능형(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50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후 건축물 증가, 붕괴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 업무수행 시 해체·화재·내진 등 건축안전 관련 검토에 한계가 있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사·구조기술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노후화되고 관리수준이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철도시설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점검·관리체계를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경부고속선 등 25개 주요 철도노선 중 22개 노선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46개, 소규모 침하 55개소를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긴급복구 및 이행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축, 치안 역량 강화 및 약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5개 영역을 검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2022년 7월) 농작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항목(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의 안전 보호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1만 2,045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2,219명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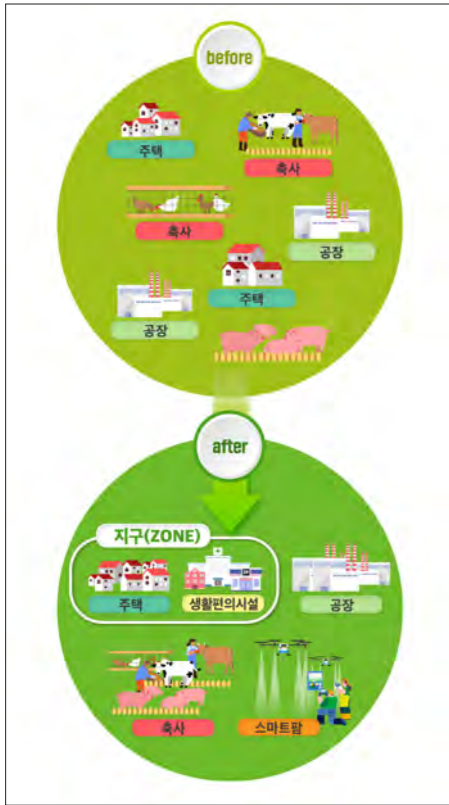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 주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기능 재생을 통합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1개소당 약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농촌협약 체결 예정인 21개 시·군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투자 분야를 다양화하고 협약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주거지역 주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철거·이전)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4개소를 지원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3월 기준 14.5배 증가한 58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지원 >



<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내화수림대 조성

2022년 2,653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022년 158천ha

####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대

산불진화 임도

2022년 3,207km

다목적 사방댐

2022년 63개

#### 산불진화자원 확충

초대형 중심 진화헬기

2022년 58대

고성능 진화차

2022년 32대

산불재난복수진화대

2022년 2,223명

#### 산불대응 역량 강화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경북) 설치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

봄철 산불조심 기간 연장

###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226만원(5.9%↑, 2021년 대비 2022년 12월기준)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로 송이 생산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기부금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그간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임가(263가구)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생계비·기부금 등으로 176억원을 최초 지원했습니다.

국민께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 하반기, 1개소) 중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노약자·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예약방식 변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확대(2021년 388개소 → 2022년 426개소)했고, 자연휴양림(2021년 186개소 → 2022년 192개소) 및 숲속야영장(2021년 27개소 → 2022년 34개소)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기존 정원에서 탈피하여 치유·예술·복지가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에 스마트가든(317개소), 실습정원(25개소), 생활밀착형 숲(107개소)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정원문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원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과 국유지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2023년에도 자녀안심그린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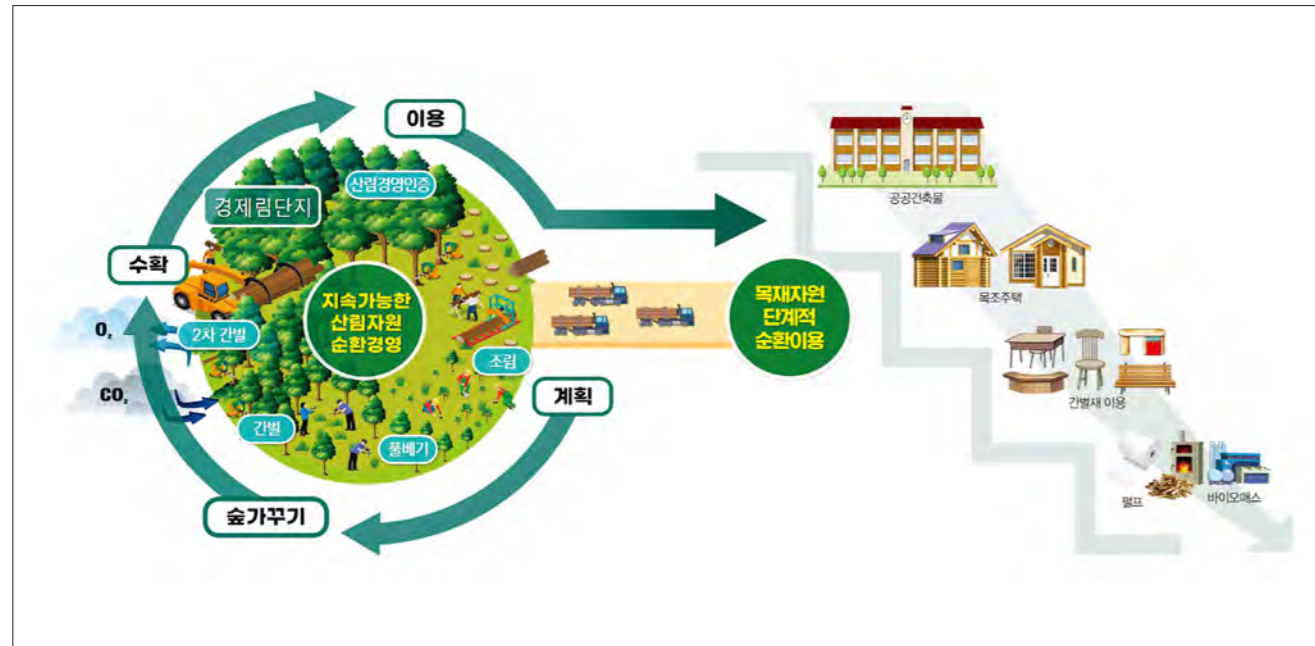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022년 11건의 대형산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부처협업과 진화자원 총동원으로 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LNG생산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2022년 10월에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마련과 초대형 산불헬기, ‘산림재난통제관실’ 확충(12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 운용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해 2022년 12월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산림 조성 및 목재의 단계적 이용 >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394단지, 202만ha)하여 단지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산림경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따라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국외감축 목표 기여를 위한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등 해외 흡수원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실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해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령화 등 농업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을 혁신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생애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고 역량있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총 누계 1만 2,600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영농창업자금 및 농지임대 지원, 영농 기술·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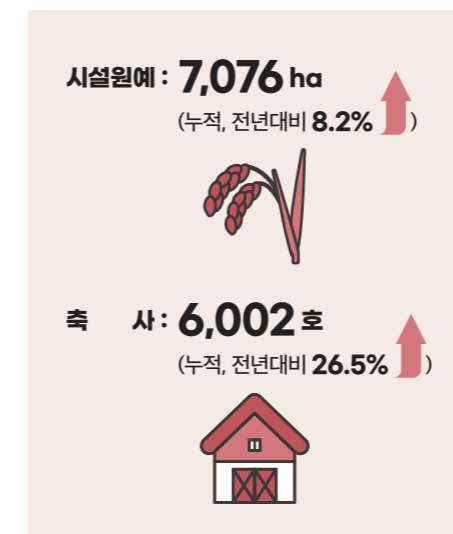
2022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2,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1,470명(73.5%), 2023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4,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3,093명(77.3%)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분야에 외부 신규인력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규창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11월에 스마트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스마트농업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2년 12월 기준) >



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완공(2022년 11월 고흥, 12월 밀양)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2022년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에 이어, 12월에는 호주 시범온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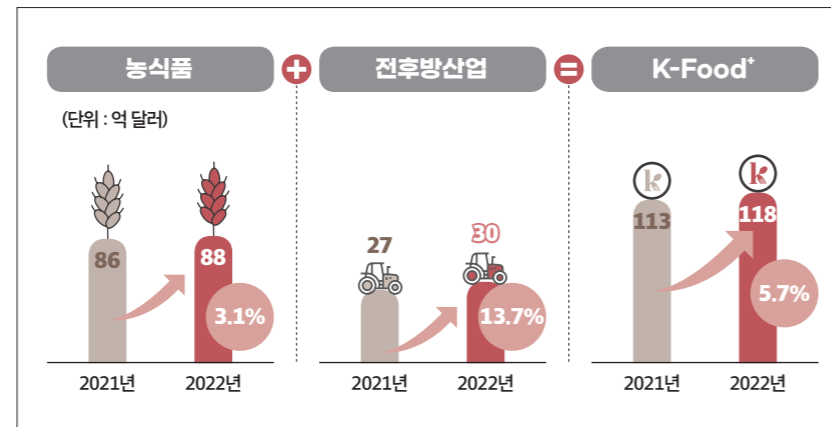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에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업무절차와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2023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했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2년 농식품 수출은 88억 2,000만 달러,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 2월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지 간 연결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 등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수탁농지를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대 정책(2022년 70억원, 1만 5,678호, 2만 5,907ha)으로 친환경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우려 지역을 확대 선정(2021년 30개소 → 2022년 33개소)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1,391호)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시설 농가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로운 축산모델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가축분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 보급(가축분 10만톤으로 바이오차 2만톤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4만 톤 감축 가능)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주요 유통사와 협의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 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8.1%(2021년 242억원 → 2022년 310억원) 확대했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 인증기준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한우부터 시범 적용(30농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먹거리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하여 온실농가의 난방·온수 비용 연간 5,000만 원 대체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000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추가 수익 향상



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설(60억원, 강원)하고,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2022년 : 137개 지자체)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 저탄소 기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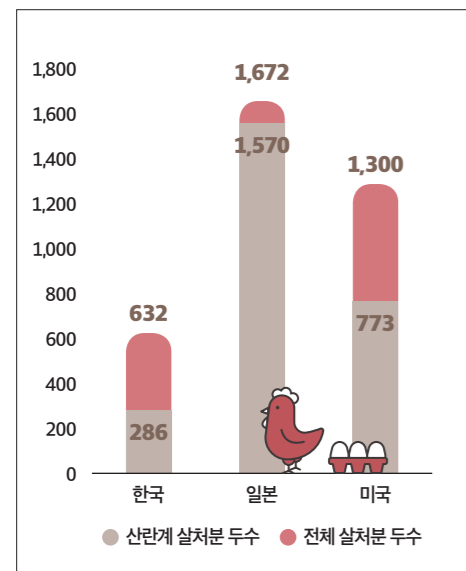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전년 대비 3.1% 확대된 2,625억원을 투자했고,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및 축산 악취 저감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림식품기술 수준이 상승(2020년 : 82.3% → 2022년 : 84.3%)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20년 : 3.1년 → 2022년 : 2.9년)했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 분야 8건이 선정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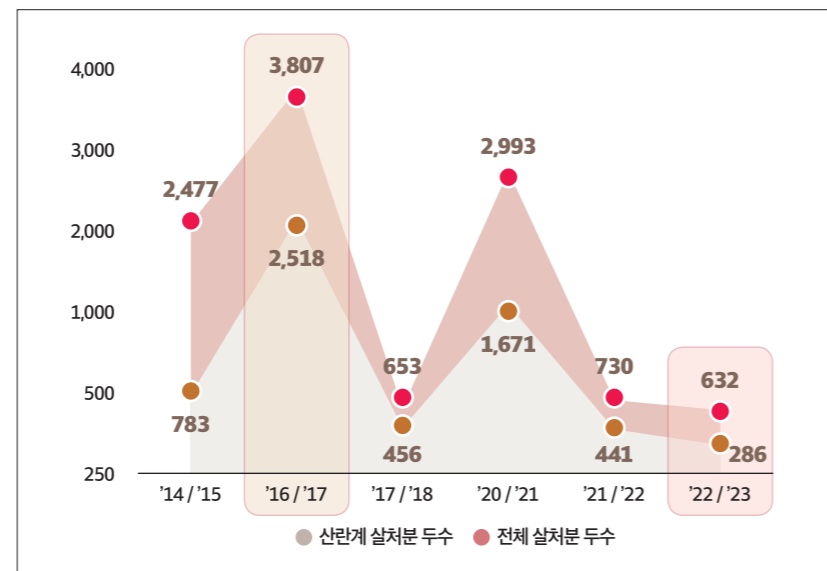
###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주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규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로 계란 가격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84%, 스페인은 71%, 일본은 6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가금 농가의 방역 노력 덕분에 전년보다 6%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단위를 세분화(기존 면·동 → 동·리)했습니다. 그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용하여 민관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의 주체적인 방역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미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인프라와 이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식량안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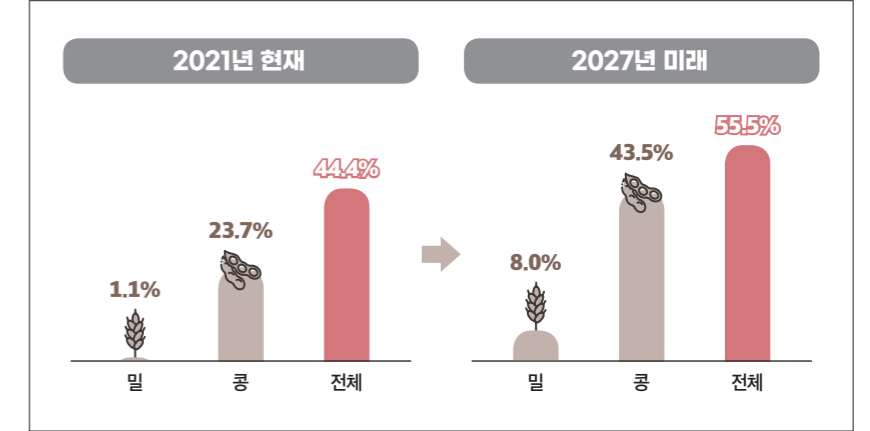
###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2,000ha 수준의 밥쌀 재배 면적을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년 6월)했습니다. 가루쌀·밀·콩 등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1,121억원)하여 전략작물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이 전년(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밀 : 2만 6,000톤 → 3만 4,000톤(잠정), 콩 : 11만 5,000톤 → 13만톤),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500억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 기초식량(쌀·밀·콩 등) 비축·생산 확대

- 쌀 공공비축 물량 : (2021년) 35만톤 → (2022년) 45만톤
- 밀 생산단지(누계) : (2021년) 39개소(5,100ha) → (2022년) 51개소(7,600ha)
- 밀 비축 : (2021년) 8,000톤 → (2022년) 1만 7,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1년) 83개소(5,000ha) → (2022년) 122개소(7,000ha)
- 콩 비축 : (2021년) 2,000톤 → (2022년) 1만 9,000톤



2022년 12월에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2년 112만 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1,943억원을 지급하여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2023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약 30만명 추가되었습니다.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2019년) 10.6% → (2022년) 25.1%
- 쌀 수령액 비중 : (2019년) 16.2% → (2022년) 27.9%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청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응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강화, 금융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3년 70개 품목)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2022년 기준 176개 항목 중 대파대·농약대 등 64개 인상, 23개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



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주요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여 158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24건(국세 12건, 지방세 12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3년 170개소), 공공형계절근로제(2022년 5개소/시범사업 → 2023년 19개소 본사업)를 확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역대 최대로 배정(약 3만 8,000명)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13일부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3년 2월)하여 2024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등을 통해 1만 8,754농가에 5년간 약 3,178억원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80만톤) 대비 50만톤 증량(130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약 1,562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공급하도록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실측조사,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 항공촬영(드론)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체계를 과학화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별 경로,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패널 조사 등을 통한 수요·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금융분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과 가격 예측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학·농협)의 의견수렴(산지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2022년 7~11월)을 통해 정부·자조금단체·지방자치단체(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산지 조직화의 주요 정책인 주산지 지정제도 개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17%)과 농가 참여(48%) 확대\*했으며, 출하조절시설 2개소를 건립 지원했습니다.

\* 2022년산 겨울배추(공급 과잉) 출하정지(80ha, 2023년 2월) 효과 :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 기준 (2023년 1월) 1,495원/포기(평년비 26.7%↓) → (2023년 3월) 2,317원/포기(평년비 18.3%↓)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였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의 약 4만 7,000저소득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59억원 더 확보했으며, 시범지역 18개 시·군·구의 약 6만 5,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품위기준과 동일하게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의 품위기준(색태·크기, 비교사진 등)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을 대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물질 분석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하고, 농약 잔류물질 분석성분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친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에게 신선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 중인 수산업과 어촌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 (1986년) 173 → (2010년) 113 → (2020년) 93 → (2022년) 89
- 2015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 농가 △7.3, 어가 △26.9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산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하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수산자원관리정책 관련 138건 중 83건(약 60%) 개선, 52건 검토 권고**  
\* 전체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수산자원관리정책 관련 과제 138건

금어기, 금지체장 개선	TAC 제도 개선	자원관리 기반조성, 어업인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어기·금지체장 관련 84건의 의견 중 48건은 개선</li> <li>TAC 참여업종 금지체장 적용 제외</li> <li>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li> <li>정확성 수산동식물의 금어기·금지체장 지자체 자율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C 제도 관련 54건의 의견 중 35건은 개선</li> <li>TAC 할당량 배분방식 및 부수어획 규정 개선</li> <li>꽃게·참홍어·붉은대게 TAC 업종·해역 확대</li> <li>선진 TAC 관리제도인 ITQ 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광역형으로 개편</li> <li>TAC 참여업종 특별감척</li> <li>수산직불제 확대</li> <li>수산자원 관리기금 신설</li> </ul>

와 어업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은 줄어들면서 수산자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5.36km<sup>2</sup>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km<sup>2</sup>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 6개소에 조성 착수했습니다.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부산과 강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수출품목 육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생산-유통-가공-창업-R&D 등 기능이 연계된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부산)와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새만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오프라인 박람회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한 31.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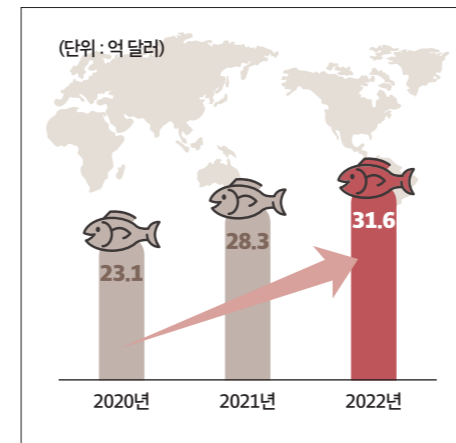
특히, 김은 2010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6.6억달러로 급성장하며 우리 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를 지정하는 등 김 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써 2027년에는 수출 45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비축예산을 확보(1,750억원, 3.2만톤)하고, 적기 비축 및 방출을 도모하여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행사를 개최(2022년 총 10회, 2,981억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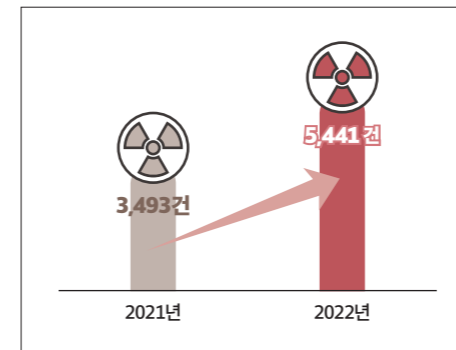
###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2022년에 목표치 4,000건을 초과한 5,441건을 실시했으며, 검사대상도 2021년 40품종에서 2022년에는 100품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목표 대비

< 수산물 수출 증가 >



< 방사능검사 건수 >



2배 이상 증가한 8,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 관련 정책 제언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리비, 우렁챙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등에 원산지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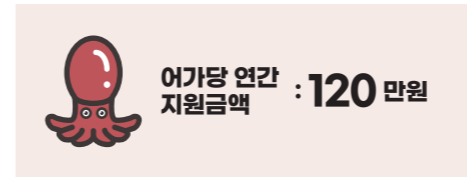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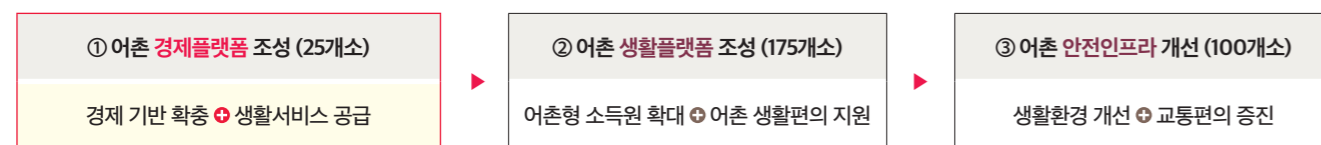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6개소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90만개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도 약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대체하여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사업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 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개소와 귀어학교 6개소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대상(2021년 206명 → 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원 → 2023년 11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16명인 귀어인을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2022년 10월 18일 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2만 8,000 어가에 4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어가당 최대 3,000만원)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2023년 기준 약 3조 4,000억원) 및 금리인하·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28일 수립했습니다. 9월에는 충청남도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도 확대하여 2022년 12월부터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소재 400점의 효능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계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했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획득하여 민간참여 유도과 관련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4개소),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7개소),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등을 통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초기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30억원의 정부출자금과 196억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496억원 규모의 신규 해양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총 3,517억원 규모, 23개 해양수산 자펀드를 통해 창업 이후 후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망기업 169개사를 발굴하여 약 2,171억원의 투자유치가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특허 등록·출원, 매출액 상승, 계약체결 등 우수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과 야외의 청정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서핑대회 등 16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썼고, 약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여 2023년 3월 외국적 크루즈선이 본격 입항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3월 2일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업을 기획하여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호텔, 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바다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